



인권교육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중로구 명륜2가 8-29 (4층) 전화 741-5363 팩스 741-5364

인권하루소식

합본 12호

1999년
1월 ~ 6월

R1.1.12



인권교육동사랑방

R1.1.12

인권하루소식

합본 12호
(1999년 1월 ~ 6월)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TA NEWS

특별, 별장부터 내뺐다
경제위기 코렁, 노동자 일방

참고 문헌

#제거하지 아시오

 인권교육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99년 2월분 총목차(1301-1317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310	2/13	1	올 '한총련 사냥' 시동 - 공안합수부, '3월말까지 탈퇴' 강요 편지발송/〈조계사 수배자들의 설쇠기〉 "차례도 올리고, 세배도 드릴 겁니다."
		2	형기만료 20일 넘게 억울한 감옥살이 - 집행유예기간 재구속, 형 확정 전 실효성 없어/국보법 전 력자 여권 발급 미뤄 - 국정원, 궁색한 답변만
1311	2/19	1	"실업대책 총체적 실패" - 김대중 1년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체벌 입법화 논란 - 국회의원 28명 입 법추진/법무부안 단호히 반대 - 국제엠네스티, 인권위 독립성 보장 촉구
		2	자유로운 호흡을 갈망하며 - 목포결핵병원 환자들의 투쟁 1년
1312	2/20	1	인권단체들 분노 고조 - 인권위 문제 타협기류 국민회의 규탄/탈북주민 손배소송 제기 - 옛 안기 부 인권유린 피해 관련
		2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보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 보안법 (권오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동의장)
1313	2/23	1	준법서약 고집, 43명 그쳐 -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특별사면/2·25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
		2	4천만 우뚝한 '김대중 대통령, 국민과의 TV대화' - 각본 따른 연출...민감한 현안 배제/국제엠네스 티 "한국 캠페인 예정대로" - 국보법·노동권·인권위 문제 초점/주간인권흐름(2월 8일-2월 21일)
		3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보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 20을 위한 80의 희생 (이종 회 사회진보를 위한 연대 사무처장)
1314	2/24	1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담'/사면 발표하던 날에도 - 청년진보당 위원장 국보법 위반 혐의 연행
		2	'왕따현상' 왜? 어떻게? - 전교조 주최 토론회, '왕따' 해결방안 모색/영남위 이은미씨 옥중투병 - 중증디스크, 수술비 마련 애로/김대중 집권 1년, 인권도 개혁도 없었다 - 범국본 소속 52개 단체 공동선언
		3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보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 시능에 머문 인권보장 (최정화 민주주 의법학연구회)
1315	2/25	1	인권위 논란, 새 국면으로 - 김 대통령 "법무부안 채용 안해"/국가보안법 홈페이지 개설/〈만화사랑 방〉 IMF 대통령 1주년, 서민 1주년
		2	끝내 열리지 않은 국방부 정문 - 군 의문사 가족들, 국방부 앞 추모행사/양심수 260여명 남아/주 요 미석방 양심수
		3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보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 기관 (조광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장)
1316	2/26	1	'생존권 투쟁 탄압' 선전포고 - 검찰 등,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입학 첫날부터 '검문' 홍역 - 서강대 입학식장 마구잡이 검문
		2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보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 총평 및 자유권 영역
		3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보다 ⑥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1317	2/27	1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인권단체, 정부 등 비판/점령당한 박상천 의원실-수가협, '수배해제' 농성 돌입/행사와 동정
		2·3	99년 2월분 총목차(1301-1317호)

인권하루소식

99년 3월

(제1318호 - 제1338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전.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3월 3일(수)

제 131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승리한 양심’ 기자회견

강용주 씨 등 2·25 석방 양심수들

사상전향을 거부하며 지나간 세월의 옥고를 감수했던 강용주(85년 구미유 학생 사건으로 구속) 씨가 지난 2월 25일 석방된 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다.

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2·25 석방 양심수 기자회견'에서 강용주 씨는 "한 인간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는 온 국민의 힘이 필요했던 것 같다"며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발언을 열었다.

강 씨는 "스스로 '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종이 한 장 안 쓰고 갇혀 지내느냐고 수도 없이 자문해 봤지만, 그때마다 '인간은 결코 폭력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 씨에게도 견디기 힘든 시기가 있었다. 86년 11월 대전교도소에서 중병을 앓고 있던 최주백 씨가 전향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해 숨지는 것을 목격했을 때 "무섭고 두려워서 전향서를 써주고 싶었다"고 강 씨는 회고했다. 하지만, 자신보다도 10-20년 이상 장기복역중인 비전향장기수들이 곳곳이 전향을 거부하는 모습은 강 씨에게는 '양심'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도입된 준법서약제 역시 강 씨의 '양심의 법정'에서는 유죄였다. 강 씨는 "준법서약은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을 빌 폭력에 불과하다"며 "전향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준법서약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14년의 세월을 '양심'의 소리에 따라 견뎌온 강용주 씨의 석방은 "당연한 일이 당연하게 이뤄진 것"일 뿐이었다. 이는 또 폭력도 어찌지 못한 양심의 승리

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용각(41년 구금) 씨는 "아무리 배우고 지성있는 인간이라도 동물적으로 취급받으면 동물

이 되고 말더라"며 감옥 내에서 고문과 학대, 멸시를 받아온 사실을 밝혔다.

우 씨를 비롯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전향장기수들은 "류락진, 이화춘, 손성모, 신광수 씨와 청년학생, 노동자 등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준법서약 때문에 나오지 못하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히며, "차라리 늙고 병든 우리보다 젊은 우리 일꾼들이 석방돼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털어냈다.

<기자 수첩> 비전향장기수 석방

조선일보의 '빛나간 신념'

"...최장기수 우용각. 그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다. ...그 긴 세월 동안에도 '혁명'에 대한 그의 신념이 바뀌었다는 흔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6일자 조선일보 '만물상'의 한 대목이다. 하지만 조선일보를 읽는 우리의 심정은 더 착잡하다. 수십년 간의 냉전반공 이데올로기에서 한 치도 헤어나지 못한 조선일보 식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이날 '만물상'에서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우용각 씨의 말에 대해, "투철한 공산주의의 교범을 떠올리게 한다"며 "준법서약서도 생각한 채 그를 풀어준 편법주의가 자유민주 법질서보다 상위개념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인간의 사상이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십년 간 0.75명 독방에 가둬두는 것은 과연 자유민주 법질서에 부합하는 것인지.

2월 25일 비전향장기수들의 석방을 앞두고 조선일보는 두 차례의 사실을 통해 이를 극구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지난 2월 1일과 24일자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그 동안 많은 반국가사범들이 '전향서'를 쓰거나 아니면 행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준법서약서를 쓰고 석방되었는데 비해 이들(장기수)은 그것 자체를 거부한 사람들"이라며 전향과 준법서약 없는 석방을 거듭 만류하고 나선 것이다. 그나마 뒤늦은 조치로서, 아니 자유민주 법질서 아래서라면 당연한 조치로서 환영받고 있는 비전향장기수의 석방이 조선일보에겐 "그래선 안될 일"이었을 뿐이다.

비전향장기수의 석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반세기 동안 군사정권과 독재권력 앞에서 아침과 충성을 다짐하곤 했던 조선일보가 과연 '자유민주 법질서' 운운하며 그들(장기수)을 매도할 자격이 있는지. 그들이 숭상하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주자 가운데 볼테르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탄압을 받는다면 나는 당신 편에서 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신과 다른 사상을 가진 사람을 오로지 '적'으로만 파악하는 조선일보가 새삼 귀기울여 할 대목이 아닌가 싶다.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2월 26일 연세대학교 신경상관에서는 "김대중 정권 1년 자본을 위한 개혁을 비판한다. -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내용 중 그 일부를 발췌해 실는다. - 편집자 주

<총론>

김세균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김대중 정권이 행한 그간의 개혁은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위기해결이란 축적위로부터 자본을 구하기 위해 사회전체의 희생을 요구하고 또 이로 인해 위기부담을 최종적으로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는 정책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① 경제개혁

그간의 경제개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자본가의 해계모니적 지배체제를 재 구축하고 한국 경제가 지구화된 자본축적 운동에 걸맞은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전환을 위해 정권은 5대재벌로의 자본의 더 많은 집중과 집적 및 외국자본의 한국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의 강화를 허용해왔고, 노동자-민중의 생존의 위기가 악화되고 삶이 파탄하는 것을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② 대 노동정책

김대중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온통 짓밟고 있는 가운데 사회구성원 모두가 시장 경쟁의 논리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개혁정책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 자본의 운동은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직된 노동자를 '부드럽게 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자계급을 정규직, 비정규직, 고용노동자와 실업노동자 및 조직노동자와 미조직노동자 등으로 분할시키고 있으며 이들을 오직 경쟁의 매개로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 정권의 대노동정책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노-사-정간의 사회적 합의의 형식을 빌려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조합주의적 이해와 관계되는 몇 가지 양보를 미끼로 노조 상층간부를 포섭해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불만과 저항을 무마하고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다.

③ 사회과파 경향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위기해결책은 한국사회에서 대량실업의 발생과 소득불평등의 심화 및 자살률과 범죄율의 급증, 가정과괴현상의 확대 등으로 나타나고있다. 이러한 사회적 관계의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개편은 소득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고 대다수 국민들의 빈곤화를 촉진시켜 사회과파 현상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과파는 절차적-형식적 민주주의가 앞으로 더욱 진전된다 할지라도,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훼손 및 허구화와 공동화'를 초래하고, 한국사회에 '총체적인 사회적 위기'를 확대-심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④ 대북정책

정부의 햇볕정책 등 대북정책은 그간의 강압적 대결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긍정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남북간의 진정한 평화공존과 동반자적 관계의 형성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신자유주의적-시장주의적 내정개혁의 논리를 대북 정책에도 적용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점은 정부가 정주영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대북 관계의 개선의 발판으로 삼고 있고, 민간자본의 대북진출을 대폭 허용하면서도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결구조의 청산 등을 위한 어떠한 진지한 제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에서 드러나고 있다.

⑤ 정치지형의 변화시도

김대중 정권은 과거의 '민주대 반 주'

의 정치적 대립구도를 해체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면서 수구보수세력과 개혁적 자유부르주아세력들을 포괄하는 신자유주의적 지배블록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시민운동세력을 적극 포섭하고 있다.

<영역별 평가>

1. 여성영역

정양희 (서울여성노동조합 위원장) 김대중 정부 1년은 여성노동문제의 심화와 여성노동자권리의 후퇴로 점철되어 작년 한국의 여성권한척도는 세계 1천2개국 중 83위로 97년 73위보다 추락했다.

IMF하에서 여성은 우선해고대상으로 상용고의 경우 19.25% 감소하는 등(남성 상용고의 경우 6.8%) 실직여성이 97년보다 342% 증가했으며 이들은 절대빈곤상태에 놓여졌다. 여성의 67.1%가 임시직, 일용직 근로를, 78.3%가 시간제 근로를 한다. 금융권의 경우 파르타이머나 임시직 여성비율이 95.8%-100%, 백화점, 병원 등은 거의 80%이상이다. 퇴직하지 않는 여성들은 비정규직 전환을 강요당하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되어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모성보호의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했다.

여성노동자의 71.7%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대부분이 퇴직금, 연·월차휴가, 연장·야간근로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은 62.5:100이다. IMF이후 여직원 청소 일정표를 작성해 놓은 곳도 있다.

출산시 의료비용과 임금지급 등 모성보호의 사회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장내 성폭력도 규모가 적은 사업장일수록 빈발하고 구제가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조직률은 5.6%로 문제해결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②

2. 교육영역

조희주 (21세기 진보교육연구소장)

김대중 정권 이후 구조조정을 빌미로 신자유주의 교육이 급격히 전면화됐다. 교육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교육재정의 축소, 교육환경의 악화, 정년단축을 필두로 성과급제, 계약직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의 자본종속화를 이루어 교육노동의 '참여성'과 '자율성'을 철저히 제한당하고 요구되는 업무만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노동의 '유연성'에 한정되어졌다. 교사들은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 됐으며,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구호 속에서 교육은 점점 더 폐쇄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민중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적 원리를 후퇴시키고 교육을 시장논리화 함으로써 그 본질마저 훼손시켜 나가고 있다.

3. 도시빈민 영역

이영남 (전국노점상연합 의장)

현 노점상은 IMF형 노점상으로 실업문제와 연계한 노점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노점상화정책' 등을 선전하며 대시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엄중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단속과정에서 총계가 중화상을 입었으며 올해 1월에는 임신부가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작년 한해 단속건수는 제작년에 비해 178%나 증가했다. 또한 선별단속을 통한 노점상의 개별화, 상인 및 주민과의 마찰 유도를 통한 노점상 고립화 여론작업을 벌였다. 노점상연합에 대한 탄압도 지속돼 전국노점상연합 의장단 및 집행부 5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김대중 정권은 개발지역 내 '임대주택의무비율제 폐지' 및 '분양가 자율화'등을 통해 주거불안정을 더욱 가속화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토지·주택문제를 야기시켰다. 대표적으로 작년 4월 용산구 도원동에 공권력 1만

명과 철거용역 3천여 명을 투입해 강제철거를 자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 백석호씨 등 2명은 전신골절 및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또한 2월에는 안양시 유진상가에 대한 불법철거를 진행, 주민 4명을 구속했다.

4. 보건의료 영역

강동진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대표)

김대중 정부는 보건의료개혁의 원칙을 민주적 시장경제로 삼고 국가가 책임의 복지를 방지하는 한편, 자본의 발전을 위한 축적 조건을 창출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의 효율성 제고를 주장,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을 감행했다. 구체적인 예로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과 국립대학병원 효율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수익성'에만 관심을 두고 있으며 병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금삭감과 인원감축, 노동강도 강화, 임시직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력 감축은 의료서비스와 질을 떨어뜨리고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의 서비스 격차를 증가시켜 의료제도의 형평성을 더욱 훼손시킬 것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는 수익성 보장을 위한 서비스 가격의 인상이나 비보험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이어져 저소득계층의 건강수준을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노동부는 작년 노동부의 산업보건과를 폐지하고 산업안전 감독관을 20% 줄여 산재사고를 유발시켰다. 또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산재환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치료를 제한해, 많은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강제퇴원당했고 걸을 수 없는 상태의 노동자가 통원치료 명령을 받기도 했다. 98년 발표된 진폐 요양 개선안은 진폐 요양비의 10% 이상 감소를 선언해 노동력으로 재생될 가치가 없는 이들을 죽여가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을 샀다.

5. 인권 영역

박래균 (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민족민주열사사와 의문사 관련한 특별법제정은 여야의 정쟁으로 뒷전으로 밀려났으며, 국가인권위설립도 법무부의 이해에 막혀 난항을 겪고 있다. 양심수 석방은 지난 3·13에는 478명 중 74명, 8·15에는 455명중 94명을 석방하는데 그쳤으며, 8·15때에는 사상 전향제 대신 내심의 자유를 침해한 '준법서약서'를 도입했다. 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국가보안법을 강력히 적용, 98년 679명의 양심수 중 55%가 국가보안법위반혐의다. 법원 역시 각종 사건의 재판에서 검찰 손을어주기를 일삼아 국가보안법을 남용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계속됐다. 또한 보안관찰도 강화됐다. 거대감시·억압체제도 존속돼 인권침해가 발생해, 불심검문은 국가가 국민들을 늘 처벌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켰다. 98년 전화감청 건수는 97년보다 10.6% 증가했다. 무분별한 총기사용으로 사상자가 증가했으며 8월달 동안 51건의 총기사건이 발생했다.

중산층과 서민층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후퇴현상이 매우 심각해졌다. 저성장-고실업의 구조의 정착으로 실업률은 98년 3/4분기에 7.4%에 달했고 소득은 14.9%-5.5%까지 하락했다. 노동자가 새 사회문제로 대두됐고 IMF형 자살자와 이혼율이 급증하는 등 가정의 파괴 현상이 두드러졌다. 80%가 넘는 사업장에서 임금동결 및 삭감, 임금체불이 강요된 반면 노동강도는 강화됐다. 구속·수배 노동자가 5백여 명에 달했고, 아남산업이나 만도기계 등에 경찰력이 투입돼 합법적인 노동자의 파업권마저 유린당했다. 양지마을, 부앤나 예육원, 동암제철원, 구생원 등 사회복지시설 내의 인권유린과 비리문제도 계속 사회문제로 떠올랐지만 인권유린 구조를 파헤치지 못한 채 방치됐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3월 4일(목)

제 131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세계평화 역행하는 한국정부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회피

세계평화와 인도주의의 상징인 대인지뢰금지협약이 지난 1일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인류의 평화라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대인지뢰금지협약을 만든 바 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제조, 이전의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으로 현재 133개국 서명하고 65개국 이를 비준했다. 이 조약에 가입하게 되면 당사국들은 협약 발효 후 4년 동안 비축된 지뢰를 폐기하고 10년 안에 매설된 모든 지뢰를 폐기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대인지뢰는 북한에 남침을 막기 위한 것으로 비무장지대에만 매설돼 민간인의 피해는 없다"며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을 지금껏 회피해왔다.

이와 관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김창수 씨는 "유실된 대인지뢰로 인해 경기도 남한산성, 부산 중리산, 포항 봉화산 등에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80년 이후 유실된 대인지뢰 1천4백여 발 중 90%인 1천2백여 발이 아직 수거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민간인들의 피해는 더욱 증가될 추세"라고 밝혔다. 김 씨는 또 "대인지뢰는 군사적 효용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적으로 대인지뢰 매설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정부는 지난달 25일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비인도적 재래식 무기협약'은 대인지뢰의 사용을 부분적으로만 제한하는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대인지뢰금지협약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국내외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등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쳐지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대인지뢰금지협약의 가입 △영구적인 대인지뢰 수출과 생산금지 △대인지뢰 실태조사와 피해자 지원 등을 촉구했다.

미북직 해직교사 194명

교육부, 이 핑계 저 핑계 외면

교육부가 미북직 해직교사들의 복지문제를 등한시함으로써 많은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전교조 해직교사 복지조치에서 제외된 해직교사들은 현재 1백94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전교조가 결성되기 전 교육운동과 관련해 해직된 '전교조 관련 교사'가 26명, 오송화, 남민전 등 시국사건 관련자가 24명,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자가 70명, 학생운동 전적으로 인해 보안심사에서 탈락한 임용제외자가 75명이다. 이들 중 길게는 20년 이상을 복직을 기다려온 사람들도 있다.

이와 관련,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7월 미북직 교사들의 복직을

3월까지로는 완결시켰다고 약속한 바 있고 전교조 역시 지난 1월부터 미북직자들의 복지문제를 해당 부서에 꾸준히 종용해 왔다. 그러나 교육부는 또 다시 복지문제를 9월 이후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힘으로 교사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 결성 이전 교육운동으로 해직된 교사들에 대한 소위 '전교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복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시국사건 관련자에 대한 이미 사면복권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협의사항이라는 이유로 발뺌하고 있다. 또한 사회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도 임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학재단에서 복직을 거부하고 있다며 책임을 미룬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개혁국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시절 잘못된 권력과 판단에 의해 좌절되고 희생된 해직교사들의 복직은 올바른 교육적 주장과 활동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당연하고도 마땅한 일"이라며 해직교사의 전원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19일부터 농성과 집회를 거듭하며 해직교사 전원 복직을 촉구하고 있는 전교조는 3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에서 "복직 약속에 대한 실무적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일이 유아무야 되 기만 바라고 있다"며 교육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날 집회에서 한 해직교사는 "학교에 있다면 3교시 수업시간이다. 우리는 비록 아이들의 교육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학교만큼 중요한 교육 현장에서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거짓을 일삼는 교육부 관료들을 꾸짖고 가르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구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공동기자회견

· 때: 3월 4일(목) 오전 10시 / 곳: 조계사 대웅전

<연재>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① 백석호(도원동 철거사태 피해자)

서울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608호실.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도원동 재개발현장에서 원인 모를 화염에 휩싸여 전신 3도의 중화상을 입었던 백석호(29) 씨는 지금도 화상의 후유증과 싸우며 힘겹게 병실을 지키고 있다. 그에게 '마른하늘의 날벼락'이 떨어진 것은 98년 3월 30일 새벽. 당시 백석호 씨가 피해를 입은 도원동 재개발현장에서는 도원동 세입자들이 철거강제에 의해 외부와 고립된 채 힘겹게 철거반대 농성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철거민 지원 나섰다가...

청량1동 철거민이었던 백 씨는 도원동 주민들이 고립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3월 29일 밤 도원동 재개발지구의 동정을 살펴보기 위해 홀로 재개발현장을 찾았다. 그리고 새벽 1시경, 때마침 고립된 주민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에 도착한 철거민연합 소속 회원들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재개발현장 내 농성현장으로 진입하기로 했다. 백 씨는 "같은 철거민 입장에서 나 몰라라 할 수 없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대열 후미에서 마대자루를 짊어지고 농성현장으로 향하던 백 씨는 불현듯 "너무 경솔하게 행동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으로 되돌아섰지만, 그 순간 어디선가 날라 온 돌에 맞아 쓰러진 뒤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곧이어

등줄기가 '확' 돌아오르는 것을 느낀 그는 전신 3도의 중화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그날 새벽, 백 씨와 함께 농성현장으로 진입하던 철거민 가운데 이범휘(61) 씨는 철거강제들에게 붙잡혀 집단폭행을 당했고, 그로 인해 전신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백 씨가 입은 화상은 당시 철거민들이 방여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화염방사기(농약분무기를 개조한 것)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누가 화염방사기를 백 씨에게 사용했는지는 지금까지도 의혹으로 남아 있다. 사건 발생 이후 줄곧 백 씨를 간병해 온 신중식(청량1동 주민) 씨는 "평소 악랄한 철거강제들의 소행과 이범휘 씨를 그 지경으로 폭행한 점들에 비춰볼 때 백석호 씨 사건도 철거강제들의 소행임을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부서진 청춘, 꺾인 희망

이번 사건으로 백 씨는 좌·우측 손가락을 각각 세 개씩 잃었다. 또 상반신과 양쪽 팔, 우측 얼굴과 머리를 뒤덮고 있는 화상흉터는 수술을 받더라도 완치되기 어려운 상태다.

지금 백 씨는 화상에 뒤따르는 가려움증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영원히 노동이나 운동을 하며 살아가기 힘들다는 점이다. 들이마신 화기 때문에 폐가 오그라들었고,

그에 따라 발생한 기관지염증 때문에 백 씨는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1백미터 달리기를 한 사람처럼 숨이 가빠온다고 한다. 이러한 상태는 약물로도 치유되지 못한다고 하며, 이제 그에게 '희망'이라는 단어가 점차 낯설어지고 있다.

백 씨의 아픔 가운데 또 하나는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없는 처지. 그의 어머니(75)는 아직 막내아들의 입원사실조차 모르고 있다. 어머니가 충격을 받을까 염려돼 사실을 알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끔씩 어머니께 전화로 안부를 전한다는 백 씨는 "이번 명절 때도 어머니께 명동성당 농성에 들어갔다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우려되는 제2, 제3의 백석호

도원동 재개발지구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뤄진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백석호 씨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했다. 도원동 철거민들의 처지도 달라진 게 없다. 지난해 4월 24일 경찰과 용역회사 직원들에 의해 농성현장에서 끌려나온 철거민들은 새 봄을 맞는 지금까지도 용산구청 앞에서의 천막농성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백석호 씨는 "나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제2, 제3의 백석호 씨가 나타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IMF시대라는 최악의 경제여건 속에서도 개발의 미명아래 강제철거는 계속되고 있고, 그에 따라 도시민들의 저항과 탄압의 악순환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철거강제, 취재기자 폭행들의

서울 아현동 재개발지구

철거용역회사 직원들이 재개발지구에서 또 한차례 폭력을 휘둘러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오후 1시 30분경 서울 서대문구 아현1동 재개발지구에서 이 지역 철거용역을 맡고 있는 (주)입산 직원들이 철거민연합 소속 회원들과 취재중이던

방송사 PD를 폭행해 부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은 아현동 재개발지구 세입자들에 대한 교육용 홍보물을 나눠주던 중이었으며, 이에 대해 용역회사 직원 20여 명이 홍보물 배포를 제지하며 폭력을 행사했다. 이날 현장에는 철거민들의 삶을 취재중이던 SBS '추적 사건과 사람들' 제작팀이 동행하고 있었으며, 취재팀의 고 아무개 PD도 용역직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과정에서 카메라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날 폭행을 당한 철거민 가운데 이희재(36·청량1동 주민) 씨는 인근 서울울직심자병원으로 후송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전국철거민연합측은 "입산 직원들은 지난해 중립동 재개발지구에서도 유사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히며, 이날 폭행을 행사한 (주)입산 직원들을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3월 5일(금)

제 132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공식 실업자가 176만 명, 결식아동이 20만에 육박하는 등 은 국민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빈곤층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관료들이 법 제정을 가로막고 나섬에 따라 법안은 국회에서 낫잠을 자고 있으며, 이에 시민사회계가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연대기구를 구성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28개 종교·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 준비위원회를 결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 65세 이

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신부 등으로 제한돼오던 생활보호대상자를 '소득이 최저생계 못 미치는 저소득층'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통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고 사회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사회적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배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한시도 늦출 수 없는 과제라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노동부와 기획예산위원회의 반발 때문에 지금까지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 관료들은 "이 법안이 제정

되면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저하되고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며 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4일 결성된 연대회의측은 "법 제정 시 추가되는 예산은 약 1조2천억 원으로 이는 99년 종합실업대책 예산인 12조원의 10%에 불과한 것"이라며 "정부는 추가예산을 충분히 지출할 능력이 있다"고 정부측 주장을 반박했다. 또 "근로능력이 있는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급여제한 가능성을 법안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올 상반기 내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재야인사들, 수배해제 요청

법무부 "수배자 선별구속" 방침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 김상근 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대표 등 재야단체 대표자 10명은 4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구 정권 시절 정치수배자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수배 해제는 김 대통령의 지시사항이자 집권 여당의 당론이었다"며 "구 정권하의 정치수배자 전원에게 대해 불구속 수사와 기소유에 처분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또 홍근수 목사(민권공대위 공동대표)는 "법무부와 검찰이 도덕적으로 올바른 대통령의 의견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항명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상천 법무부장관의 해임추구운동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월 25일 사면에서 정치수배 해제 문제를 배제시켰던 법무부는 "수배자가 자수해도 선별구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연재>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②

'푸른학교'의 아이들

6학년이 된 재숙이와 다정(성남 대원초등학교)에게는 며칠 전부터 방과 후 '푸른학교' 선생님과 함께 복덕방과 교회 등을 돌아다니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두 아이들이 다녀온 '상대원 푸른학교'는 지난 2월 5일까지 상대원3동 복지회관 지하작업장을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1백50여 명의 아이들이 5명의 선생님과 함께 방과후에 공부하고 저녁도 함께 먹는, 왈카지컬 즐거운 곳이었다. 그러나 2월 5일 재숙이와 다정의 신나는 공동체는 차가운 겨울 바람 속으로 내몰리고 말았다. 복지회관 측이 철거 인부들까지 동원해서 책상과 집기를 들어내고 공부방을 폐쇄해버렸기 때문이다. 선생님들과 함께 작은 발판 동동 구르던 두 아이는 끝내 동생들과 함께 울음을 터트렸지만 소용이 없었다.

발품파는 재숙이와 다정

그후 1-3학년은 노조사무실을 빌려 수업을 계속하고 있지만 4-6학년은 마땅한 공간을 구할 때까지 임시방편에 들어갔다. 선생님 집을 전전하면서 이어지던 수업마저 중단되자 이제는 푸른학교 되찾기를 어른들에게만 기대할

수 없었던지 재숙이와 다정은 선생님들과 함께 고달픈 발품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빈곤가정 아이들의 공동체

푸른학교는 다정(성남 대원초등학교)과 재숙(이천초등학교) 실직 가정의 자녀와 부모들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다. 학교 운영자들은 IMF형 결손·빈곤 가정 아이들이 보이는 소극성, 거친 행동, 비행 등이 푸른학교의 공동체 교육을 통해 사라지고 있다고 전한다. 마치 제대로 갸니를 챙기지 못했던 아이들의 불에 삶이 오르는 변화처럼... 푸른학교가 아니라면 거리를 헤매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푸른학교는 메아타서는 안 되는 안전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이곳 아이들에 대한 돌팔매는 공부방 퇴출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월 11일 성남남부경찰서는 대원, 중원 초등학교 등에 푸른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명단제출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교사들이 푸른학교 학생들을 불러내 "거지들이 다니는 학교" "푸른학교는 나쁜 곳이다"라는 상식 이하의 말을 내뱉었던 것이다.

이에 분노한 푸른학교 측과 학부모들

은 관련자 문책과 공개 사과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한편으로는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준비 중이다. "나쁜 어른들을 혼내주기 위해서"라며 많은 사람들이 서명하도록 해달라고 재숙이와 다정은 각별히 부탁한다.

동심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

'고용안정과 실업자문제 해결을 위한 경기동부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푸른학교는 상대원푸른학교를 비롯해 성남시에만 모두 7개가 있다. 7개의 푸른학교에서 7백여 명의 실직·저소득 가정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아이들 급식비는 실업극복국민운동본부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지만 공부방 장소를 구하고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은 각각의 푸른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공부방을 구하려 다닐 때 어떤 아저씨들은 이야기도 듣지 않고 우리들을 나가라고 해요. 어떤 교회에서도요. 그럴 땐 어른들도 착한 일 좀 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리들은 푸른학교가 좋아요. 빨리 복지회관으로 돌아가고 푸른학교가 계속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다정(성남 대원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다시 복지회관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 갈 곳이 없어 서가 아니라 그것만이 상처받은 어린 동심들이 치유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노동자 탄압 점차 노골화

이천전기 노동자 농성장서 연행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에 대해 공안대책 차원에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이미 발표된 가운데,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압박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다.

정부는 4일 새벽 5시경 고용보장국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8개월 제 회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해온 이천전기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경찰력을 투입, 노조위원장 신종식 씨를 인천동부경찰서로 연행했다. 또 같은 시각

조합원 장용준 씨를 자택에서 연행했으며, 조합원 김성환 씨를 연행하려다 실패했다.

삼성그룹 계열사였던 이천전기는 퇴출기업으로 선정돼, 지난해 12월 일진그룹으로 양도됐다. 그러나 일진그룹이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거부함에 따라 1천여 명의 노동자가 부당한 명예퇴직과 사직을 강요당했고, 이에 대해 노조 조합원들은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회사는 농성을 벌여온 노조원들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이를 빌미로 신종식 위원장 등을 연행한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정상가동 되기 위해서는 4백명의 노동자가 필요하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32명의 노동자들에게조차 선별 채용 임정을 고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있다"고 회사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또한 "노조 임시총회를 하루 앞두고 노조위원장과 조합원을 연행한 것은 회사가 경찰력을 등에 업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기아자동차 노조간부 14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데 이어, 최근 선출된 금속연맹 중앙 간부들에 대해서도 소환장을 발부해 놓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전.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nterpia.net/~rights

1999년 3월 6일(토)

제 132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정부, 노동자 강경대응 드라이브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

노동자들에 대한 정부의 대응양상이 탄압일변도로 치닫고 있다.

5일 오전 고건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서울시청을 방문한 석치순 노조위원장 등 서울지하철 노조 조합원 45명은 면담요청을 거부당한 뒤 현장에서 전원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된 노동자들은 노랑진, 서초, 동대문, 관악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분산수용돼 조사를 받았으며, 석 위원장 등 일부는 제외하곤 이날 중으로 훈방조치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실상 민주노총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노동운동에 대한 전면적 탄압에 나선 것"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공안대책협의회 구성방침 발표, 기아자동차 노조간부 1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이천전기 노동자 연행 등 일련의 공안대응을 보여왔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은 올 3-4월로 예상되는 노동자들의 대규모투쟁을 사전에 저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공원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 당국이

행사와 동정

- '세계화에 반대하는 동남아 여성노동자 캠페인단' 한국방문 기자회견
 - 때: 3월 8일 (월) 오후 3시-4시
 - 곳: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회의실 (종로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306호)
-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한 간담회
 - 때: 3월 8일 (월) 오후 6시
 - 곳: 사회진보연대 사무실 (용산구 갈월동/문의: 02-774-8774)

금속연맹 지도부 6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시 금속연맹 산하 5천여 명의 노동자들은 '정리하고 반대와 고용안정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서울역까지 평화행진을 벌였다. 그러나, 당국은 수천 명에 달하는 군중에게 좁은 지하도로 행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들의 반발을 유도했고, 이를 빌미로 금속연맹 간부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대화와 교섭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시성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여론으로부터 노동조합을 고립시켜 강경 탄압하겠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최근 공안세력에 의해 진행되는 강경탄압은 김대중 정권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방지 목적...실효성 여부 관심

경찰이 스스로 경찰관의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심의하는 인권보장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전북지방경찰청(경찰청장 김용백)은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 피해자를 구제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산하에 인권보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권보장위원회는 사회단체장 1인, 교수 2인, 변호사 1인 등 민간위원 4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전북경찰청 차장이 위원장으로, 경무과장, 수사과장, 치안행정지원위원장과 경무계장이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북경찰청은 5일, 전북지역 각 경찰서의 경무과장 등 16명을 인권보장관으로, 감찰계장 등 20명을 인권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인권보장관은 경무·방법·수사·교통 4개 분야에서 △총기남용방지 교양여부 △불심검문, 임의동행시 적법절차 준수여부 △긴급체포 및 영장신청 적법절차 준수여부, 가혹행위 여부 △음주운전 예고단속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러한 전북경찰청의 조치는 경찰이 내부로부터 인권의식 고취와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인권보장위원회가 실질적인 인권보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로 남아 있다. 전북경찰청이 밝힌 인권보장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르면, 위원회는 '인권침해 신고를 심의·의결 후, 해당기관에 시정조치와 징계위 회부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한으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위원회의 개최시기를 △지방청장 요구 시 △위원장 직권 소집 시 △위원 5인 이상의 요구 시로 한정된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내부에선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인권보장위원회가 진정한 인권보호기구로 자리매김할 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전시용 기구로서 유명무실화될지 주목된다.

로 행진할 것을 요구하는 등 노동자들의 반발을 유도했고, 이를 빌미로 금속연맹 간부들에게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정부당국이 대화와 교섭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전시성 발언에 불과한 것으로 국민여론으로부터 노동조합을 고립시켜 강경 탄압하겠다는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최근 공안세력에 의해 진행되는 강경탄압은 김대중 정권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재>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③ 차지영(노점단속 피해자)

한사코 주문을 사양하던 차지영(24세) 씨는 마지막에 우유 한잔을 시켜 이제 15개월된 아들 민기의 우유병에 쏟아부었다. "민기에게 참 오래간만에 우유를 먹이네요. 남편이 실직한 뒤론 우유 대신 밥을 먹였거든요. 6개월된 갓난애한테 밥을 먹이다보니 구강염까지 걸렸어요. 때론 보리차에 설탕을 타서 먹이기도 하고요..." 안양의 한 커피숍에서 만난 그는 계면쩍은 듯 입을 열었다.

차 씨의 남편 홍현석(28세) 씨는 조그만 피혁회사에 다니다 지난해 6월 일자리를 잃었다고 한다. 일자리를 찾아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구할 수가 없었다. 결국 차 씨 부부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노점.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을 털어 좌판을 장만하고 지난해 12월 말 성남 분당 서현역 앞에서 닭꼬치 장사를 시작했다. 당시 임신 3개월이던 차 씨도 "밀린 방세에 주인 아줌마 빚기 민망하다"

며 남편을 따라 나섰다. 하루 수입은 평균 3만원. 재료를 빼면 남는 돈은 절반뿐이지만 매일 끼니 걱정에 시달렸던 세 식구에게 그 좌판은 밥줄이자 새로운 희망이었다.

단속반에 빼앗긴 '희망'

하지만 희망도 잠시. 장사를 시작한 지 보름도 되지 않은 1월 6일, 노점단속을 나온 구청 직원들은 좌판을 빼앗아갔고 그 과정에서 그는 오른쪽 손가락 4개의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주위사람들이 임신부라고 소리쳤지만 구청직원들은 막무가내였다. "놓으라는 소리도 없이 단속반들이 등을 잡아끌면서 좌판을 빼앗아요. 손에선 피가 나고 등에 얹힌 민기는 자지러져 우는데 아프다는 생각보다는 '이제 우리 다 살았구나'하는 생각만 들더군요."

하지만 이제 차 씨는 노점 단속반들

은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들 역시 자신과 다름없이 눈치만으로 연행해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다친 오른손을 내보이며 "새끼손가락은 영원히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손가락도 적어도 1년은 재활치료를 받아야한데요"라고 그는 말했다. 그러나 그는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장 내일 먹을 쌀도 없기 때문이다.

민기를 위하여...

요즘 그는 부쩍 고민이 많다. 쌀마저 떨어지자 남편이 다시 노점 얘기를 꺼내기 때문이다. 물론 방세에, 민기 우유값, 7월이면 태어날 아기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돈이 필요하지만, 단속에 시달릴 남편을 생각하면 숨부터 탁 막혀온다. 수입이 적더라도 남편이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차 씨는 말했다. 그리고 손이 빨리 회복돼 조금이라도 생계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생활보호대상자인 시어머니께 들려야 한다며 민기를 등에 업고 일어섰다. 더 이상 내몰릴 곳도 없는 차지영 씨. 그에게 희망은 언제쯤 찾아올까.

<추적 60분>, 의문사 추적 인권협,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

4일 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은 '잊혀진 죽음-의문사'라는 주제 아래 과거 정권 아래서 발생한 의문사 사건의 진상을 추적했다.

유가족(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에 접수된 42건의 의문사 가운데 신호수, 이철규, 허원근, 김두환 씨 사건을 중심으로 방영된 이 프로그램은 유가족과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통해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의문사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케 했다.

유가족들의 캠페인 현장에 나타나 "속죄한다"는 글귀를 남겼던 김두환 씨의 군 동료, 두번 뿐이었던 총성에 도 불구하고 세 발의 총상을 입고 자살한 것으로 발표된 허원근 씨 사건 등은 의문사를 둘러싼 사건조작의 의

혹을 한층 강하게 만들었다. 한편,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의장 김정숙)는 5일 성명을 발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매년 의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유가족들에게 했던 진상규명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야단체, 부산경찰청장 고발 집회 난입 및 폭력 혐의

부산지역 30여 개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민기본권 보장과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부산대책위'는 5일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경찰관지무집행법 위반 및 직권남용, 집시법 위반 등의 이유로 부산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부산대책위측은 부산경찰청장이 지난 2월 25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

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집회에 전경들을 난입시켜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들을 폭행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부산대책위 소속 회원 1백여 명이 참가한 집회에서 전경 1백20여 명은 한총련 유인물을 나눠주던 대학생들을 연행하려는 목적으로 집회장에 대거 난입했다. 그 과정에서 박정상(부산철거거민연합 사무국장) 씨가 경찰에게 폭행을 당해 이빨이 부러졌으며, 최영(부산철거거민연합 사무차장) 씨도 전경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 집회장 난입 끝에 경찰은 유인물을 돌렸던 대학생 1명을 연행했으나, 불구속입건 후 석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책위 측은 "이날 사태는 평화적 집회를 불법적으로 무산시키려 했던 경찰측의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9일(화)

제 13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세계화’ 허구 폭로

동남아 여성노동자 방한 기자회견

동남아시아 여성노동자들이 한국을 방문, ‘세계화’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과 함께 연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 주재 삼성합작기업 ‘마스피온’의 노동자들은 기본적인 식비와 교통비 지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그러나 10일 동안의 파업은 군대와 경찰 그리고 구사대의 폭력에 의해 강제 진압되었고 1천2백여 노동자의 해고, 수많은 학생과 노동자의 구속으로 끝을 맺고 말았다.”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해 ‘세계화에 반대하는 동남아 여성노동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수리업(휴메니카 인도네시아 노동단체 활동가) 씨는 자국 노동자들의 현실을 눈물로 호소했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이들은 인도네시아, 타이, 말레이시아, 필리핀의 여성 노동자들. 이들은 8일 한국여성노동자회의회의 회의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속출하고 있는 대량해고 △최저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현실 △노동현장의 가혹 행위 등을 폭로했다. 특히 이들은 세계화의 최대 피해자들 여성노동자들과 규정했다.

타이에서는 최근 2년 동안 약 30만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되었으며, 그 중 95%가 여성노동자라고 가루나이 투리안(팔 가멘트사 섬유노동조합 간부) 씨는 밝혔다. 투리안 씨는 해고된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 전문기술이 없는 장기 근속 노동자들이며 재취업의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실업문제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여성노동자들은 인권유린 피해 역시 빈번하게 겪고 있다고 이들은 전했다.

“인도네시아의 한 한국진출기업은 생리휴가를 요청하는 노동자에게 생리대를 직접 꺼내보이라고 했다. 또 출퇴근 카드를 바다에 떨어뜨려 우왕좌왕 찾게 하면서 모이를 쪼아먹는 닭과 같다고 놀리는 등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들은 폭로했다. 특히 임시고용직 노동자들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노동조건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네미아 카술라(NFL노동조합 전국집행위원회 지역 의장, 필리핀) 씨는 “지난해 9월 필리핀항공 노조가 ‘노조

탄압 항의’와 ‘임금 인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는데, 문제해결은커녕 파업의 결과, 3천5백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고 10년 동안 임금인상이 발이 묶여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필리핀 정부가 단체 협상에 끼어들면서 사태가 그렇게 전개되었다”며 “이것이 바로 필리핀의 세계화”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동남아 여성노동자들은 ‘연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카술라 씨는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을 버림받기로 내몰게 되어있다.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아시아의 노동자들은 동일한 상황에 놓여있다”며,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시아여성위원회를 주축으로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2천년 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인권하루소식이 새롭게 단장합니다

▶ <인권시평>의 새로운 필진을 소개합니다.

정연순(변호사) 채만수(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부소장) 이경주(경북대 법대 교수) 이성훈(파스라마나 사무국장)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남이 앞으로 격주마다 <인권시평>을 맡아주시게 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고정란이 달라집니다.

- 지난 한 주간의 인권관련 사건들을 일지 형태로 정리해왔던 <주간인권호름>은 한 주간의 주요 인권사건을 일목요연하게 되짚어보는 형태로 바뀔니다. 화요일마다 국내 인권호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매주 수요일자에 찾아가는 <세로나온책>은 좀 더 열심히 발로 뛰면서 좀 더 빠르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따뜻한 시선으로 인권 만평의 새 장을 열어간 이동수 화백의 <만화사랑방>이 매주 금요일자로 옮겨갑니다.
- <공판안내>와 <행사와 등정>은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각각 실립니다.

▶ 지면에 변화를 꾀했습니다.

좀 더 읽기 쉬운, 좀 더 읽고 싶은 <하루소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주소가 바뀌었습니다.

새 주소: <http://www.iworld.net/~rights>

여사사동 남자교도관이 점점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

교도소 내 여성 재소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사동에 남자 교도관이 야간출입을 수시로 해 여성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부산주례구치소에 수감중인 한 여성 재소자는 외부로 보낸 편지를 통해 “남자 교도관들이 야간에도 여성 사동(여사)에 수시로 점검을 나오고 있다”며 “야간에 남자 교도관이 여사를 순시하는 것이 분명한 인권유린임에도 불구하고 구치소측은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재소자는 또 “밤에는 숙웃만 입고 자며, 특히 여름엔 런닝셔츠와 팬티만 입고 자야하기 때문에 처음 몇 달간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부산주례구치소의 재소자 5명은 ‘구치소내 여성 재소자들의 처우개선과 기본권 보호’를 요구하며 지난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단식까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성 재소자들의 반발이 일자 주례구치소측은 남자 교도관의 순시를 사전에 알려주는 ‘사전에고제’를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으나, 재소자들은 “사전에고제가 실시되면 한밤중에 두세 시간 간격으로 웃을 일기 위해 일어나야 하는데 그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치소측은 “야간에 남자 감독관이 여사를 점검을 하는 것이 여성 재소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남자 교도관이 여사를 점검하는 일은 법무부 규정상 문제가 없는 일이고, 여성 감독관이 있지만 야간에는 퇴근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에서는 남자 담당자가 여사를 감독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여사 재소자의 일상적인 생활에 대한 감독권은 여자 교도관에게 있다”며 “국제기준에 비춰볼 때 여사에 남자 감독관이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소요, 폭력사태를 수습하는 등의 물리적 힘이 필요할 경우에 한정해 여자교도관과 동행한 상태에서 여사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구치소 여성 재소자들의 주장을 계기로 교정관련 법령의 정비와 여성 교도관 확충 등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주요공판안내

- ▶ 3월 11일 (목)
 - 남봉수(국가보안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속행
- ▶ 3월 12일 (금)
 - 백성기 외3(국가보안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합의 4부, 속행

주간인권호름

◆ 주요 사건 ◆

1. 비전향장기수 등 양심수 43명 석방(2월 25일)
 - 인권단체, “준법서약 적용에 따른 미흡한 조치...아직도 2백60명 남아”
2.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 소송 제기(2월 23일)
 - 이해정, 김삼석, 박영희 씨 등 국보법 전력자들,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처분은 부당” 주장
3. 종교계,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선언(2월22일)
 -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한 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김현 교무, 함세웅 신부) 소속 종교인들,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 촉구 성명서 채택
4.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탈퇴(2월 25일) - 정부 공안대응 강화
 - 금속연맹 소속 8개 업체 노조원 3만3천여명,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하며 파업 전개(2/26)
 - 검찰, 국정원, 경찰,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회 구성키로(2/25) 이천전기 노조위원장 등 2명 연행(3/4) 서울지하철 노조원 45명 연행(3/5)
5. 성난 어민들, 생존권투쟁 집결(3월 1일)
 - 전국어민총연합 소속 회원 등 1천여명, 부산역 광장에서 ‘한일어업협정 백지화 촉구’를 위한 국민대회 개최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 본격화(3월 4일)
 -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28개 사회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 연대회의’ 발족
7. 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키로(3월 2일)
 - 경찰관 인권침해 사례 조사·재발방지대책 수립
8. 군 의문사 유족, 국방부 앞 추모집회(2월 24일)
9.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제기(3월 1일)
 - 일제 때 ‘근로정신대’로 끌려가 일본 군수공장에서 강제노동했던 한국인 5명, 일본 정부와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에 제기
10. 대법원, 시국사건 전력자 임용제외(2월 22일)
 - 5공 정권 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3명, 판사임용에서 탈락

◆ 수치로 본 인권 ◆

- 1월중 실업률 33년만에 최고치인 8.5% 기록, 실업자수도 전월보다 9만7천명 늘어난 176만2천명 기록(통계청 2월 26일 발표).
-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과 소비가 97년에 비해 각각 6.7%, 10.7% 줄어들고 하위계층 20%의 월평균 소득은 78만4천원으로 97년보다 17.2% 줄어든 반면, 상위 20%는 424만원으로 전년보다 0.3% 감소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3월 5일 발표)

인권
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판과 인권판

정연순(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이해한 교육부장관이 대학신입생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항의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나 고려대 총학생회에서 교육부와 언론사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그 시작일 뿐이었고, 급기야 이 장관이 3월 4일 예정되어 있던 한양대에서의 교양선택과목인 <청년문화 특강>의 일일강사로 초빙되었다가, 학생들의 반발 때문에 강의를 취소하고 총장들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던 부산대에는 학생들의 정문 봉쇄로 들어가기조차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보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 전례가 없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그 수장이 인권대통령으로 불리우기를 원하는 자칭 '국민의 정부'에서 그것도 가장 개혁적인 인사라는 교육부 장관이 한 일이라는 데서 그 문제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인권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

인권이라는 개념은 당연히 인간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가치부여할 때만이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을 객체로 취급하지 않고 자율적인 주체로 보는 생각이고, 타인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보면 나와 다른 처지에 있으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인간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도 사상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일로 논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자가 학생의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존중하는 기초아래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돕는 것이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이며, 그러한 자율적 교육분위기에서 자라난 청소년이야말로 상대방의 권리를 배려

하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과 교육의 문제는 떼어놓을 데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무엇보다도 인권에 있어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여 하였고, 교육에 있어서는 피교육자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정권들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권으로 부르는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분야에서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여지없이 짓밟혔고 피교육자는 자율성을 잃어버린 채 주입식교육, 입시교육 그리고 출세를 위한 교육만을 강요받았다.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기대하였다. 또 이해한 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서 취임했을 때, 이 장관 또한 독재정권 아래서 대학시절을 보냈고 이에 저항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기조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개혁이 필요했던 부분인 교육부에서 더욱 큰 기대를 하였다. 그러기에 국민의 정부가 지난 1년간 준법 서약서나, 국가인권위나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서조차 논란을 벌인 것을 두고도 수십년간 정권을 장악해 온 보수 기득권세력과의 갈등의 문제로 보아주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주자라고 불리는 이 장관의 편지과 동을 보면서 우리의 동생, 자녀들이 구시대의 정권 아래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게 된다.

이 장관은 자신의 행위가 신입생들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학생운동이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 대학생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신

입생들에게 학생들의 대표기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그 결과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은근히 위협한 것은 강요가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학생운동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그 편지가 가지는 반인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물론, 교육부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날 군사독재정권과 구 정권아래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는 하였다. 그것은 그 내용 자체를 떠나 '별일 아닌 것'이었다. 그 정부 자체가 국민들의 인권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전면적으로 벌어지던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이 어찌다가 신학기를 맞아 편지 형태로 노골화되었다고 해서 새삼스러이 더 분개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은 문제가 다르다.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 장관의 이러한 편지 과동이 요즈음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더욱 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우리 사회는 아이엠에프라는 태풍때문에 한동안 정신이 없었고,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총력을 모으는 취지 아래에서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세력들이 오히려 희생을 각오하고 더욱 허리를 졸라매면서 숨을 죽여야 하였다. 게다가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 으레 따르기 마련인 개혁이니 인권이니 하는 현시적인 정책제시도 1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이다. 구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숨죽였던 기득권 세력이 새정부의 실책을 잡아 개혁세력을 끌고넘어지는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태한 시점에서 개혁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사람조차 교육에 있어서의 인권의 문제를 깊이 생각지 않고 구정권의 악습을 되풀이하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앞날에 대한 큰 근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10일(수)

제 132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폐기·양심수 석방 등 요청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문제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본부 런던)는 지난 8일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한국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지의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기 등을 요청하는 탄원운동에 돌입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한국 캠페인'은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된다. 우선, 구속자들의 석방과 인권관련 제도의 개선을 한국정부에 직접 탄원하는 방식이다. 앰네스티는 △단병호(전 금측연

맹 위원장) 씨 등 노동운동 관련 구속자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 등 정치운동가 △안재구·류락진(구국전위 사관) 씨 등 2·25 사면에서 제외된 장기수들을 석방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의 석방을 한국정부에 집중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국가보안법의 개정 또는 폐지 △독립성이 보장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 △교도소 수감조건의 개선 △사형제도 폐지 △여성·이주노동자 등 약소집단 권리보장을 위한 인권지침 마련 △정치범에 대한 사후감시 체계(보안관찰) 문제 등을 제기하기로

했다.

세계 각지의 앰네스티 회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한 직접적 탄원 외에도 자국 정부 관리들에게 한국정부에 대한 인권개선 압력을 행사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29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아셈(아시아유럽정상회의) 의무대표회담에서 각국 정부 대표들이 한국의 인권문제를 정식 의제로 삼도록 할 예정이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한 관계자는 "유럽 국가들의 경우 특히 인권문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국정부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제철거, 임산부 등 부상

송현동 재개발지역

인천시 송현동 재개발지역에서 또 다시 강제철거가 진행돼 임산부 1명과 부녀자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관련기사 본지 99년 1월 12일자 참고).

9일 오전 8시, 전투경찰이 철거지역을 에워싼 가운데 포크레인 5대와 쇠파이프로 무장한 100여명의 철거용역이 강제철거를 시작, 용역의 진입을 막는 부녀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만삭의 임산부 민충규 씨와 주민 전옥 씨가 부상을 당했다.

송현동 철거민 김금선 씨는 "주민들이 철거용역에게 맞고 있는 중에도 경찰서장은 철거반장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오후 1시 40분 경에는 철거용역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철거를 감행, 집안에 있던 임산부와 아이가 크게 놀라 대피하는 일도 발생했다.

한편, 경찰은 철거지역 주변에서 불심검문을 벌여 학생과 사회단체 소속 회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새로운 책

「인권교육 길잡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지음/사람생각 펴냄/302쪽/9천원

생활 속에서 인권의 가치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인권교육 지침서가 처음으로 나왔다.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이 만든 「인권교육 길잡이」는 '인권을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라는 생각에서 출발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인권의 눈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인권의 소중함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다.

인권의 정의와 내용, 역사, 인권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지킴이 활동 등 총 5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특징은 교사가 인권에 관한 지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느낌과 감정, 생각과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평가함으로써 인권의 내용을 교사와 학생이 함께 구성해 나가도록 하는 참여식 인권교육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이다.

인권이론서가 아닌 구체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담은 책으로는 국내에 첫 출간된 이 책은 중·고등 윤리·사회교과 등에서 뿐 아니라 청소년단체, 각 대학 소모임 등지에서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주요 국제인권조약이 부록으로 실렸다.

■ 구입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배경내 (02-741-5363) / 도서출판 사람생각 (02-3675-4096)

<연재>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④ 의문사한 재소자들

지난해 2월 18일 성동구치소에서 강제노역 중 의문사한 박순종 씨의 가족들은 얼마 전 고인의 1주기 추도예배를 드렸다. 하지만 박 씨의 시신은 사망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강남시립병원 냉동실에 꽂꽂 얼어붙은 채 안치되어 있다.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바라는 실낱같은 희망 때문에 시신에 손을 못 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스스로 감옥의 인권을 많이 개선했다고 자찬하고 있지만, 이같은 의문의 죽음은 감옥의 인권현실이 여전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반증해준다. 지난해 8월 발생한 남성진 씨와 신창제 씨 사망사건(안양교도소), 10월 손강철 씨(원주교도소)의 죽음, 11월 숨진 배재문 씨(전주교도소) 사건 등은 모두 의문투성이의 죽음이었다. 박 씨의 경우도 그 가운데 하나.

의문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박순종 씨의 죽음을 단순 사고로 처리하며 사건을 종결지었다. 그러나 도처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때문에 유족들은 검찰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첫 번째 의혹은 구치소 측에서 사망 사실을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점.

박 씨의 아내 노성에 씨는 남편이 사망한 이틀 후 구치소 측에 안부전화를 했다. 구치소 측은 박 씨와 통화할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세번째 전화에서야 비로소 박 씨의 죽음을 알렸다. 이미 시신이 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의 일이다. "구치소 측은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심지어 검찰에 제출한 사망 경위서에 저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써있는데 이름도, 전화번호도 다 틀려요. 그리고 남편을 행려자로 분류해서 서둘러 처리해 버린 거예요. 남편에게 두 차례 면회도 갔었고, 전화 번호와 주소도 남겼기 때문에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말이에요."

꼬리를 무는 의혹들

행려자로 처리될 뻔한 박 씨의 시신은 사망 이틀 후 유족들에게 남겨졌다. 여기서 석연치 않은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한다. 부검을 의뢰하고 사인을 밝히던 담당 형사에게 전보 발령이 내려지고 사건은 급작스럽게 검찰로 넘어간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박 씨가 "넘어지다 쓰레기통에 부딪혀서 사망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사건을 종결시켜 버렸다. 그러나 유족들은 얼굴 뿐

군산 '노동탄압'사무소 말썽 해고자 폭행·사측 편들기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어야 할 노동사무소가 오히려 사업주와 결탁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군산대 노조와 기아특수강 대책위, 군산지역 카게리어 노조, 민주노총 군산시지부, 군산 노동자의 집 등 8개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군산지역 투쟁사업장 연대회의(대표 김연태

군산대 노조위원장, 이하 연대회의)는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군산 노동사무소 책임자의 처벌과 군산 노동사무소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연대회의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사무소를 찾아간 장성민(군산지역 카게리어 해고노동자) 씨가 진입을 저지하던 전경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눈 주위의 뼈가 으스러지고 안구가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장애가 우려되는 상체를 입었으며, 노동사무소가 기아특수강 측이 제출한 위조문서

아니라 온몸에 때맞은 투성이인 시신을 보고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한다.

부인 노 씨는 의혹을 제기하는 까닭을 하나 더 덧붙인다. "지난 3월 말 담당 검사가 바뀌었어요. 처음에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저에게 구타에 의해 숨진 것 같다고, 승소할 가능성이 있으니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군요. 선임료가 너무 많이 들어 사양했지요. 담당했던 검사가 그렇게 말했는데... 사건이 이렇게 처리될 지 몰랐어요." 대부분의 의문사는 이렇게 의혹의 실타래가 엉킨 채로 잊혀져 간다.

감옥 폐쇄성 시정 안돼

감옥의 폐쇄성을 이용한 교정당국의 권위적 태도가 이러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행형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대부분의 감옥내 의문사 사건에서 교도소측은 스스로 부검과 수사를 모두 마치고 사인에 대한 결론을 내린 뒤에야 이를 유족에게 알린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의혹이 있더라도 증거나 증인을 확보할 수 없는 감옥의 현실 때문에 진상을 제대로 밝혀낼 수 없는 것이다. "제발 장례식이라도 빨리 치렀으면 좋겠어요. 남편을 저렇게 누어놓고... 갈수록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사람이 할 일이 못돼요." 지적대로 지친 노성에 씨의 마른 눈가에 눈물자국이 다시 번진다.

를 인정해 해고자에 대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등 앞장서서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연태 연대회의 대표는 "노동사무소 측은 장 씨의 사고 당시 경찰서장과 함께 직접 사과인사를 하며 보상을 약속했으나, 이제 와서 비공식적인 약간의 원조만을 제시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치료비 전액부담과 책임자의 파면조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폭행사건 책임자의 고소고발 및 국가배상 소송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11일(목)

제 132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인터넷 활동 낱낱이 감시 가능 진보넷, '인텔 펜티엄III 프로세서' 반대운동

컴퓨터 접을 통한 사생활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민간단체가 관련 제품의 판매중단과 제품회수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나섰다. 지난 2월 28일부터 시판된 인텔 펜티엄III 프로세서에 대해 '시판 철회운동'을 벌이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김진균)는 "프로세서에 부여되는 고유번호가 컴퓨터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크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반대운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이 칩은 컴퓨터의 주기억장치를 운영하는 부품으로, 인텔사는 칩마다 고유번호(Processor Serial Number, PSN)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고유번호가 부여된 칩이 내장된 컴퓨터를 사용해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그 인터넷 사이트는 어떤 컴퓨터가 자신의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인텔 펜티엄의 고유번호를 추적하면, 컴퓨터 이용자가 네트워크 상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상세히 파악할 수 있으며, 결국 컴퓨터 이용자의 가상공간 활동 전체가 감시당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정보기관 악용 가능

특히 컴퓨터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현황을 분석하는 것이 개인의 주요활동과 성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PSN을 바탕으로 축적된 이용자들의 정보가 정보기관이나 기업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크게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사회단체들은 PSN 개발에 FBI(연방수사국) 등이 개입했는지 여부에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얼마 전 시행계획이 폐지된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안기부와 경찰이 개입한 사실에 비춰볼 때, PSN에 대한 정보기관의 개입가능성은

매우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특정 PSN에 대한 접속차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해지며, 해킹을 통해 PSN 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행위(신용카드번호 위조사용 등)가 빈발할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앞으로 고유번호를 제시하지 않는 사용자의 인터넷 접근을 막는 웹사이트가 생겨날 수 있으며, 이는 사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PSN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면으로 이어짐

'정형근 의원 심판모임' 결성

서경원 전 의원 등 고문피해자 모여

"남산 안기부 지하실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으며 조사받던 중이었다. 어느날 저녁 9시부터 이튿날 새벽 2시까지 어떤 남자에게 두들겨 맞아 피를 토해야 했는데 그 남자가 바로 정형근이었다. 정형근은 내 옷을 벗기고 군복으로 갈아 입히는가 하면, 맨발이던 내 발등을 구둑발로 짓밟았다. 마치 발레라도 하듯이 내 발등 위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다음날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은 검은 패인트칠을 한 것 마냥 온통 잿빛이었다..."

10일 낮 12시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서경원 전 국회의원(89년 방북혐의로 복역)은 이렇게 증언했다. 이날 서경원 전 의원을 비롯, 방양균(전 서경원 의원 비서관, 방북 혐의 복역),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복역) 씨등 과거 안기부에서 고문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은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과거 안기부 출신인 정형근 씨는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부산북·강서갑)으로 활동중이다.

이번 모임 결성의 취지에 대해 서경원 전 의원은 "개인적인 보복 차원에서 정형근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법을 어긴 사람은 누구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여기엔 인권을 유린한 권력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형근 심판 시민모임'은 앞으로 고문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재정신청 및 재심 관련법 개정 △유엔고문방지위원회 개인 제소관청과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국가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이기로 했으며, △고문조작피해 신고센터운영 △정보기관의 인권침해 감시 등의 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서경원, 방양균, 김삼석 씨외에 김은주(남매간첩사건), 김성만(구미유학생사건) 씨등 고문 피해자들과 종교·사회단체 대표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연재>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⑤ 김경택(전 동암재활원 원생)

"비리가 드러났는데도 왜 처벌받지 않죠? 그 정도로는 부족한가요?" 전주 동암재활원의 한 원생이 지역 사회단체에 보내는 편지의 한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전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장애인복지시설 '동암'의 인권유린과 비리 사건은 해방 이후부터 이어져온 우리 사회 복지시설의 고질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시설장이 사회복지 공로를 인정받아 '호암상'을 수상하는 등 겉으로는 호평을 받았던 이 시설에서 성폭행과 구타, 온갖 비리들이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한 장애인인의 용기와 결단에 의해 밖으로 알려졌다. 그 용기의 주인공이 바로 김경택(33) 씨다.

동암재활원 인권유린 폭로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인 경택 씨는 초등학교교를 졸업했다. 22살 때 서울의 한 시설에서 전기기술을 배운 뒤 장애인 근로시설에 다녀왔지만, 봉급은 고작 6-7만원 정도 희망을 접고 다시 고향(전북 함열군)으로 내려온 경택 씨에게 어느 날 희소식이 들려왔다. 전주에 동암재활원이 설립된다는 소식이었다. 대학에 들어가 사회로부터 무시당해 온 한을 풀고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싶었던 김 씨는 주저없이 '동암'에 원서를 냈고, 그후 6년간 고등학교 졸업의 꿈을 간직한 채 '온갖 팔'들을 견뎌왔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원생에 대한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택 씨는 마침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경택 씨는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며 시의회와 언론에 사실을 폭로했고, 이를 통해 '동암'의 해묵은 인권유린과 비리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 정도 비리는 괜찮은가요?"

하지만, 경택 씨와 원생들의 노력과 달리 정작 동암에는 변화가 찾아오지 않았다. 오히려 경택 씨는 이 일로 인해 졸업장을 받지도 못하고 매일같이 동암 직원들의 전화에 시달리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무릎꿇고 사과를 해야 졸업장을 주겠다"는 동암 측의 압력 때문에 다시 시설을 찾아가는 것조차 두렵다고 한다.

게다가, 시설이 아니면 갈 곳이 없어 재활원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는 한 후배 원생의 하소연은 경택 씨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한다. 사건발생 이후 달라진 것이라곤 식단이 좋아진 것 뿐 원생들은 오히려 정신적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직원들은 반성은커녕 원생들을 '두고보자'는 식으로 대한다고 한다. 재활원의 보호자 입장도 통제가 심해져 화장실도 허락을 받고 가야하며, 이제 직원들이 때리지는 않지만 욕지거리를 일삼으며 특히 "싫으면 나가라"고 말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성폭행 가해자로 재판 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두 명의 직원들이 버젓이 다시 재활원을 드나

사생활 침해를 막는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진보네트웍센터는 "인텔이 프로세서 고유번호 작동을 중지시키는 프로그램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를 보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독일의 컴퓨터전문지 <C'T>가 '인텔사의 보안장치에 허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한 바도 있다"고 지적했다.

들며 원생들과 같이 밥을 먹기도 한다는 소식에는 어안이 병병할 따름이다.

감시·천대없는 삶을 꿈꾼다

경택씨는 말한다. "원생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가지예요. 시설장과 직원들이 바뀌는 거죠. 원생들을 위해주는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직원으로 들어와 마음 편하게 지내는 것 외엔 더 이상 바라는게 없어요.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 거죠? 이미 드러난 비리들로는 그들을 처벌하기에 부족한 겁니까?"

지금까지 동암 문제와 관련, 전주시의회가 특위를 구성해 진상조사를 마쳤으며, 시민단체들도 공대위를 만들어 조사한 결과를 감사원과 검찰에 통보하고 동암 운영자들의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할 반응이 없다. 만약 동암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원생들은 앞으로 시설 뿐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도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거냐는 물음에 경택 씨는 말한다. "시설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22살부터 전전한 여러 시설에서 우리를 인간적으로 대해준 곳은 없었어요. 그런데 무얼하며 먹고 살아야 할지... 혹 갈 곳이 없어 다시 시설로 가게 되진 않을까. 걱정이예요." 그리고 넋지시 자신의 꿈을 얘기한다. 조그만 아파트에 자립작업장을 만들어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하는 후배들과 함께 일하면서 관리와 감시와 천대가 없는 그야말로 평범하고 일반인과 같은 삶을 살아보는 것이라고...

-취재: 김영옥(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웍센터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펜터업 점에서 PSN을 제거하고, 이미 출시된 제품 전부를 리콜(Recall)하는 방법"이라며 인텔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국내외 사회단체들과 함께 강력한 불매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12일(금)

제 1325 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박래군

반민주적 기류 사회전반 확산

노동현장·학원, 탄압·수난 잇따라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 노동현장의 구사대 투입, 대학자치권 압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폭력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낮아졌던 모습들이다.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가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억누르기 위해 공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신입생에게 획일적 이념을 강요하는 편지를 발송하는 등, 공안기류가 강화되고 있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의 폭력행사에 분노한 시민들이 오후 10시까지 시위를 벌이자, 경찰은 오히려 이날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경기동부실업자대책위 남연호 의장 등 9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쇠파이프 구사대 야간 급습

일진중공업(구 이천전기) 농성장

쇠파이프를 든 용역강제들이 노동자들을 야간에 급습,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새벽 0시 20분, 인천 일진중공업(구 이천전기)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장에 얼굴을 마스크로 가린 용역원 20여명이 쇠파이프와 해머를 든 채 난입,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끌어내고 천막을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저항하던 노동자들과 용역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노조원 채수명 씨와 천세철 씨가 머리와 허리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용역원들은 "우리는 일당 50만원을 받고 나왔다. 기물 파손된 것은 우리가 손해배상 하겠다"며 철거에 항의하는 노조원들을 막무가내로 쫓아냈고 농성장 안에 있던 앵크, 시키 등의 기물을 회사 안으로 옮겨갔다. 이날 농성장을 침략한 용역원들은 경비용역업체 'G에비' 소속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성장이 파괴된 후 일진중공업 김희수 이사와 지장진 공장장이 회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노동자들에게 목격됨에 따라, 이날 사건이 회사측

사주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일진중공업 노동자 32명은 고용보장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8개월째 회사 정문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해 오던 중이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농성장에 경찰력이 투입돼 신중식 노조위원장이 연행되는 등 2명이 구속되고 1명이 수배됐으며, 11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다(관련기사 3월 5일).

학생회실 일방적 폐쇄

단국대학교

대학생들의 자치공간인 학생회실을 학교당국이 일방적으로 폐쇄해 학생들의 거센 비난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10일 새벽 4시경 운동부 소속 학생들을 대동한 단국대 학생처 직원들은 5개 단과대학 학생회실과 동아리실의 집기를 들어내고 총학생회실을 폐쇄했다. 직원들은 학생회실에 있던 집기와 물품, 개인사물 등을 트럭 두대에 실어갔으며, 가져간 물품을 학생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이날 사건에 대해, 학교측은 학생회가 학생준치를 어겼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학생들이 학교에 남아서 숙박하는 것을 금지하는 학생준칙(97년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을 어긴 데다, 새내기배움터 행사를 총학생회가 주관한 것 역시 학생준칙에 위배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학생회측은 이번 사건이 장충식 이사장의 부귀를 앞두고 장 이사에 반대해온 학생회의 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충식 이사장은 지난해 학교 부도사태의 책임을 지고 1년간 학교운영에서 물러나 있었으나, 한달 후 다시 학교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재>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⑥ 강승희(전 조폐공사 노조위원장)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의 광풍이 온 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던 지난 1년, 구조조정의 강도만큼 처절한 노동자들의 저항도 곳곳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 와중에 99년 1월 7일 조폐공사 옥천창에서는 한 노동자의 분신사건이 발생한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저항을 전개한 것으로 꼽히는 조폐공사의 노동자들은 1월 6일 옥천창으로 모여들었다. 조폐공사 구조조정의 핵심 사안이었던 옥천창 폐쇄 방침에 따라 이날 중으로 옥천창의 기계들이 반출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자들은 '최후의 항진'을 결의하고 차랑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채 옥천창 사수에 나섰다.

그리고 1월 7일 오전, 전경 5백여 명은 예고방송도 없이 지게차와 함께 들이닥쳤고, 바리케이드로 설치된 차랑과 노동자들을 끌어내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노조위원장 강승희(41) 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당겼다.

"기계 반출을 막지 못하면 조합원들

의 생존권도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경들이 밀려들자 죽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불사하고 분신을 기도했던 강씨는 다행히 하반신에만 화상을 입었고, 두 달 가까운 입원생활 끝에 지난 2월 19일 현장으로 돌아왔다.

왜 일방적인 구조조정인가?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자는 것엔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조조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마다 기본적으로 20%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했다. 여기엔 합리적 기준이나 분석도 없고, 오로지 기획예산위의 지점에 따른 '모양새 갖추기'만 있다고 강씨는 비판한다.

이에 따라 조폐공사에서는 2천2백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1천여명이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떠났다. 단 6개월 만에 무려 40%의 인력이 감축된 것이다. 또 옥천창 폐쇄조치에 대해서도 강씨

는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합함에 따라 예상되는 5백여명의 손실액은 결국 국민과 노동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것이 조폐공사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다.

하지만, 투쟁의 결과는 냉혹했다. 10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고 그 가운데 3명은 구속, 3명은 수배를 당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게다가 회사측은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비와 조합간부 9명의 개인재산을 가압류했다. 그리고 1월 7일 투쟁을 고비로 1차 구조조정은 일단락됐다.

상처를 딛고 다시 처음부터

투쟁의 최전선에 섰던 강승희 씨도 해고자 신분이 되었고, 집마저 가압류당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강씨를 착잡하게 만드는 것은 무력화된 노동조합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다. 간부들의 구속수배, 조합비 가압류, 그리고 고용불안을 무기로 한 회사측의 개별적 회유와 협박 때문에 노조활동이 거의 정지된 상태다.

오랜만에 현장으로 돌아온 강승희 씨. 그는 다시 두 팔을 걷어 부쳤다. 노조 복원을 위한 기초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조정의 강풍을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T)02-741-5363, F)02-741-5364
ID:rights,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lword.net/~rights

인권교육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인권교육 길잡이」 발행

흥미로운 프로그램!

참여식 교육방법!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와의 만남!

「인권교육 길잡이」와 함께

재미있는 인권교육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도서출판 사람생각, 값 9000원

◆구입문의 : 배경내(02-741-5363)

만화사랑방



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lword.net/~rights

1999년 3월 13일(토)

제 132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노숙자들 다시 거리로

서울역 주변 2백여명 추산

서울역 등지에 다시 노숙자가 몰리고 있다.

지난 8일 노숙자다시서기 지원센터가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서 실시한 노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역 주변의 노숙자 숫자가 '자유의 집' 개소(99년 1월 4일) 이전과 비슷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겨울 노숙자 보호시설인 '자유의 집'으로 입소하고 경찰이 역 주변 노숙을 금지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줄어 들었던 노숙자가 봄을 맞아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는 것이며, 경찰과 노숙자다시서기 지원센터에 따르면 현재 서울역 주변의 노숙자만 2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서울역 주변으로 몰리는 노숙자는 크게 두 부류로 분류된다. 우선, '자유의 집' 또는 '희망의 집' 등 노숙자 수용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들이 한 부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서울역 노숙자 상담소의 박래형 씨는 "하루평균 25-30명 정도의 노숙자들이 상담을 하는데, 그 중 절반이 '자유의 집'이나 '희망의 집'에서 단체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노숙자들이 다시 거리에 나타나는 현상과 관련, 일선 노숙자 상담원들은 "1년만에 걸친 정부의 실직노숙자 대책이 별 실효성을 보지 못한 증거"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노숙자다시서기 지원센터의 김유경 과장은 "자유의 집과 희망의 집은 노숙자를 위한 임시 보호시설일 뿐이다. 장기간에 걸친 노숙생활로 인해 노동의욕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이벤트성 프로그램이나 일시적 경제지원은 자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근로사업 역시 노숙자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된 생활을 위한 대책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유경 과장은 "새로 유입되는 노숙자들과 3월 21일 공공근로가 끝나는 희망의 집 노숙자(98년 9월 21일 입소자)들을 위해서는 공공근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숙자 가운데엔 지난 겨울 동안에도 노숙생활을 계속해오다 뒤늦게 '자유의 집'에 입소하기 위해 서울역을 찾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소를 찾은 한 노숙자(52세)는 "1년 2개월간 교회의 도움을 받으며 노숙생활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자유의 집에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역에서 만난 또 다른 노숙자는 "지난해 봄까지만 해도 일자리가 있었지만, 가을부터 전혀 일을 하지 못한 채 노숙을 해왔다"고 밝혔다.

보안관찰 계속 강화

출소 사상범 무더기 처분통고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에게 계속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15특사 때 풀려난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손병선, 양홍관(이상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박동운(행방불명자 가족 간첩사건) 씨와 97년 만기출소한 손민영(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씨에 대해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내리고 이를 11일 해당자들에게 통보했다.

법무부는 지난 연말에도 박영희(방북 사건) 씨 등 10여 명에게 보안관찰처분을 내린 바 있다(본지 2월 2일자).

행사의 동점

- 「알뜰이들의 합창」 저자 이재관 씨 초청토론회
"노동약법 철폐·구속노동자 석방, 어떻게 싸울 것인가?"
· 3월 13일(토) 오후 5시-7시 / 고려대학교 4·18 기념관 소강당
· 주최: 구속노동자후원회,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 참가비: 2천원
- 한반도 긴장고조 책동 반대와 민족자주권 수호 결의대회
· 3월 13일(토) 오전 11시 / 광화문빌딩 앞
·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02-921-4090)
- 진보정당 창당제안 제2차 원탁회의
· 3월 14일(화) 오전 9시-오후 2시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문의: 02-369-8822
- 탈북여성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 및 지원방을 위한 토론회
· 3월 19일(금) 오후 2시 30분- 5시 30분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 주최: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02-2264-8649)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연재>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⑦ (끝)

배상훈(목포결핵병원 비상대책위 위원장)

"결핵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한달 내내 아무말도 못했어요. 결핵환자가 된다는 것은 죽는 것만큼 두렵다는 사실을 알게됐거든요. 그때 난, 내 미래가 너무 두려웠어요." 배상훈 씨는 결핵에 걸린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다. 전염될까 두려워 달려드는 자식을 껴안아주지 못하고 내치던 사람들, 가족이 있어도 병원문을 나서자자 갈 곳이 없는 사람들, 형과 동생을 결핵으로 잃고 자신의 차레를 기다려야하는 사람들. 국립목포결핵병원에서 그는 결핵환자들의 아픔을 보았다.

결핵병원 민간위탁 반대투쟁

결핵이 치유된 지금도 그는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반대 환자비상대책위' 위원장으로 살고 있다. 본래 결핵이란 병이 다시 재발하고 나면 완치가 어려운 병이라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함에도 그는 병원에서 나온 이후 줄곧 서울 농성장과 사무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정부의 국립목포결핵병원 민간위탁 발표 이후 민간위탁 반대를 외치며 살아온 지난 1년. 아직 성취 않은 몸이기에 조금 쉬어도 되련만 그는 투쟁의 길을 멈추지 않는다.

그는 도망가는 것은 곧 죽음이라고 생각한다. 등을 돌릴 때 죽는다는 생각, 채찍질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생각, 그것이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였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이제 8살난 딸 현리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수 있는 길이라 믿기 때문이다.

보험에 든 사연

"어머니 손에서 자라는 현리를 보면 편하게 살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틈이되면 현리와 보육원에도 같이 가고 <달려라 하니>라는 만

등을 돌릴 때 죽는다는 생각, 채찍질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생각, 그것이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온 이유였다.

화도 같이 봐요. 어려워도 꾀꿉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현리가 20살이 되면 전대일 영화를 보여주면서 아빠는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결핵에 걸린 이후 그는 교육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자신의 몸이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지 모르기에 만약의 경우 혼자 남겨질 현리를 위해 그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장 한끼 식사를 고민해야할 만큼 가난하지만 무슨 일을 해서라도 현리를 위한 보혐료 납부는 미루지 않는다.

노동운동...결혼...헤어짐...병마

어느새 37살. 23살 때부터 노동현장에 뛰어들어 사람들과 함께 노동조합을 꾸렸다. 심신 장애인으로 태어나 지독하게 말을 더듬고 사람을 만나는 것마저 기피해 학창시절 내내 '왕따'로 살아온 그에겐 놀랄만한 변화였다.

7년 동안 노조 교육부장으로 일하면서 자신에게 노동이론을 가르쳐주던 대학생과 사랑에 빠져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꾸렸다. 하지만 행복한 기억보다는 아픈 기억이 더 많았다.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 믿은 결혼 생활은 이론과 생활이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오래가지 못했다. 그리고 현리 엄마를 보낸 아픔에서 채 벗어나기도 전에 결핵이란 병마가 그에게 찾아왔다.

환자들과의 컴퓨터교실

목포에 내려간 그는 한달 간의 침묵

뒤에 사람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봤다.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자신을 대신하던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고자하는 병원. 그는 사람들과 함께 소리를 내고 싶었다. 그래서 컴퓨터 교실을 열었다. 컴퓨터를 살 돈이 없어 자판만 10개를 샀고 젊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인연을 맺은 사람들은 환자들의 신문을 만들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병실에서 생긴 우스운 일들이, 회진에 대한 바램이, 음식에 대한 불만이 신문에 담겨졌다. 때론 "근조"라는 단어가 눈물과 함께 실리기도 했다. 12살된 꼬마가 10살된 동생의 보호자가 되어 찾아왔던 일도 있었는데 결국 아이들은 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

그 일을 계기로 환자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돈을 걷어 아이들의 장례를 치러주었다. 그러한 생활 속에서 목포국립병원의 민간위탁 발표가 나왔을 때 그는 자신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그의 망막에 새겨진 그들의 삶이 그를 다시 불러일으킨 것이다.

돌아가고픈 공장생활

그는 목포결핵병원의 민간위탁이 철회되는 날까지 투쟁할 거라고 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면 공장으로 돌아가 노동자로 살면서 노조를 만들어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했다. 그가 만들고자하는 세상이 그의 것이, 그가 누릴 수 있는 세대의 것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들수록 아주 작아지는 날 느껴요." 더 잘하고 싶는데 잘해지진 않고 문득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자족적인 것은 아닐까'하는 의구심도 드는 지금 그의 나이는 37살.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16일(화)

제 132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내용 물의

국제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료가 국내 인권상황을 거짓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과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가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국내 외국인노동자 인권실태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답변에 나선 안호영 참사관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컨설팅센터를 설치해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왔고, 지난 한해 동안 1천2백 28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또 "산업연수생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재고용되는 추세이며, 정식 고용이 되면 모든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안 참사관은 이어 "노동부가 98년 10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해 법적인 제도를 마련한 후, 이들의 신분을 합법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답변 내용에 대해,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회장 이금연, 이하 외노협)는 15일 반박성명서를 발표, "한국 정부의 답변은 근거없는 허위로 가득 차 있다"며 "정부는 안호영 참사관의 정식 보고서를 공개하고 필요한 부분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외노협은 "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컨설팅센터'는 물론, 1천2백28건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또 "소위 연수취업제가 98년 4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연수생은 2천년 4월이 되어야 나오게 된다"며 "연수생과 불법취업자들은 실

직적으로 노동법적 지위와 서비스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외노협은 이어 "한국에서는 단 한 번도 외국인노동자 합법화 경향이 나타난 적이 없었다"며 "한국 관료의 표현은 한국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외노협은 "한국 정부가 국제 사회에 솔직한 보고를 통해 합리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걸맞는 정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며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 조약'을 서둘러 비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오는 19일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 및 권고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세콤, 절도회사 변신?

해고자 집회방해 말성

해고자들의 집회 도중, 경비용역업체 직원들이 해고자의 차량을 강탈해 말성을 빚었다.

14일 오전 8시30분 경 서울 태평로 삼성플라자 빌딩 앞에서 열린 '퇴출기업 고용승계 보장 및 해고자 원직복직 촉구 결의대회' 도중 삼성그룹 경비용역회사 세콤 직원 약 20명이 집회 참가자의 차량에서 엠프시설을 절단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용 차량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차량을 빼앗은 용역직원들은 차량을 남대문로에 버려둔 뒤, 이를 해고자들에게 알렸다.

이날 집회는 전혜투(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투쟁위원회) 소속 노동자들

이 구조조정을 빌미로 한 삼성그룹의 노동자 해고조치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한 집회였다.

집회에 참석했던 김용희(41세, 삼성시계 해고노동자) 씨는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출장에 의한 15일간의 납치 공갈, 협박, 금품회유 등을 당했다"며 삼성그룹의 만행을 비난했다.

전북경찰 인권보장위, 시작부터 셋길

최근 전북경찰청이 설치한 인권보장위원회가 시작부터 그 실효성에 의심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전북경찰청은 9명의 인권보장위원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인권보장위원은 박일만(전북경찰청 차장) 송기환(전북경찰청 경무과장) 최청목(전북경찰청 수사과장) 홍종길(전북경찰청 치안자문위원) 서거서(전북대 법대학장) 양문승(원광대 경찰행정학 교수) 최병일(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한익수(변호사) 최정자(전북여성단체협의회장) 씨 등이다.

그러나 위촉된 인권보장위원들의 면면이 공개되자, 전북지역 인권단체는 "6명의 민간인 인사도 인권·사회단체가 기대했던 인권전문가와는 거리가 멀다"며 "인권보장위원 위촉 결과는 인권단체들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평화인권연대는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민간인 6명중 1명은 현 경찰청 치안자문위원이고, 2명은 인권전문가가 아닌 경찰치안 전문가"라고 지적했다. 또 전북경찰청은 민간위원을 위촉하면서 전북지역의 주요 인권·사회단체에 어떠한 자문이나 협의도 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더하고 있다.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지난 11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전례 출소자들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쏘이고 있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제법의 우려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 기사 3월 13일자).

법무부는 손병선 씨(남한조선노동당 사건, 98년 8·15 출소)의 경우 △직업이나 일정한 생활기반이 전혀 없고 △공산주의 자체는 이론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다 △한국사회에 대해 정치적으로는 한심하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빈부격차가 극심한 사회로 보고 있으며 △보안관찰법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극히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안관찰처분 결정 이유를 밝히고 있다.

또한 손 씨가 형을 살고 있는 동안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고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급식의 날'에 동참했다는 것 역시 제법의 우려를 판단하는 빌미로 삼고 있다.

다른 출소자들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결정의 근거 또한 어설피고 빈약하기 짝이 없다.

97년 만기 출소한 손민영 씨(남한조선노동당 사건, 5년 구금)에 대해서 법무부는 "출소신고 등의 법적 의무 이행을 약 1년간 20회 이상 권유하였음에도 모두 거부하고 있고, 사안조사에도 응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질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보안관찰 해당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것은 오로지 '명백'이라는 수사 뿐 '제법의 위험성'을 판단할 명백한 근거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또 박동운 씨(행방불명자 가족 사건, 98년 8·15 출소)에게는 "범죄사실이 조직되었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결정이 내려졌고 정화려 씨(구국전위 사건, 98년 8·15 출소)는 "같은 사건으로 구금되었던 사 람이 아직 형을 살고 있고 그들을 따르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보안관찰처분 결정을 받았다.

결국 법무부의 결정은 보안관찰의 의도가 국보법 전례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데 있음을 드러냈을 뿐이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 발행

김대중 1년의 인권 실상을 고발합니다

98년 하반기(7월-12월) 인권하루소식을 모은 합본 11호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인권상황을 총 정리하고 이를 평가한 머리글도 실었습니다. 가격 1만원/ 문의: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V 주간인권호름

(99년 3월 8일-3월 14일)

1. 노숙자들 다시 거리로
노숙자다시서기 지원센터의 실태조사(3/8) 결과, 지난 겨울 '자유의 집' 등에 수용됐던 노숙자들이 다시 서울역, 영등포역 등지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강제철거...철거폭력 또 발생
인천시 송현동 재개발지역에 강제철거 진행, 임산부 등 주민 2명 부상(3/9)

3. 노동자 농성장, 쇠파이프 구사대 난입
인천 입진중공업(구 이천전기) 해고자들의 농성장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야간에 난입,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끌어내고 천막농성장 강제철거(3/11)

4. 쌀값 소폭인상 방침에 농민 반발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부의 벼 수매값 3% 인상 방침에 대해 "지난해 쌀 생산비가 14.9% 오르고, 물가도 5% 상승했다"며 강력히 반발(3/10)

5. 동남아 여성노동자 '세계화 반대' 캠페인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성노동자들 한국 방문해 '세계화에 반대하는 동남아 여성노동자 캠페인' 전개하며,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유린 실태 폭로(3/8)

6. 인터넷 상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
진보네트워킹센터, 컴퓨터점에 고유번호를 입력한 '인터넷 펜티엄III 프로세서'가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를 가능케 하고, 컴퓨터점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판 반대운동 나서

7. 법무부, 인권개선 조치 또 거부
법무부, 박태훈·김근태 씨의 국가보안법 7조 사건과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유엔인권이사회 권고사항을 사실상 거부(3/14)

8. 고문 국회의원 심판 운동
서경원, 방양균, 김삼석 씨등 과거 안기부의 고문수사 피해자들, 정형근 전 안기부 대공수사국장(현 한나라당 의원)을 심판하자는 모임 결성(3/10)

9. 국보법 전례자에 무더기 보안관찰 처분
법무부, 지난해 8·15특사 등으로 풀려난 국가보안법 전례자 6명에 대해 보안관찰처분결정 통고(3/11)

10. 국제엠네스티, 한국 인권개선 캠페인 돌입
국가보안법 개폐 및 양심수 석방 문제 등을 중심으로 오는 5월까지 집중 캠페인 벌이기로

◆ 수지로 본 인권 ◆

한국여성개발원이 4년제 대학 졸업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남녀 4백여 명 대상으로 벌인 조사결과, 지난해 2월 대학을 졸업한 신규 실업자의 51.3%가 한해 동안 단 한차례의 취업제외조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17일(수)

제 132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대공기관, 선거판에 정치사찰

구로을 재선거 청년진보당 사찰행위 발각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 보안수사대가 국회의원 선거 현장에 나타나 진보당에 대한 사찰을 진행한 사실이 발각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재선거가 진행중인 서울 구로을 선거구에서는 16일 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기관원이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청년진보당의 구로을 선거 후보인 최혁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30분경 구로역 애경백화점 건물 앞에서 1차 정당 연설회를 가졌으며, 그 과정에서 30대의 수상한 남자가 청년진보당 관계자들을 사진촬영하는 장면이 청년진보당 당원들에게 목격됐다.

이에 따라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이 기관원은 신분확인을 거부하며 도주를 시도하다 당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경찰이 나와 있었지만 아무도 이 기관원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청년진보당 선거사무실로 임의 동행한 이 기관원은 자신이 "과출소 소속이며, 상부의 지시로 과전돼 현장에서 사진만 촬영했을 뿐"이라고 일관

되게 주장했으나, 나중에 경찰청 보안4과 소속의 이달우 씨임이 밝혀졌다. 또한 이날 정당연설회 도중 당원들이 외친 구호(재벌재산 환수, 실업자 지원 등)와 찬조연설회의 신분, 플래카드 내용 등을 기재한 메모류음이 이 씨에게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 기관원이 임의동행할 당시 청년진보당 측은 선거관리위원들에게도 동행을 요청했으나, 선거위측은 이를 거부했다.

한편, 구로경찰서 측은 이날 밤 청년진보당 선거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와

"에기를 하자"며 대화를 시도하다, 청년진보당 측이 기관원의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은 진보적 사회운동 진영에 대한 정치사찰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데다, 공안당국의 개입이 선거판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년진보당 이창수 인권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의 일상적인 정치사찰과 진보적 정치활동 탄압의 증거"라며 "특히 대공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수사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한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안수사대의 선거개입과 정치사찰을 근절시키기 위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책

「국제인권법 2」

국제인권법학회 발행/1998/412쪽

국제인권법학회가 「국제인권법 제2호」를 펴냈다. '국제인권조약'에 대해 다루었던 제1호에 이어 이번 호는 유엔의 인권보호기구에 대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책은 인권보호기구의 설립 과정, 권한, 기능 등을 소개하는 한편, 유엔 산하의 인권 제도에 대한 제안, 세계 각지의 인권기구에 대한 고찰도 시도하고 있어 국제인권기구의 구성과 그 활용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수록되어 있는 논문은 모두 16개.

첫 논문으로 실린 「유엔의 인권보호 체제」는 국제인권보호기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한 글이며, 이어서 실린 논문들은 각각의 유엔 인권조약들에 관련된 인권기구와 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난민고등판무관 제도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과 지도장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실행제도 △인종차별철폐협약의 이행감시절차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감독절차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고문방지위원회의 기능과 감독절차에 대한 독립된 논문들이 그것.

또 「인권규약의 효용성: 국제인권규약을 중심으로」와 「국제인권규약의 개인청원제도 확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은 유엔의 인권조약과 기구에 대해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그밖에 「유럽인권협약상의 인권구제절차」, 「미주인권제도에 대한 고찰」, 「아·태지역 인권기구에 대한 전망과 과제」 등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 발행

98년 하반기(7월-12월) 인권하루소식을 모은 합본 11호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인권상황을 총정리하고 이를 평가한 머리글도 실었습니다.

가격 1만원/ 문의: 인권운동사랑방(02-741-5363)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유엔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

'인종차별'은 먼 나라의 이야기인가? 한국은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로부터 예외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한국 또한 예외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유엔 산하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한국 정부가 지난해 4월 제출한 10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한국은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에 가입한 153개 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조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입법·행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이에 대해 정기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번 정기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한국의 불법채류자, 산업연수생, 화교에 대한 차별 문제 등이 구체적인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위원회의 한국 담당 보고관인 테오 반 보벤은 "산업연수생으로 한국에 온 외국인노동자들 대부분이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으며,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이른바 3D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대표는 "산업연수생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정규직으로 재고용되는 추세이며 일단 정식으로 고용되면 모든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답변하는 등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태가 긍정적이라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관련기사 3월 16일자 참조>

한편, 이번 심의에서 테오 반 보벤 보고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고, 조약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한 입법 절차도 이뤄진 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한국정부가 조약에 명시된 내용들을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총괄적으로 평가했다. 보벤은 이어 "인종차별철폐조약 2조와 4조에 따라 인종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명시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이 인종 구성 면에서

동질적이라는 점이 인종차별 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변명거리가 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하단 상자 참조>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전국에서 가장 활발히 지역인권운동을 펼쳐오고 있는 '전북 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김승환)가 최근 98년 전북지역 인권실태를 정리·평가한 '인권보고서'를 펴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전북지역의 변화된 인권상황을 점검해야 할 필요"에서 이번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으며, 그 결과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존권이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위협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노동자(특히 여성노동자)와 서민, 실업자, 노숙자 등의 인권이 크게 침해" 받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정치적 권리도 신장된 것으로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시민·정치적 권리'로 나누어 정리된 <98년 전북인권보고서>는 노동, 사회복지, 사상탄압, 양심수, 감옥의 인권, 주한미군범죄 등 모두 9개 항목을 통해 전북지역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제2조(d) : 각 계약국은 어느 인간, 집단 또는 조직에 의한 인종차별을 해당 사정에 따라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으로써 금지하고 종결시키며

제4조(a) : 인종적 우월성이나 증오, 인종차별에 대한 고무에 근거를 둔 모든 관념의 보급 그리고 피부색이나 또는 종족의 기원이 상이한 인종이나 또는 인간의 집단에 대한 폭력 행위나 폭력행위에 대한 고무를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하고 또한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 인종주의자의 활동에 대한 어떠한 원조의 제공도 의법처벌해야 하는 범죄로 선언한다.

(b) :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법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우선 노동 부문에서, 보고서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만도기계 익산공장, 군산 기아특수강 등 지역 내 주요 사업장에서의 정리해고 실태 및 노동자들의 투쟁양상을 정리했으며, 98년 전북지역의 고용동향과 실업자 현황 등을 분석하면서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도 함께 꼬집고 있다.

또한 전주시 치매요양병원의 민영화 논란을 통해 "경제논리 속에 노인인권 문제가 외면"됐던 사례를 소개하는 한편, 전주 동암재활원 사태에서 드러난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 있어서도 도내 국가보안법 사건(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등)과 보안관찰 피해사태들이 소개되고 있으며, 특히 전북지역 인권단체로서 전주교도소의 인권침해 문제를 끊임없이 관찰·대응해 온 활동이 보고서 안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이밖에 '군산미군기지 우리땅 찾기운동'을 비롯해 군산미군기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역주민들의 투쟁양상과 98년 8월 청와대 민원실에 학교생활개선을 요청하는 E-메일을 보냈다가 징계를 당한 전라교 학생사건 등이 실려 있다. 부록으로는 국가인권기구 자료들과 지난 1년간 발표된 전북평화와인권연대의 각종 성명서가 수록됐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94년 12월 창립된 이래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을 발행해 왔으며, 양심수 지원사업, 인권교육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평화와인권연대는 앞으로도 해마다 인권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 : 0652-231-933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18일(목)

제 132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검찰 "보호 차원"... "격리 위주 발상" 비판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앞으로 소년원에 보낸다?

최근 검찰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 가운데 재발의 우려가 있는 청소년들을 법원에 직접 송치,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방침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가출하는 청소년은 부모가 보호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가출로 인해 유해업소·유흥장 등의 유해환경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송치되며, 법원은 정도에 따라 △위탁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및 요양소위탁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녀 안심하고 학교내 기 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대검찰청 관계자는 "소년법 4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을 이탈하는 경우, 소년부에 송치하는 보호처분 규정이 있다"며 "청소년의 무단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대 한인섭 교수(법학과)는 "소년법 상으로 문제가 없다지만 청소년을 권리의 주체로 생각하지 않

고 보호의 객체로만 인식하는 보호주의적 관점은 청소년의 자율성을 방해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소년원 송치가 청소년의 이탈과 비행을 방지하는 규제와 보호 장치로 고려될 수도 있지만 청소년의 의사와 상관없는

사회적리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출 청소년들이 모여 생활하는 <들꽃피는 마을>의 김현수 목사는 "가출을 이유로 소년원에 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비교육적이고 편익주의적 사고"라고 비판하며, "사회와 격리된 청소년 교육과 보호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목사는 또 "이번 방침은 소년원에 대한 인식이 보호시설보다는 처벌조치로 이해되는 사회 분위기를 무시하는 검찰식 청소년보호"라고 꼬집었다.

기자의 눈

정치사찰과 언론

16일 저녁,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청년진보당 선거본부 사무실. 30대의 한 남자가 청년진보당 당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남자는 이날 오후 구로역 앞에서 진행된 구로을 재선거 정당연설회에서 청년진보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당원들에게 발각된 사람이었다.

청년진보당 관계자는 이 남자에게 "소속이 어딘지 밝힐 것"을 거듭 요구했지만, 그는 "파출소 소속이며 상부에 의해 차출돼 사진촬영 지시를 받았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또 "신분을 밝히면 증거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내비쳤다. 지루하게 반복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끝내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결국 제3의 경로를 통해 그가 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임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런데 다음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의 내용은 엉뚱했다. 이날 벌어진 사태가 청년진보당 당원들에 의한 '경찰관 납치'사건으로 호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명백히 경찰의 불법 정치사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따라서 언론의 보도는 정치사찰을 중단하지 않는 경찰과 정부의 책임부터 묻는 것이어야 옳았다.

또한 지난해 주요 사회인사와 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의 정치사찰 행위가 밝혀지면서 술한 비난여론이 쏟아졌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여전히 반성과 개선의 자세를 보이지 않는 경찰의 정치사찰 행위는 더더욱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오히려 경찰의 대변인을 자임하면서 사태의 본질을 덮어버리는 우를 범하고 만 것이다.

한편, 이번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여준 태도 역시 석연치 않은 점이었다. 사건이 구로을 재선거의 선거유세 과정에서 발생했고, 청년진보당 측이 기관원에 대한 신분 확인과 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태를 방관했을 뿐이기 때문이다.

고 계훈제 선생 민주사회장

▶발인식: 오전 8시 서울대병원

▶영결식: 오전 10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하관식: 오후 2시

마석 모란공원 묘지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시민단체, 보건 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

정부가 국공립병원의 민영화 등 보건 의료부분 구조조정을 가시화함에 따라, 국민건강권이 심각히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정부의 '경영진단조정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 대비한 정부 운영 및 조직개편 시안'을 발표하고, 국공립 의료기관의 민영화 계획안과 보건복지부의 축소 또는 폐지안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계획이 보건복지 정책의 명백한 후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먼저 올해 안으로 국립의료원 및 10개 국공립보건의료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는 책임운영기관은 '경영과 효율'이라는 명분 아래 국공립 의료기관을 재편하는 기관으로, 결국 국공립 의료기관을 '팔기 쉽게' 만들어 민영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공립 의료기관을 민영화할 경우 의료비 인상 등이 예상되며, 이는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건의료를 국민 개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공공의료 분야에조차 '수익 증대를 위한 경영과 효율'이라는 시장논리를 적용한다면 '국민 건강권'은 뒷전으로 밀려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국공립 의료기관 민영화 방침

또한 정부가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복지노동부'로 통합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것도 시민사회의 반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노동부의 실업자 보호기능과 복지부의 취약계층 지원기능이 중복되는 등 여러 업무가 겹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

수는 "보건복지부 기능 축소 주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겠다'던, '국민의 정부'의 당초 목표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인구가 노령화할수록, 실업자와 절대빈곤자가 증가할수록 국민 건강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데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세계 11위의 수출대국이 복지의 핵심요소인 보건의료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자행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보건의료 부문 구조조정 문제가 심각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됨에 따라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단체 대표자회의' 등은 19일 낮 기획예산위원회 앞에서 정부의 공공의료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시민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대대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 발행

98년 하반기(7월-12월) 인권하루소식을 모은 합본 11호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정부 1년간의 인권 상황을 총정리하고 이를 평가한 머리글도 실었습니다. 가격: 1만원/ 문의: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부상·수배에 시달리는 만도기계 노동자들

98년 9월 경찰력 투입 사태 이후 7개월째

지난해 9월 만도기계에 대한 경찰력 투입 사태의 가장 큰 희생자가운데 한 사람인 손성균(당시 만도기계 노조 아산지부 대의원) 씨.

진압봉과 최루가스를 앞세우며 진입한 전경들의 토끼몰이식 진압에 밀려 공장 2층에서 추락했던 그는 아직도 병원(병택시 서울의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날 사고로 허리와 양쪽 다리의 중골(뉘뉘)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던 손 씨는 이제 목발을 잡고 몇 걸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됐지만, 치료가 끝나도 영영히 다리를 짚지 못할지 모르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손 씨의 시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사고 직후 회사 관리자들이 찾아와 정리해고 대상이라는 통보를 했고 손 씨는 결국 1년 6개월 무급휴직에, 감봉 1개월의 징계까지 당했다. 손 씨는 다리가 회복돼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할 지 걱정이 앞선다.

또한 그 동안 치료비를 노조에서 지원해 줬지만 회사측이 노조비를 기압류함에 따라 2개월 전부터는 치료비 지원마저 끊겨 버렸다. 최근 손 씨는 국가의 강제진압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담당의 치료비와 생계까지 버거운 형편이다. (0333-681-2922)

한편, 7개월 제 수배생활 중인 김희준 노조 사무국장 등 노조 간부 3명도 만도기계 사태의 상처를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지금도 명동성당의 천막농성장에서 △조합비 가입료 해제 △부상자 치료 △수배해제 등을 요구하며 외로운 투쟁을 벌이고 있다.

만도기계 사태는 지난해 7월 회사측의 일방적인 인력감축 방침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회사는 일방적으로 고용안정협약을 파기하며 1천90명의 인력감축 안을 노조에 통보했다. 결국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맞섰고 이에 대해 정부는 9월 3일 전격적으로 경찰력을 투입해 1천8백47명의 조합원을 강제 연행하고 32명을 구속, 2백50명을 불구속 수사하면서 사태를 일단락 지었다(본지 98년 9월 4일자 참조).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19일(금)

제 133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사회운동단체 또 정치사찰 의혹

"단체 회원에 프락치 활동 요구했다"

지난 16일 청년진보당 정당연설회장에서 경찰의 사찰행위가 발각된 데 이어, 18일 서울의 한 청년단체도 경찰의 사찰 의혹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는 등 진보적 사회운동단체에 대한 정치사찰 시비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청년노동자단체 '일하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동체'(이하 공동체)는 최근 경찰이 계속해서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오며 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 단체를 탈퇴한 김 아무개 씨는 지난 12일 노랑진경찰서 정보2계 안성운 형사로부터 "상반기 노조활동이 치열해질 것 같아 단체들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씨는 또 안 형사로부터 "단체 회비를 내줄 테니 정보를 가져다 줄 수 있나? 정보를 줄 경우 보호해주겠다"는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6일 다시 전화를 걸어온 안 형사는 "단체 회장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김 씨가 이를 거절하자,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책임질 수 없고 과거 자료를 토대로 당신도 유일 수밖에 없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김 씨는 말했다. 반면, 안 형사는 "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직교사인 김 씨를 만났을 뿐, 협박은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며 이를 부인했다.

공동체는 94년 결성된 지역 청년노동자 단체로 영화모임, 사회과학술모임, 공개강좌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 97년에도 공안당국의 사찰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한 회원은 "당시 공동체에서 마련한

노동강좌의 수강생 가운데 한 명이 홍재동 대공본실 요원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고 말했다.

군외문사 유족, 빚속 집회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

1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아들들 군대에서 잃은 유가족 40여 명이 모여 '사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아들을 도둑맞은 것 같아서 허탈감과 참담한 심정으로 온 가족이 암흑에 묻혀 살고 있다. 그러나 아들의 사망

의혹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들이 목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멈출 수 없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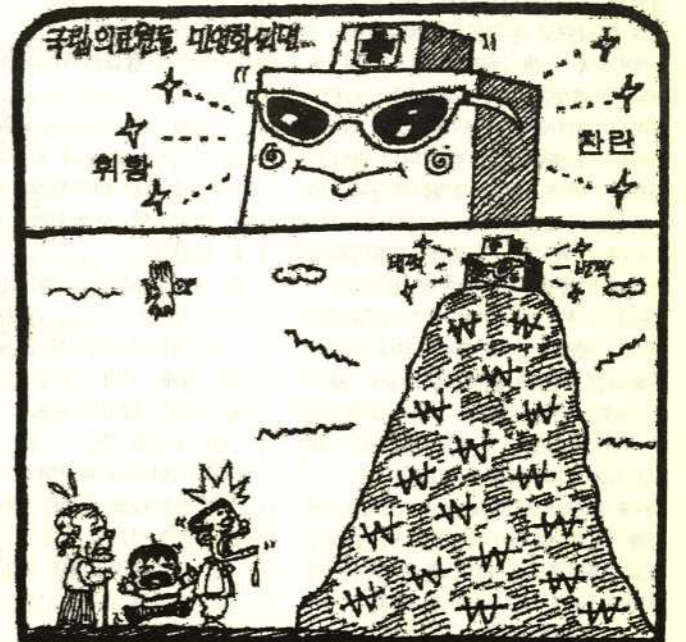
97년 여름 군 입대 후 70여 일 만에 주검이 되어 돌아온 고 김찬수 이병의 아버지 김광수 씨의 절규가 굶은 빚줄기를 뚫고 울려나왔다.

현 소복차림에 자식의 영정을 든 어머니들도 한결같이 "억울하게 죽어간 우리 아들들의 사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은폐된다면, 앞으로도 군대 내 사망은 늘어날 것"이라며 "앞으로 군대에 가는 또 다른 우리의 자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군대 내 자살사건의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명예와 목숨이 대우받지 못한다면 이제 누가, 무엇을 위해 총을 들겠냐"며 정부를 원망했다.

이날 모인 '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협회' 소속 유족들은 성명서를 통해 △진상규명과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군대폭력 근절 등을 요구했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제네바소식> ① 유엔인권위원회

개막 앞둔 제55차 유엔인권위

오는 3월 22일부터 6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55차 유엔인권위 회의가 진행된다. <인권하루소식>은 매주 1회씩 유엔인권위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제네바소식을 전한다(편집자주).

무장한 군인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제네바의 유엔 회의장. 이는 오잘란의 납치에 항의하며 세계 각지에서 전개되고 있는 쿠르드족의 시위·점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이 풍경은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직면하고 있는 99년 인권 현실의 한 단면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전개될 이번 인권위는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온갖 차별과 폭력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인권위 기간 중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이는 이번 인권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한편 인권위의 개혁과 관련해 제54차 인권위 의장단의 보고서가 제출돼 정식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13년간의 오랜 논쟁 끝에 지난해 채택된 '인권운동가 보호에 대한 선언'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하는 것 또한 올해 인권위의 중요한 과제다. 이와 관련, 국제인권단체들은 인권운동가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도록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북아일랜드 인권운동가 로즈메리 벨슨이 폭탄 테러에 의해 희생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끊이지 않는 구속·고문·실종·살해로부터 인권운동가를 보호할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올해 인권위의 의제는 총 21개로 구성돼 있다. 나라별로 보면, 키프러스, 콩고민주공화국, 버마, 르완다 등 15개국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

적 자유와 인권침해 문제'라는 의제 아래 공식적으로 다뤄진다. 여기에는 현재 코소보를 둘러싸고 무장 분쟁과 대량의 인명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옛 유고슬라비아, 인도네시아 정부의 독립 허용 발표 이후 구체적인 독립 혹은 자치의 경로가 논의 중인 동티모르의 인권침해 문제도 포함된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신장과 보호'의 문제 또한 전체 의제 가운데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제3세계 민중들에 많은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논의도 예정돼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이밖에도 ▲폐기물과 유해 물질, 쓰레기의 불법적인 운반과 폐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먹을 권리 ▲발전권과 관련해 의제가 미치는 영향 ▲인권과 극단적인 빈곤 등의 주제가 인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또 개인의 제소를 가능케 할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조약 선택의정서 초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이와 관련, 국제법률가위원회(ICJ)는 선택의정서에 관한 논의를 돕기 위한 실무분과의 설

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번 인권위는 2001년 열릴 예정인 인종주의에 관한 국제회의의 준비위원회라는 성격 또한 지니고 있다. '인종주의에 관한 국제회의'는 세계 곳곳에서 집중하고 있는 인종 및 종족간의 분쟁과 서구 선진국들에서 악화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차별이 그 주요한 배경이다.

시민·정치적 권리 분야에서는, 인권소위원회에서 '감정적 실종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국제 조약' 초안이 완성돼 인권위원회 회원국들 간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다.

주요 국제인권단체 중 하나인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인권위에서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강력한 결의문이 채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알제리, 캄보디아, 터키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권침해 문제를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앰네스티는 밝혔다. 또 미국의 사형제도·감옥 인권·망명자에 대한 구금의 문제 또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아태지역 민간단체 촉진팀'은 이번 인권위 기간 동안 특별보고관의 신임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4월 15일에는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들과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과의 만남이 예정돼 있다.

(제네바: 이주영)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의의제

2. 의제 채택 (Adoption of the agenda)
5. 인민 (peoples)의 자결권과 식민지, 외국의 지배 내지 점령 하에 있는 인민들에 대한 인민자결권의 적용
6.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증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
7. 발전권
9.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
 - (a) 키프러스(Cyprus)에서의 인권 문제
 - (b) 경제사회이사회의 결의안 1503호에 따라 설치된 제소절차
10.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11. 시민·정치적 권리
 - (a) 고문과 구금 (b) 실종과 즉결처형 (c) 표현의 자유
 - (d)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 불처벌 (e) 종교적 불관용
 - (f) 비상사태 (g) 병역에 대한 양심적인 거부
17. 인권 신장과 보호
 - (a) 국제인권조약의 가입국 현황 (b) 인권 운동가
 - (c) 정보와 교육 (d) 과학과 환경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20일(토)

제 133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햇볕정책, 등잔 밑 무관심

탈북여성 대부분 "남한 정착 어려워"

19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수석대표 이우정) 주최로 <북한이탈 여성 생활실태 조사결과 발표와 지원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98년 9월 현재 탈북 입국자는 927명이며 그 가운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여성은 10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탈북자의 수는 90-93년까지 평균 8.5명 정도의 규모를 보이다 94년부터 급증하기 시작, 97년 한해에만 86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탈북 후 남한에 입국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지만, 탈북주민 대부분이 남한 사회에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주민 조연희 씨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정불화가 끊이지 않으며, 물

질만능사회인 남한사회다 보니 돈이 없다는 이유로 마음의 상처와 소외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국내 입국 탈북자들을 수용 조사하는 곳인 대성공사의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95년 12월 탈북한 이순옥 씨는 "남한에 입국한 뒤 초기 3-4개월간을 대성공사에서 남비하게 된다"며 "그 기간에 차라리 직업교육이라도 받는 것이 탈북자들에게는 더 절실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실태보고에 이어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자들도 탈북자들의 국내 정착을 위해서는 일회성 정착금보다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 수 있게 직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경옥(통일여성지도자회) 씨는 "탈북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어도 2년간의 보호관찰기간에 걸려 도울 방법이 없고 이들과 접촉할 채널

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여성 조연희 씨는 "남한여성이 북한여성을 보는 눈은 저급한 미개인을 보는 것 같다. 지금은 소수의 탈북자가 남한에 있어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나중에 다수가 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 주민을 무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절대 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햇볕정책을 펴고 있는 김대중 정부도 정착 등잔 밑의 어두운 현실은 모르고 있는 듯하다.

"보안수사대 해산하라"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

지난 16일 보안수사대의 청년진보당 사찰 사건과 관련,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19일 성명을 발표, "사찰 책임자의 처벌과 보안수사대의 해산" 등을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청년진보당을 사찰하던 보안수사대 기관원의 소지품에서 서울대 사학대 학생회 간부들을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고, 사진 뒷면에는 '1999. 1. 15. 08:10 경 녹두거리'라는 메모가 발견되었다"며 "이는 군사독재 시절 비이성적으로 자행되었던 학원사찰이 '국민의 정부'에서도 비열하게 지속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3월 17일 여야 총재회담에서 '정치사찰은 어떤 경우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정치사찰과 학원사찰이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에 참담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또 "이번 사건을 통해 보안수사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품게 된다"며 "과거와 같이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과업을 수행하는 보안수사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가 쓰여야 한다는 것은 가슴아픈 역설"이라고 주장했다.

행사의 동정

- <인권문화제> 정치수배자와 양심수에게 자유의 불을!
 - 3월 20일(토) 저녁 7시부터 /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
 - 주관: 수배자가족협의회,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
- <공청회> "400만 실업시대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
 - 3월 22일(월) 오후 1시-4시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 주최: 전국노점상연합회
- 대인지리금지 및 피해자 보상 촉구 시위
 - 3월 24일(수) 오후 2시 / 광화문빌딩 앞
- 대인지리 피해자 기자회견
 - 3월 24일(수) 오후 3시 /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1층 프란시스코
 - 주최: 한국대인지리대책회의 (02-312-3317)
-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재판
 - 3월 22일(월) 오후 2시 / 부산지방법원 103호 법정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김완희(울산연합 선전국장)

작년 7월 '영남위원회' 사건으로 구속된 울산여성회장이 이은미 씨는 1심에서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현재 부산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이은미 씨는 구속 전 허리디스크를 앓아 수년간 치료를 해왔다. 평소에도 허리가 아파 제대로 앉아 있기도 어려운 상태였는데 구속된 이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데다가 열악한 구치소 환경 때문에 병이 더욱 악화되었다. 이제 혼자서는 허리를 펴고 걷지도 못해 정상적인 수감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부산구치소측에 여러 번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은미 씨는 부산 백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진단결과 전문의는 환자의 고통을 줄일 수 없는 중증 디스크이므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구치소측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구치소측에서는 수술을 하되 수술 후 겨우 10여일 가량의 입원치료만을 허용한다고 했다. 디스크 수술은 절대안정이 필요한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수술을 받게 되면 부작용이 우려되었다. 결국 가족들과 변호인은 허리수술을 하되 안정적인 치료를 보장받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은미 씨의 수술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구속집행정지' 탄원서를 내고 1천만 원이 훨씬 넘는 수술비를 모금하며 하루라도 빨리 수술이 이루어져 이은미 씨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길 기대했다. 그러나 뇌물수수나 부정비리를 저지른 정치인이나 재벌총수들은 병보석으로 잘도 내보내주면서, 환자의 고통과 가족들의 바램을 외면한 채 재판부는 법원의 인사이동을 핑계로 지금까지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렇게 계속 늦추어지고 있는데 이은미 씨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얼마 전 '자궁하수증'이라는 병을 하나 더 얻게 되었다.

인제나 이 땅 여성들의 자주적인 삶을 위하여,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이은미 씨는 21세기를 앞두고 국제적으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구속 당시 남편(임동식, 전진2001 사무국장)과 여동생(이희, 금속연맹 울산본부 선전부장)이 함께 구속되는 바람에 네 살 난 딸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온 이은미 씨의 아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은미 씨는 하루하루를 초인적인 힘으로 버티내며 차디찬 감옥 안에서 구치소 내 인권과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

'영남위'사건 대책위에서는 성명서, 기자회견을 조직하고 법원 항의방문, 집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은미 씨가 하루라도 빨리 수술을 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함께 싸우자.

군산노동사무소 농성 노동자 구속 농협개혁 촉구시위 농민 구속

군산노동사무소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염경석 민주노총 전북본부장 등 군산지역 노동자 14명이 지난 17일 경찰에 의해 모두 연행됐으며, 그 가운데 김연태(군산지역 투쟁사업장 연대회의 의장, 군산대 노조 지부장) 씨와 최재석(민주노총 군산시지부 조직부장) 씨에 대해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군산 노동사무소가 사업주와 결탁해 편파행정을 해왔으며, 특히 기아특수강 해고자들의 체불임금에 대한 문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지난 15일부터 점거 농성을 벌여 왔다(관련기사 3월 10일자 2면).

또 농협 개혁과 부채탕감 등을 요구하며 18일 농협중앙회 앞에서 집회를 가졌던 농민 58명이 경찰에 연행됐으며, 그 가운데 유상욱(전농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전성도(전농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정광훈 전농 의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반었다.

전농 총무부장 소희주 씨는 "합법적인 집회에 대한 경찰력 투입과 지도부 검거는 앞으로 계속될 전농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계획된 탄압"이라며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농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된 농협 개혁을 위해 계속 해서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부치 일본 총리 방한 반대 시위 어업협정 백지화·과거사 해결 등 촉구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 이를 반대하는 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잇따랐다.

19일 오전 10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민권공대위(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홍근수 등)는 "일본이 과거청산, 어업협정 등 풀어야 할 많은 난제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본 총리의 방한기간 동안 모든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민권공대위는 이어 △일제침략과 수탈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 사과표명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공개, 책임자 처벌, 공개사죄, 보상조치 △불평등한 한일어업협정의 전면 백지화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위한 북한문제 왜곡 중지 △납북한 이간정책 포기 △미일방위협력지침 전면 백지화 △해개발 중단 △한일군사공조음직임 중단 △전역미사일 방위체계 구축 중단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 중단 등을 오부치 총리에게 요구했으며, 이 같은 주장이 담긴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했다.

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19일 용산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오부치 게이조 일본총리 방한 반대 집회를 가졌으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역시 20일 낮 탑골공원에서 오부치 총리 방한 반대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23일(화)

제 133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통수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

정부·여당이 22일 밤 국가인권기구 설치와 관련된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초 이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인권법 최종안은 법무부와 여당간의 기습적 밀실합의를 통해 확정된 데다, 그 내용에서도 법무부의 인권위 개입 가능성을 계속 남겨둠에 따라 민간단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번 인권법 최종안은 김원길 정책위 의장의 경질과 이기문 인권위원장의 의원직 상실 등 국민회의측 전문가들의 낙마를 틈타 결정됐다는 점에서 '비열한 기습'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김 전 의장과 이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강조했으며, 법무부와 줄곧 대립된 입장을 보여온 인사들이었다. 특히 최근 김 전 의장과 이 위원장이 인권위 설치문제에 있어 민간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공개적 논의를 약속해 왔음에도, 신임 장영철 정책위 의장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이를 무시한 채 전격적인 합의를 이뤄냈던 것이다.

이렇듯 국민회의 내 인권위 전문가들의 공백을 틈타 결정된 인권법 최종안에는 담초부터 '민간특수법인' 형태의 인권위 설치를 고집해온 법무부측 입장이 결국 관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 기자회견!

인권법 최종안 확정에 따른

민간단체 입장발표

▶ 때: 오늘 오전 11시 30분

▶ 곳: 참여연대

즉, 국내 인권정책을 법무부가 주도하고 인권위원회는 단지 틈새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한다는 이른바 '틈새기구'적 위상이 유지된 것이다. 이는 인권위원회의 준헌법기구적 성격을 강조해온 민간단체측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상이다.

인권위 준헌법기구 위상 배제

물론, 인권법 최종안이 담초 법무부 안에 비해 법무부의 개입범위를 다소 축소하는 것은 사실이다. 예산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개진 절차와 인권위원회 설립정관의 변경 시 법무부장관의 인가권을 삭제한 부분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권위원 선임에 있어 국무총리 몫으로 주어진 3명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 절차를 남겨둔 점 등은 법무부의 입김을 방지할 수 없도록 하는 독소조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민간특수법인으로 설치함에 따라 인권위 직원을 파견공무원과 계약직 민간인으로부터 구성, 전문성과 책임성을 지닌 전속공무원을 두지 못하게 된 점 △인권위원 9명 중 4명만을 상임으로 둔 점은 인권위 활동의 약체화를 가져올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무부가 최종안 확정 과정에서 밀실합의의 구태를 선택한 것은 향후 인권위 설립과정의 주도권을 법무부가 계속 장악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돼 각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는 23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인권법 최종안 확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로 했다.

동아리가 이적단체 탄압

과기대생 국보법 혐의 구속

국가보안법 개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재, 당국이 또다시 학생운동 전력자들을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16일 대전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한국과학기술원(과기대) 출신 양정은(94학번) 씨와 문경환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97년, 총학생회 산하에 '아침햇살'이라는 지하조직을 만들고 한총련에 가입·활동하는 등 이적단체 구성·가입·고무·찬양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대 학생들은 "아침햇살은 98년 여름까지 활동한 총학생회 산하의 공개 동아리이고 주로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소식지를 통해 배포했다"며 경찰이 또 하나의 사건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민 집회 연일 계속

노동·사회단체들 연대

지난 18일 열렸던 농민대회 이후, 농민·사회단체의 정부규탄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22일 낮 12시 여의도 국민은행(구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집회를 가진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구속된 유상욱(전농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씨 석방과 협동조합 개혁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은 "협동조합 개혁을 올바르게 하자는 농민의 간절한 요구는 저버리고 새로운 간부가 들어서자마자 구속, 탄압으로 조직력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재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

공공근로에 종사하는 실업자가 노점상 단속에 동원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한편에선 IMF이후 이동형 노점상의 증가로 최근 소형트럭의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동병상련 처지의 실업자들마저 동원해 노점을 단속하고 있지만, 이처럼 생계형 노점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점상 문제는 더 이상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대량실업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전국노점상연합 주최로 'IMF 실업과 노점상 (400만 실업시대, 노점상 다시 생각한다)'을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다.

고민택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씨는 '김대중 대통령은 구조조정이란 이름으로 부실 대기업에게는 100조 이상의 돈을 쏟아 부으며 지급보증까지 해주면서도, 생존권 문제로 거리에 몰린 가난한 노점상에게는 단속을 통해 벌금 20-30만원, 과태료 1-50만원씩을 징수하고 있다'며 "현 정부는 생존권에 대해 합법의 이름으로 철퇴를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영남 (전국노점상연합 의장) 씨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점상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가칭)노점상 생존권보장을 위한 임시조치법' 또는 '노점상차치법'을 만들어 노점상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89년 이후 지정된 서울시내 노점상 절대금지구역 가운데 142개 지역 및 전국의 포장마차 8천여 개를 풀면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명의 노점상이 증가해 실업자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옥 (전 시정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씨는 "단속, 저항의 반복보다 노점상의 카드등록제를 도입해 장기적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노점 가능 위치를 파악해서 허가제로 양성화해야 하며 소득 조사작업을 통해 장기적 대안을 마련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노점상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청회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주요공판안내

- ▶ 3월 23일 (화)
 - 남봉수 (국가보안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4호, 합의5부, 선고
- ▶ 3월 24일 (수)
 - 이장희 외1 (국가보안법) 오후 5시, 서울지방법원 524호, 4단독, 속행
- ▶ 3월 26일 (금)
 - 백성기 외3 (국가보안법 찬양·교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합의4부, 속행

주간인권호름

(99년 3월 15일-3월 21일)

1. 형평과세 또 뒷걸음질
정부, 과세특례제 폐지방침 철회 (3/16)
2. 못 말리는 정치사찰 버릇
경찰청 보안수사대 기관원, 청년진보당 정당연설회에서 사진 및 자료 채증 도중 덤미 잡혀 (3/16)
3. "이적단체 남발 말라"
서울고법 형사5부, 천리마 노래단에 가입해 북한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른 혐의로 기소된 김 아무개 씨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 무죄 선고 (3/17)
4. 수혜민들 국가에 손해소송
의정부 주민 410명, 지난해 8월에 입은 수해 피해와 관련 47억원의 국가배상 신청 (3/17)
5. 왕따 학생 최고량
포항남부경찰서, 같은 반 친구를 매일 때리고 돈을 뺏으며 괴롭힌 심 아무개 군 등 중학생 5명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3/19)
6. 제게 "고용안정 쉼 말이나?"
경총, 노조와 고용안정협약을 맺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99년 단체협약체결지침을 확정해 전국 3천여 개 사업장에 배포 (3/19)
7. 목숨 앓아간 군내 가족행위
"고참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해군 함상에서 쇠파이프로 구타당한 신창병 사망 (3/21)
8. 백신가격 인상, 어린이 접종소홀 우려
제약업체들이 영유아용 기초·예방백신을 지난해보다 최고 4배 비싼 가격에 공급키로 함에 따라 어린이들이 제때 예방접종을 받지 못할 가능성 우려돼 (3/21)

◆ 수지로 본 인권 ◆

- 초중고 결식학생, 1년 전에 비해 5배 많아진 15만 1375명으로 나타나
- 노동부 분석결과, 지난해 산업재해율이 97년보다 0.13%포인트 줄어든 0.68% 기록했으나, 사망재해는 전체의 4.3%를 차지해 0.2%포인트 늘고, 중상해 재해도 전체의 42.0%에서 50.2%로 늘어나는 등 재해강도는 높아진 것으로 분석돼 (3/18)
- 중앙노동위원회 집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1월 한달 동안만 335건 접수, 지난해에서 넘어온 건수까지 합하면 모두 992건
- 한국여성민우회, 대졸자 346명 조사결과 정규직 취업 18.2%, 인턴사원 7.8%, 임시직 취업 5.2%, 공공근로 참가자 4.6%, 전체 미취업자 60.1%

인권시평

인권운동가의 죽음

이성훈(팍스로마나 사무총장)

S선배님께, 바쁘시죠. 제네바의 3월은 저희 인권운동가에게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세계인권총회'라고 불리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올해에도 이번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이곳 제네바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가톨릭 인권단체인 팍스 로마나(Pax Romana)도 페루,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인도, 잠비아, 콩고 등 여러 나라에서 이번 회기에 참석할 약 10여명의 인권운동가를 초청하고 이번 회기 중 발표할 발언문을 손질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소식(3월 19일, 제네바소식 참조)에서 이미 보도했듯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에도 인권위원회에서 수많은 인권문제가 다루어집니다. 이번 회기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직접 참석해 연설할 예정이고,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도 한국정부를 대표해서 처음으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50주년 직후에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인 만큼 기대가 높고 시기적으로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헤라르디 주교

이번 달 내내 여러 인권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전세계에서 온 많은 인권희생자와 운동가를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파테말라에서 온 마리오 리오스 몬트 주교와의 만남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주교님은 S선배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4월 준군사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헤라르디 주교의 후임으로 현재 파테말라의 인권위원회를 대표해 이번에 제네바를 처음으로 방문하셨습니다.

로메로 대주교에 관한 영화를 통해서 알바도르의 80년대 인권현실이, 지난 92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리고베르타 멘추 여사를 통해 파테말라의 원주민 인권현실이 국내에 어느 정도 소

개되었지만 아직 중미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헤라르디 주교님은 이곳 인권위원회에 잘 알려진 인권운동가였습니다. 그 분은 최근 수년간 저희 단체의 초청으로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여 파테말라의 인권상황에 대해 발언하고 국제적 연대와 지원을 호소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약 2년간의 조사작업을 토대로 '이제는 그만(Never Again)'이라는 종합적인 파테말라 인권보고서를 작성, 작년 4월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교님은 이 보고서의 내용과 결론에 분개한 군부의 사주를 받은 집단에 의해 발표 다음 날 숙소에서 참혹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 회기 중 하루를 정해 모든 인권운동가들은 가슴에 그분의 초상을 담은 스티커를 부착함으로써 그분을 기억하고 침묵으로 항의를 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주교님의 후임자인 몬트 주교님은, 제가 신변의 안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자, "저는 주교라 설사 살해를 당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많아 천국에 '곧장' 가겠지만, 정작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게 납치, 실종, 살해되는 '보통의 이름없는' 인권활동가들이다"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십자가의 진리는 부정의한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며 "자신 또한 헤라르디 주교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담담하게 소감을 말하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이 주교님의 동생은 현재 파테말라 군부의 핵심 지도자로 지난 80년대에 군부 쿠데타의 주동자라고 합니다.

이 분과의 짧은 만남을 통해 저는 국내의 대다수 인권운동가가 간직하고 있는 '과거'의 아픈 기억과 상처, 그리고 지금의 부끄러운 현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문민'에서 '국민' 정부까지 왔건만, 아직도 정의는 들켜

치고 진실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인권운동가의 의문사 사건이 특히 그러합니다. 우리 나라에도 헤라르디 또는 몬트 주교같은 지도자가 있다면 이 문제로 겪는 고통이 한층 줄어들 텐데...

십자가의 행진

제가 이분을 만나고 돌아온 다음날 아침 신문에서 또 다른 인권운동가의 의로운 죽음을 보았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저명한 여성 인권변호사인 로즈메리 벨스 씨가 폭탄테러에 의해 인권운동가에서 순교자이자 열사가 된 것입니다. 헤라르디 주교와 벨스 변호사의 죽음은 둘 다 평화협상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모두, 과거를 무조건 덮어둔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화해'가 아니라 '진실과 정의'에 기반한 평화를 온 몸으로 실천하다가 의로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행진이 전세계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인 작년에 유엔 인권위원회와 총회는 '인권운동가 보호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운동가들은 선언의 후속작업으로 인권운동가에 관한 특별보고관 임명을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참 늦었지만, 국내의 수많은 열사들, 그리고 두 분의 희생에 대한 자그마한 위로이자 보상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팍스 로마나는 1921년 스위스에서 국제 가톨릭 대학생의 연합체로 탄생, 현재는 전세계 약 40여개 국에 회원단체를 가지고 있는 국제가톨릭지식인문화운동 단체다. 현재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며 유엔에 협의자격을 가지고 유엔인권위원회 등 인권관련 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24일(수)

제 133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선무당, '인권위' 잡았다

업무파악 못한 정책위의장이 덜컥 합의

밀실합의를 통해 22일 전격 발표된 인권법 최종안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번 최종안 결정에 합의한 국민회의측 관계자가 아직 업무파악도 안된 장영철 신임 정책위의장이라는 사실이 민간단체들을 경악·분노케 하고 있다. <관련기사 본지 3월 23일자>.

31개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는 23일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가져야할 인권위가 법무부의 야욕과 방해공작으로 인해 만신창이가 되었다"며 "22일 당정협의 결과를 철저히하고

다시 원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된 논의를 통해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창설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민회의 당사를 항의방문, 장영철 정책위의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던 공추위 대표단은 박병서 정책위 부의장으로부터 "신임 정책위의장이 취임한 지 열흘 정도밖에 되지 않아 바쁜 일정 속에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양해해 달라"는 말을 듣고 분노를 터뜨렸다. 이에 공추위 대표단은 "아직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안된 정책위의장이 어떻게 감히 국가인권기구 설치와 같은 중대 사안을 서둘러 처리할 수 있느냐"며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장 의장과의 면담을 요청

하며 농성에 들어간 대표단은 오는 26일 면담에 응하겠다는 장 의장의 약속을 확인하고 당사를 나왔다.

공추위 차원의 대응 외에도 이날 국내 인권·종교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여당을 규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은 성명을 통해 "인권위 설립 논의에 민간단체의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 차례 촉구한 바 있지만, 법무부는 끝내 당정 밀실합의를 통해 인권위원회를 인권기행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불교인권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부산불교인권위 등도 각각 인권법 최종안에 대한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공추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인권법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적단체 사건, 이번엔 동서대 졸업생 등 10명 긴급체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행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번에는 부산 동서대가 주무대.

지난 22일 밤 부산시경 보안수사대는 하동근(99년 졸업) 씨 등 10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작년 3월 같은 학교 학생 30여 명과 함께 "민족21 창립 애국가 대회를 개최하고 '동서대 활동가 조직 자주대오'를 결성, 「새내기 한마당 자료집」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이적단체 결성 및 이적표현물 제작·반포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행된 하동근 씨는 "동서대 자주대오 민족21은 학원자주화를 위해 지난해 3월 결성되었지만 별다른 활동이 없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권의 책

「당신을 땅에 묻고」

김수룡/1997년

출소 장기수 김수룡 씨가 손수 제작한 시집이 김 씨의 손에 들려 직접 배급되고 있다. 20여 년간 옥살이의 간난신고를 담은 51편의 시가 지인들의 격려와 도움을 받아 「당신을 땅에 묻고」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뒤 세상과 만나고 있는 것. 김 씨는 53년 북한 정치공작원으로 체포되어 긴 세월 옥고를 치렀다. 「남편 오랜 옥살이에/일편단심 민들레를/노래 삼아 벗 삼아서/독수공방 홀로 지새」(당신을 땅에 묻고)은 아내를 92년 사별한 김 씨는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시를 짓기 시작했다.

시집에는 가족사, 감옥생활, 혁명에 대한 신념 등이 '아내에 대한 정'과 동량으로 다루어져 있다. 쉽게 또박또박 써 내려간 김 씨의 시를 통해 현대사의 아픈 기억들도 되살아난다. 김 씨는 아버지가 "평화운동 통일운동 하느라고/집에 머무르는 일"(아버지의 참모습) 없어 편모 슬하에서 크지만 사이클 선수로서 "아시아 정복이 발 밑 페달 위에"(좌익수와 아들) 있었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김포공원에서 "난데없이 한 신사가 다가와서/ 이름을 묻고는 "출전금지"/일등은 경악 항의 요구 애원한다/땀수고/좌익수의 아들은 출국할 수"(위의 시) 없었던 것이다. (연락처 0342-711-4558)

지뢰피해 민간인 생존자만 최소 30명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없다고 밝힌 정부측 주장과 달리, 국내에서 대인지뢰 피해를 입은 민간인은 97년 현재 생존자만 최소 3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97년부터 경기도 백령군, 연천군, 강원도 철원, 양구 지역에서 대인지뢰피해 실태조사를 벌여온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조사팀이 확인한 피해자만 50여 명에 달했고 직접 면접한 피해자만도 30명이었다"고 밝혔다. 대인지뢰대책회의는 또 "한국전쟁 이후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는 최소 1천명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대인지뢰 피해는 매설지뢰 뿐 아니라, 폭우 등에 의해 유실된 지뢰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8월 인천 서어도에서는 신아무개 씨가 유실지뢰를 밟아 발가락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80년대 중반 지뢰피해를 입은 강화도지역 주민들은 홍수만 만나면 섬 전체가 불안에 떠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인지뢰 피해는 또 매설지뢰에 대한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강원도 철원지역의 한 마을에서는 마을 앞 어귀에서 지뢰가 발견될 정도로 매설지뢰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마을주민들은 "지뢰사고가 무서워 냇가에도 나가지 못하고 아이들이 나가서 놀 때는 반드시 어른들이 동행하는 등 마을 전체가 지뢰공포에 시달리고 있다"고 실태조사팀은 밝혔다.

피해보상 거의 없어

이처럼 대인지뢰에 의한 민간인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정작 피해자들은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 주민들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탓이기도 하며, 정부를 상대로 싸움(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는 탓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재수가 없어 다쳤다"는 식으로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보상을 원한다 하더라도 지뢰사고의 보상시효가 3년에 불과하다는 점이 피해보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인지뢰피해 실태조사팀의 고동실(한국교회여성연합회 간사) 씨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다 보면 1-2년이 지나가게 되고, 정신을 차려 보상을 신청하려해도 이미 기간을 지나쳐 버리게 된다"며 "보상시효를 넘긴 피해자들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영남위원회 사건 항소심 공판 개시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영남위원회'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22일 부산지방법원(고등형사2부 손기식 부장판사)에서 열렸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구속된 박경순 씨 등 15명의 피고인들에게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및 회합 통신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15년에서 3년의 중형을 선고했으며,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이날 항소심 1차 공판에서는 피고인 박경순(1심 선고 징역 15년), 김이경(8년), 김명호(5년), 방석수(5년), 이은미(4년), 홍정련(3년) 씨의 모두 진술과 변호인의 심문이 진행됐다. 김명호 씨는 "지금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며 "검찰의 어설피고 허술한 억지주장과 불법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단호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 심문 없이 변호인 심문으로만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측에 "피고인들이 합소이유서를 통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입증해 달라"며 "녹취테이프의 증거능력 여부가 중요

고동실 씨는 또 "지뢰피해는 잠재적 위험성이 너무 심각한 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동안 피해자 보상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는 24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빌딩 앞에서 '대인지뢰금지 및 피해자 보상 촉구' 시위를 갖기로 했으며, 오후 3시에는 대인지뢰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대인지뢰대책회의는 이어 4시부터 총회를 열고 올 한해 대인지뢰금지 캠페인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인지뢰대책회의는 올 7, 8월경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11호 판매

가격 1만원/ 문의: 02-741-5363

한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19명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영장내용과 집행일지를 제출하고 실제 불법적인 것이 행해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어떻게 감청을 했기에 이처럼 녹음상태가 불량한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은 감청에 사용한 감청기계와 방법을 자세히 정리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반제청년동맹의 강령과 규약을 영남위원회가 계승했다는 주장 △암호디스크를 어떻게 출력했는지 여부 등을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은미씨, 누워서 재판

한편 허리디스크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이은미 씨는 들것에 실려 재판장에 입장, 재판과정 내내 누운 상태에서 진술을 했다. 재판부는 2월 19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 씨에 대해 23일 부산대법원에서 진단을 한 뒤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4월 12일(월) 오후 2시.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25일(목)

제 133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

92년 우리 정부가 '난민지위에 관한 국제조약(난민조약)에 가입하고 94년 출입국관리법을 손질한 이래, 현재까지 한국정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은 모두 51명에 달하지만, 그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 51명 가운데 42명은 거부를 당했고 9명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중이다.

현재 난민 인정 심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엔 지난 1월 중순 관광객으로 입국했던 중국인 서파(38) 씨도 포함되어 있다. 서파 씨는 중국에서 「홍색과소」라는 책을 저술했다가 적발되자 박해를 우려해 한국으로 도피했고, 현재 외국인노동자센터에 머물며 난민신청협의회(법무부 등 7개 부처 참여)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파키스탄인 알리 키르마니 씨는 자국 내에서 이슬람 종파 간의 갈등과 테러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97년 한국에 입국했으며, 곧 난민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키르마니 씨는 "고국에서 도저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며 "한국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야할 지 모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정부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미미하다. 난민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이 너무 고자세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난민신청을 냈던 이랍인 J씨는 "박해의 내용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인정을 거부당했다.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자국으

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는 J씨는 합법 체류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이면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와 관련, 법무부 입국심사과의 김관준 계장은 "난민 신청자들이 박해의 내용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난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자 대부분은 불법체류자로서 한국에 좀 더 머무르려는 수단으로 난민신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찬운 변호사는 "본인이 박해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엔 한계가 있

을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의 입장에서라면 국제적으로 유명한 사람들만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의 박천웅 목사도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도 수용하지 않으면서 중국의 탈북자 수용자세만 문제삼는 것은 옳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국제조약에서 말하는 난민>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갖는 자... (난민조약 제1조)

"북한지뢰에 다쳤으니 배상이 안된데요"

대인지뢰 피해자 기자회견

"지뢰밭도 아닌데 지뢰가 있더군요. 콩 밭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지뢰가 터진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어 바지가랑이를 끌어들여 지뢰를 했어요. 웃은 모두 찢겨 나가 알몸인데 마을까진 2Km 자갈밭을 기어 나와야 해요. 그러다 죽겠다 싶어 풀밭으로 기어 군부대 쪽으로 갔지요. 거기서 소독약만 바르고 12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을 할 수 있었어요." 경기도 연천군 두현리에 살고 있는 김일복 씨(66세)는 3년 전 발목이 잘려나가는 변을 당했다.

24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대인지뢰 피해자들은 대부분의 지뢰사고가 김 씨의 경우처럼 지뢰밭이 아닌 곳에서 발생한다고 증언한다. 하지만 정부는 지뢰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기 일수다. 김일복 씨에게 군은 "북한지뢰에 의해 다쳤으니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하며 후속조치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했다. 국가를 상대로 2천만원 정도의 배상을 받았지만 평생 불구로 살아야 하는 김 씨에겐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될 수 없다. 그나마 이 지역 피해자 21명 중 국가 배상을 받은 경우는 김 씨 뿐이다.

피해자들은 또 국가가 지뢰 제거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24년 전 밭을 개간하다 사고를 당한 장동용(63세, 강원도 철원군) 씨는 "허가만 해주면 우리나라도 지뢰를 제거하겠다"고 한다. 어떻게 지뢰를 후대에까지 물려줘 자손들을 '병신'만들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사례 발표 후 정부에게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후방지역 대인지뢰 매설현황, 유실현황, 제거방안 공개 △민간단체와 같이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제네바소식> ② 유엔인권위원회 첫 주

"발전·극단적 빈곤문제 논의"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가 53개 회원국, 150여 개 국의 정부대표와 정부간기구, 유엔 전문기구 및 민간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본부에서 개막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은 개막 연설을 통해 날로 증가하는 무장분쟁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권위원회는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긴급히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 로빈슨 인권고등판무관에 따르면,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무장분쟁의 희생자 가운데 90%가 일반 시민이다.

이번 55차 인권위원회 의장에는 앤더슨 아일랜드 대사가 선출됐다. 이는 지역별 순환원칙에 따른 것이다.

앤더슨 씨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행사를 상기하며 "이번 회의는 지난해 내뿜은 각국 정부의 약속들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발전, 인종주의, 극단적인 빈곤 등 20세기 말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인권적인 관점에서 올바르게 응답해야 할 과제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회의 이틀째인 23일에는 ▲진행일정 결정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보고와 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후속사업에 대한 보고 등이 논의됐다. 진행일정 결정과 관련, 스리랑카, 인도, 인도네시아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인권위원회 활동 및 운영 제도의 개혁'(의제 20)에 큰 관심을 보이며, 공개적인 실무분과의 설치 및 결정의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의제 20은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

아래 54차 인권위 의장단이 제출한 제안 보고서를 토대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상당한 변화를 제안하고 있어 많은 논쟁이 예상된다.

이밖에, 공식적인 회의 이외에도 점심 시간마다 민간단체들이 주최하는 갖가지 행사들이 진행돼 본회의 못지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22일에는 국제엠네스티의 기자회견을 비롯해, '인종주의에 관한 국제회의'를 민간단체 차원에서 준비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으며, 23일에는 '분쟁 방지에 기여하는 인민자결권의 행사'(다음 호에 소

개)를 주제로 논의가 이뤄졌다.

(제네바: 이주영)

인종차별철폐위 최종견해 채택

이달초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인종차별 문제를 논의한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19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우선, 인권법을 제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려는 한국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한국정부가 "인종, 피부색, 출신, 또는 민족적·인종적 기원에 근거한 차별을 헌법이나 법률을 통해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 않은" 사실에 우려를 표했다. 또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방지를 위해 좀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제네바서 망신

"미국의 인권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첫날 열린 국제엠네스티의 기자회견에서 피에르 사네 국제엠네스티 사무총장은 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추세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1990년 이래로 350명이나 사형을 당했다. 이밖에도 3천5백여 명의 사람들이 사형 대기자 명단에 올라있다. 더구나 그 중엔 18세 미만의 청소년도 포함돼 있다.

경찰의 폭력 또한 심각하다. 저항하지 않는 피의자를 경찰이 구타하거나 총을 쏘는 일이 자주 발생하며 곤봉·화화 스프레이·전기 쇼크 무기 등이 남용된다. 게다가 이 같은 인권침해의 뿌리에는 인종적 차별이 깔려 있다.

감옥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있는 이들 또한 인종적·민족적 소수자들이다. 수천 명의 수인들이 장기간 독방에 감금돼 있으며, 필요한 의약품을 구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다. 게다가 여성 수인들은 남자 교도관들의 성추행의 대상이 되곤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렇듯 유사한 인권침해가 계속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미 정부당국은 이를 방지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정치적 권리 조약 중에서도 중요한 조항들은 유보하고 있다. 게다가 아동권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두 국가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비판할 지인정 '자유의 나라', 미국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인권의 이름으로 비판을 받는 것은 흔치 않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만큼은 미국 또한 비판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엠네스티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인권위원회 기간 동안 알제리·캄보디아·부룬디·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터키 등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와 함께 미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사형선고를 즉각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구독료 내셨나요?

자동이체도 가능합니다.

지로번호 7618848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26일(금)

제 13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사상·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혀온 제7조(교주찬양·이적단체 구성 등)가 대체입법을 통해 사실상 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법무부 국정개혁보고회에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 대책의 핵심은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 입법의 형식과 내용을 연구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박 장관은 “국보법이 완전 폐지될 경우, 직접 폭력에 나설 것을 호소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해 비폭력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같은 박 장관의 보고는 89년 평민당 시절 ‘민주질서보호법’의 입법을 제

안하면서 밝힌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보안법의 대체입법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인식되어온 제7조에 손질이 가해질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 달리, 제7조의 내용이 명칭과 형식을 달리한 채 사실상 존속되는 방향으로 국보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89년 제안된 민주질서보호법은 제4조 ‘민주질서위해의 죄’ 조항에서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제1항) 규정 등 종래의 국가보안법이 갖고 있던 추상성과 모호성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자의적 운용 여지를 고스란히 남기고 있다. 또 비폭력적 선전활동까지 처벌대상으로 들으로써 사상·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국민기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나아가 민주질서

보호법은 ‘북한과 관련없는’ 반정부인 사들에 대해서 ‘반민주주의자’라는 낙인을 찍음으로써 종래의 국가보안법 7조보다 오히려 진보운동에 대한 자의적 탄압을 손쉽게 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아래 상자 참조).

한편 박 장관의 언급은 ‘국보법이 국가안보를 가장해 내부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법률’이라는 그 동안의 비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며, 앞으로도 ‘내부의 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송문제 북한과 대화용의”

홍순영 장관, 유엔인권위 연설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오전 11시(현지시간) 제네바 유엔본부 회의장에서 가진 특별연설을 통해 “지난 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북한출신 사 람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낼 용의가 있다”며 “북한 당국도 북한에 억류중인 남북인사들을 남한으로 돌려보내야 하고 이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의 대화를 갖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또 “북한당국은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조치를 취해 북한 주민들에게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홍 장관의 연설에 북한 대표는 즉각 반론권을 행사, “북한의 식량문제는 자연재해와 외부의 경제봉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이를 정치문제화시키는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또 “남북자는 없으며, 남북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모두 남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홍순영 장관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기본권의 신장을 위한 지침을 이뤄냈으며, 노사정위원회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질서보호법(89년 12월 4일 평민당 제안)

제4조(민주질서위해의 죄)

제1항 : 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1.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을 부인할 것을 선전하거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폐기할 것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의 적대적 활동을 선전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제2항 :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거나 그 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처한다.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4항 :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5항 : 학문·예술의 연구나 역사의 기술에 목적을 두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성질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시 일어서는 분신노동자들

“좌절·망각 딛고 노동해방 투쟁 매진”

‘분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가슴 아픈 과거와 그 상처를 딛고 다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결의로 분신노동자들이 뭉쳤다.

권오영(전 이천택시 노조위원장, 98년 1월 24일 분신) 씨등 분신노동자 9명은 전국분신노동자연합회(가칭)를 결성키로 하고 26, 27일 홍익대학교 앞 푸카(실내포장마차)를 위한 주점을 열기로 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 생존한 분신노동자 수는 대략 전국에 2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그 가운데 강승희(조폐공사 노조위원장, 99년 1월 7일 분신) 송인도(기아자동차, 98년 5월 29일) 최도근(광주 송광교통, 97년 10월 7일) 서상준·이진권(한일합성, 96년 5월 4일) 이종화(인천 경동산업, 89년 9월 4일) 백석호(전국철거민연합, 98년 3월 29일) 방화 부상) 전창욱(광희시장 노점상, 98년 9월 24일) 씨 등이 전국분신노동자연합회 결성에 참여하기로 했다.

전국분신노동자연합회 준비위원장 권오영 씨는 “분신 후 사회로부터 고립

되어 버린 분신노동자들이 이 단체로 집결해 이 땅의 민주화 확립과 노동해방을 위해 어떤 곳도 떠나지 않고 달려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영 씨는 98년 1월 24일 회사측의 노조가입 방해, 연장·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항의하고 완전월급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던 중 회사(삼화운수)측의 폭력에 맞서 분신했었다.〈본지 98년 1월 27일자 참조〉 퇴원 후 다시 택시운전을 하며 택시민주화 투쟁을 하기도 했지만 일그러진 손과 얼굴로는 더 이상 택시운전을 할 수 없는 좌절을 겪었고 결국 지금은 부인이 일용노동자로 생계를 도맡아 책임지고 있는 상태다.

권 씨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분신노동자들은 분신 이후 문제해결도 보지 못한 채 사회로부터 잊혀져 가는 쓰라림을 겪고 있다.

단체 결성을 준비중인 분신노동자들은 앞으로 사무실 마련 등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가야 하는 속에서도, 우리 사회의 중심 구성원임을 자각하는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다.

분신노동자들의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현재 한성대학교 총학생회는 전국분신노동자연합회 건설을 위한 일일주점을 후원하기로 하고 임시 연락전화와 사무실을 제공하는 등 분신노동자 사업에 적극적으로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국분신노동자연합회(준) 출범을 위한 기금 마련 일일주점

-장소: 홍익대 앞 푸카(실내포장마차, 02-3141-8260)

-시간: 3월 26/27일 오후2시~11시

-후원계좌: 외환 275-19-15112-5

(예금주 권오영 ☎ 011-730-2179)

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민권공대위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한 경찰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다.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는 지난달 21일 있었던 민중대회를 방해한 남대문·동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집시법 위반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불법체포, 감금, 독직폭행 등의 혐의로 25일 검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열린 민중대회에서 불심검문을 통해 평화적인 거리행진을 가로막고 이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폭행해 장어무게(명지대생) 씨등 여러 학생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민권공대위는 또 김현수(새날을 여는 실업자 연맹) 씨가 집회도중 불법연행된 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간첩’이라는 자백을 강요받았으며, 이에 항의하다 팔목을 꺾이고 가슴을 얻어맞는 등의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에게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날지기 당정협의 규탄대회

오늘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의원회 당사 앞

주최: 국가인권기구설치 공동추진위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27일(토)

제 133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인권 · 시민단체 분노 폭발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

인권단체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정부·여당이 지난 2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인권법 최종안을 기습적으로 확정 발표한 것과 관련, 인권·시민단체들은 26일 오전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집회엔 31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 소속 활동가 약 90명이 참석했으며, 노동·장애인·동성애자·유가족단체 대표들이 잇따라 규탄발언에 나섰다.

곽노현 공추위 집행위원장은 "어떻게 인권법을 만들면서 인권단체들과 한마디 상의조차 없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인권단체들의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기는커녕, 냉대와 배제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허영춘 유가족 의문사지회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된 인권법안은 겉대기본인 인권위를 만들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임태훈 동성애자 인권연대 공동대표도 "정부는 온갖 생색만 내고 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당정간의 날치기 합의에 대한 분노가 컸던 만큼 발언의 수위도 높았다. 이상영 충북대 교수(법학과)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모두 저버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권좌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경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은 "기대를 품어왔던 김 대통령에게 이제 직격탄을 날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슴아프다"고 말했다. 임기란 민가협 공동의장은 "인권위원회를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법무부를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은 "이제 현장노동자들에게도 인권위 문제를 적극적으로 선전해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각 단체 대표들의 연설에 이어 참석자들은 조세영 총재권한대행과의 면담을 위해 당사 진입을 시도했으며, 이를 저지하는 전경들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공추위 대표단 10여 명은 장영철 정책위 의장과 남궁진 제1정조위원장, 추미애 제2정조부

위원장 등 국민회의 당직자들과 면담을 갖고 날치기 인권법 최종안 확정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전달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당직자들은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변명하며 "당정협의를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회의측은 조만간 당·법무부·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공식적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

27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

민주노총이 전국적 규모의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가 민주노총과 일체의 대화를 단절한 채, 단병호 부위원장 등 26명의 구속수배자를 전혀 사면복권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올해 들어 수십명의 노동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대대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고, 특히 공안대책회의를 구성해 노동조합을 계획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총력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공원에서 조합원 1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집회를 갖고 향후 투쟁의 결의를 모을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협 안정 및 산별 교섭 보장 등 4대 요구사항의 수용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결의대회는 서울, 청주, 대전, 전주, 광주, 창원, 구미, 강릉, 원주, 춘천,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집회를 발판으로 4월 한달 간 투쟁의 힘을 결집시킨 뒤, 5월 1일 노동절을 기점으로 전면적 투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사와 동정

- 장기수 출소 환영 및 문제해결을 위한 작은자리
 - 3월 28일(일) 오후 1시 / 한양대학교 조교식당
 - 주최: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 등
- 주한 미상공회소 99연례보고서 규탄집회
 - 3월 30일(화) 오전 10시 / 롯데백화점 신관 앞(을지로입구역 하차)
 - 주최: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02-778-4001)
- 민가협 제14차 정기총회 및 양심수를 위한 작은 음악회
 - 3월 31일(수) 오후 2시 / 기독교회관 2층 강당(종로5가)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국민의 희망을 무참하게 짓밟은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다. 21세기를 바라보며 어두운 과거와의 단절을 이루어야 했던 새 정권은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모략으로 얼룩져 있다. 저들은 그것을 '협의'라고 하고 '정치'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밀실공작'이라고 부른다. 아니 서슴없이 '모략'이라고 부른다. '인권 대통령'의 이른바 '민주개혁'은 지금 깊이 병들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밤, 정부와 여당은 근 1년 동안이나 끌어온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논의에 기습적으로 마침표를 찍고 '최종합의'에 이르렀다. 이 '최종합의'를 '날치기'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주저함이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의 공론화를 즐기라 요구했던 우리 민간 인권단체들의 주장이 완벽하게 무시된 채 정치권의 밀실에서만 논의가 이루어지고 드디어 '최종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것은 '날치기'였으며, 취임한 지 1주일밖에 안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뭘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국민회의 신임 정책위 의장이 '최종합의'의 당사자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날치기'였으며, 결코 인권침해를 받을 염려 없는 집권여당세력과 과거 인권유린의 원흉이었던 검찰세력이 '인권'을 들먹이며 야합을 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날치기'였으며, 그리고 결국 기형의 국가인권위원회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것은 분명한 '날치기'였다. 도덕도 정치도 의도도 내팽개친 정치인들의 이와 같은 작태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독립성과 실효성을 두 기둥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은 우리가 진정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에 이르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필수적 과제이다. 바로 이와 같은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준)헌법기구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일차적으로 법무부는 이런 위상을 가져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를 자신의 산하기구로 만들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왔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은 지경에 이르자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방해공작을 일삼아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법무부의 후퇴를 '양보'라고 부르는 언론의 물지각함에 우리는 서글픔과 허탈감을 금할 수가 없다. 오랫동안 법무부 안에 맞섰던 김원길 정책위 의장의 경질을 기다렸다는 듯이 타결된 이번 당정협의를의 결과는 이와 같은 법무부의 목표가 대체로 관철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거기에는 법무부의 방해공작으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된 나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이 있을 뿐이다.

예산 신청에 있어서 법무부의 간여를 배제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법무부의 '양보'에도 불구하고 당정의 '최종합의'에 의한 국가인권위원회 안은 여전히 법무부안의 골격을 따르고 있음이 명백하다. 인권위의 기본틀을 결정하는 과정을 법무부 장관이 틀어쥐는 국가인권위원회, 그 결정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시정권고'와 '의견표명권' 밖에 갖지 못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인 그 자체의 직원을 갖지 못하고 '뜨내기 직원'만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형법으로도 다룰 수 있는 9가지의 인권침해행위 밖에 조사할 수 없는 국가인권위원회... 도대체 이런 나약한 (준)헌법기구가 어느 세상에 존재한다 말인가! 어째서 이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제적 기준'에 맞다는 말인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모든 중요한 정책은 널리 국민에게 홍보되고 공개된 토론과정을 수없이 거치면서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누

누이 정치권에 요구했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논의는 철저히 공개를 거부한 정부 여당과 법무부 사이의 밀실협상으로 진행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신임 장영철 정책위 의장은 취임직후 우리의 거듭된 면담요청을 묵살하면서 기습적인 '최종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법무부와의 밀실협의를 진행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땅의 정치인들이 도덕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민간 인권단체를 철저히 따돌림으로써 성립시킨 국가인권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의 눈을 피해가며 정치인의 야합으로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가 과연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자유로운' 기구가 될 수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앞장서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정에 개입하는 나라는 이제까지 한 나라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당정협에서의 '최종합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앞날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냉소와 체념의 대상이 될지언정 결코 희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3월 22일의 날치기 당정협의를의 결과는 철저히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이 논의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모든 고난을 견디며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999. 3. 26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30일(화)

제 133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의문사 유가족, 통한의 삭발식

“인권법안 강력 반대, 특별법 제정하라”

의문사 유가족들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다시 한번 한 맺힌 눈물을 쏟았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인권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29일 '삭발식'을 가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인권법안으로는 이제까지 고대했던 '의문사 진상규명'은 암흑 속으로 묻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삭발한 유가족은 84년 군대에서 의문사한 허영근 씨의 부친 허영춘 씨를 비롯해 유가족 의문사지회 회원 7명, 87년 대우중공업에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의문사한 정경식 씨의 모친 김을선 씨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삭발에 동참했다. "12년을 기다렸습니 다. 야당이 집권당이 되고, 어용노조가 민주노조가 되는 그날이 오면 우리 아들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질 것이라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50년만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법석을 떨지만 국회는 의문사에 대해서 입 한번 떼지 않습니다." 그녀는 특히 삭발 후에도 정부가 의문사 진상규명을 외면한다면 이제 남은 일은 아들을 따라 죽는 것밖에 없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이들은 정부의 기만적인 태도에 대해서 더욱 분노하고 있다. "대통령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

다. 그러나 국회에서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여당이 인권법안을 날치기로 확정했습니다. 인권법안을 한 번 보십시오. 억울하게 죽어간 여기 우리 아들들의 죽음을 밝혀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삭발에 참가한 유가족들은 분노를 사이지 못했다.

인권법, 진상규명에 한계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합의 발표한 인권법안은 △가해기관을 수사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인권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수사에 동의해야 하며 △수사방법상 기밀누설이 우려되는 것은 증언,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 △증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문사 진상규명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삭발식을 마치고 정부종합청사 앞으로 행진을 시도하던 이들은 경찰의 봉쇄로 인해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협의회 활동가의 옷이 찢어지고 유가족을 포함한 시위참가자 22명이 '낙상차'(전경 버스)로 들러가는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했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정부'가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 주지는 않고 되려 가슴에 또다시 못질을 하고 있다고 정부의 비정함을 나무랐다.

강희남 목사는 "제주 4·3을 비롯한 모든 억울한 죽음에 대한 완전한 진상 규명이 없이 어떠한 개혁도 헛바퀴 돌리는 무의미한 일"이라며 정부에게 박정희·전두환 등 과거 군사폭력배들이 저지른 살해사건에 대해 낱말이 밝혀 낼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준법서약 폐지” 21일간 단식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목포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 최진선(외대용인, 90학번) 씨가 지난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에 걸쳐 단식을 진행했다.

최 씨는 96년 연대사태로 구속된 이후, 98년과 99년에 준법서약서 제출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준법서약 대신 '준법서약에 대한 견해'라는 글을 통해 준법서약의 부당함을 지적, 철회를 주장했고 3월 8일부터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단식을 진행했던 것이다.

최 씨는 '준법서약에 대한 견해'라는 글을 통해 "나는 대한민국 존재를 부정할 죄가 없다. 나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에 명시된 사상·양심·집회·결사의 자유와 존엄이 합리적으로 보장되는 속에서 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하지만 신체의 자유를 미끼로 내심을 드러낼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기에 '준법서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면서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지난 2월 25일 특사에서 제외됐다.

현재 최 씨는 21일간에 걸친 장기간의 단식을 풀고, 29일 오전부터 영양제와 음식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당초 60일간의 단식을 결의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단식을 중단한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근) 국가인권위원회 (조)

인권위 독립성·권한 강화와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집회
오늘 오전 8시-10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

김대중 정부 출범 후에도 한총련 대학생들은 줄곧 탄압의 표적이 되어 왔고, 학생회 활동이 본격화되는 4월부터 또 다시 한총련 대학생들에 대한 구속선봉이 불어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 한총련 문제에 대한 국민대토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성명서의 주요내용을 발췌 소개한다(편집자주).

대검찰청 공안부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대의원들에게 이른바 '탈퇴시한'으로 협박한 3월의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르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유로 이 땅의 수많은 청년학생들이 또다시 희생될 것이라는 생각에 오늘도 떨리는 가슴을 진정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적은 바로 북한이다. 이는 김대중 정부가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의치지만 그것은 겉모양에 불과할 뿐 북쪽에 사는 형제들을 적으로 삼아 대결하는 마음 속에 감추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는 일에 다름 아니다. 만약 겨레의 통일을 위해 땀흘려 일한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면 그들이 속한 조직이며 그들과 한마음으로 분단과 싸우는 우리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도 틀림없는 이적단체이며 똑같은 이유로 민족의 하나됨을 염원하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을 다 구속하여 감옥에 넣어야 한다.

백 번을 돌려서서, 만약 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였다면 그것을 빌미 삼은 탄압은 97년에 다 끝났어야 한다. 한총련은 매년 그해 나아갈 길을 다시 정하여 해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의 최종적인 수호자를 자처하는 대법원마저 '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라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 7기를 시작하려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여 대의원들에게 '탈퇴'를 강요하거나 그들을 '이적단체 구성 예비모집'으로 구속하는 등의 모든 탄압은 즉각 중지되어야 마땅하다.

김대중 정부가 평화롭게 치러질 한총련의 대의원대회와 그들의 출범식을 놓고 '불법집회'라 칭한다거나 '월권봉쇄와 전원원행'을 입에 올리는 일은 헌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제한없이 보장하는 단결의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를 자기들 편리에 따라 파괴하는 반민주적인 폭거다. 우리 전국연합은 한총련의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의 평화적 개최를 방해하는 김대중 정부의 그 어떤 탄압에도 단호히 맞서 싸울 것이다.

오늘 우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재 정당, 사회단체대표와 한총련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1999. 3. 26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

주간인권호름

(99년 3월 22일-3월 28일)

1. 인권법 날치기 결정, 인권단체 거센 반발
정부·여당, 인권법 최종안 기습 확정(3/22) ... 인권단체들 "밀실합의·악채 인권위" 비난

2.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개막(3/22)
"극단적 빈곤"문제 주요하게 논의키로/ 국제앰네스티, 사형·경찰폭력 남용 이유로 미국 인권문제 본격 성토

3. 노동계 총력투쟁 선포(3/27, 8)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정리해고 중단과 생존권 사수" 결의하며 잇따라 집회 개최 후 5월 총력투쟁 선언

4. "반항하면 쫓린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의 체벌에 항의하며 교사를 때린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키로(3/22)

5. 국가보안법 "대체입법·7조 존치" 시사(3/25)
박상천 장관, 대통령 국정보고에서 "국보법을 완전 폐지할 경우,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비폭력 표현행위를 계속 처벌할 방침 밝혀

6. 노숙자 인권침해 논란
서울시, 4/1일부터 역 구내, 지하도,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의 노숙 전면 금지하고 노숙자를 '자유의 집'에 강제 입소시키기로(3/25)

7. "동강을 살리자" 밤샘 농성
김중배 씨등 각계 유명인사 33명, 동강 영월댐 건설 백지화 촉구하며 33일간의 밤샘농성 돌입(3/23)

8. 대인지피 피해, 민간인도 성역 아니다
한국대인지피대책회의, 대인지피 피해 실태조사 결과, 97년 이후 생존하는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한다고 발표/대인지피 피해자들 "보상추구" 시위(3/24)

9. "특수잡입·탈출 혐의 엄격히 적용"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 한총련 대표로 평양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선 씨 선고공판에서 "특수잡입·탈출 혐의 적용은 무리"라며 검찰에 재검토 요구(3/28)

◆ 국제 소식 ◆

- 학살자엔 면죄부 없다
영국 상원 재판부, 피노체트 면책특권 불인정(3/24)
- 인도주의 빙자한 살육작전
나토, 유고 공습 개시(3/23)

◆ 수지로 본 인권 ◆

한국은행 98년 국민계정 발표, 98년 실질경제성장률이 사상 최저치인 -5.8% 기록/ 1인당 국민총소득도 7년전 수준인 6823달러로 감소

특별
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홍근수 목사(인권공대위 공동상임대표, 전국연합 공동의장)

지난 금요일 아침에 신문을 펼쳤을 때, "국보법 대폭 개정"이란 1면 기사가 눈에 크게 보였다. 오랫동안 국보법 철폐를 부르짖어 온 나에게도 오래간만에 보는 중대 뉴스가 아닐 수 없어 '숨쉬 새도 없이' 단숨에 읽어내려 갔다.

그러나 읽어내려 가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폭 개정"이란 제목부터가 벌써 실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런데 기사를 읽어보니 '대폭'도 아니었다.

국정보고회의라는 자리에서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했다는 이 보고서에서 장관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현행 국보법이 대북 정책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고치는 것이 좋다는 것과 "막연히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쪽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고 보고했다는 것이다.

김창석 기자(한겨레)는 같은 날짜에 "전면개정하거나 대체입법할 듯"이라는 제하에 "박상천 법무장관이 25일 국보법과 관련해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의 개폐방향에 가다익 잡히고 있다"고 매우 긍정적으로 해설 기사를 썼다. 매우 어처구니없다. 그리고 같은 글에서 김 기자는 "박 장관은 '부분개정'과 '전면폐지'에 일단 부정적이고 "전면개정"이나 '대체입법'에 힘을 실었다"고 전했다.

비폭력을 왜 처벌하는가?

박 장관은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는 경우 "직접 폭력에 나설 것을 호소하지 않는 한 체제전복을 위한 선전 선동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하면서 완전폐지를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민주질서' 운운하면서 도대체 '비폭력적인 표현활동'을 어떻게, 왜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도대체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서 그런 말을 하고

민주주의란 그것을 보호하는 법을 따로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 민주주의란 그것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하여도 그것이 비폭력인 이상 관용하고 존중하며 다만 형법에 헌법질서와 합법 정부에 대하여 그 전복행위나 반란행위를 금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있는 것인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양심과 신앙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질서인데 정권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정권과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것을 반민주니, 국가 또는 체제 전복을 위한 선전이니 하여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말인가?

'반민주주의자' 누명 의도

또 그는 대체입법을 하든 전면개정을 하든 국보법의 가장 독소조항으로 손꼽혀 오던 7조의 고무찬양과 이적단체 구성 등에 관한 조항을 표현만 바꿀 뿐 사실상 존치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니까 '우리안보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표현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비판세력을 종전과 같이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소속원으로 처벌하지는 않겠지만, 반민주주의자로 누명을 덮어씌워 처벌하겠다는 의도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작태는 국민의 정부에게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음은 말할 것도 없다.

국가보안법 대신에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입법을 말한 것은 89년에 평

민당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거기에도 보면 "국가의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였는데 이 표현 역시 애매모호하고 고도로 추상적이며 얼마든지 오용될 소지가 있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또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립을 부인할 것을 선전하거나..."라고 하여 행위가 없더라도 사상의 표현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번에 박 법무부 장관이 한 말도 이와 똑 같이 단순히 선전하는 것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반민주적 '민주질서보호법'

국가보안법이 그 동안 정권수호를 위해 반대 내지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온 것과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역사를 볼 때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존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

사실은 '민주질서보호법'이라는 그 법 자체가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법이 될 뿐이다. 민주주의란 그것을 보호하는 법을 따로 수반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 민주주의란 그것을 비판하는 세력에 대하여도 그것이 비폭력인 이상 관용하고 존중하며 다만 형법에 헌법질서와 합법 정부에 대하여 그 전복행위나 반란행위를 금하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란 이름도 거부할 뿐 아니라 그것이 일부 개정이나 전면개정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체입법도 반대한다. 우리는 국보법의 완전 철폐가 아니고는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그것만이 우리 사회에서 인권시비를 막을 수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나라를 인권국, 문명국, 높은 도덕적인 선진국으로 인정받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3월 31일(수)

제 133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김대중, 능력결핍? 의지결핍?

법무부 의도대로 인권법 최종승인

김대중 대통령은 과연 인권대통령으로서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3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는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을 의결,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법무부와 국민회와의 기습적으로 합의발표한 인권법 최종안에 대해 민간단체들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결국 법무부의 의도대로 법안이 확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5일 법무부 국정보고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박상천 법무부 장관에게 △국무총리의 인권위원 추천시 법무부장관과의 협의절차 재검토 △인권위 설립위원 위촉시 법무부장관의 개인 절차 재검토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수렴할 것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원안대로 인권법안을 25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에 상정시켰고, 국무회의 과정에서 "인권위원 추천시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의 협의"에 대한 조항만 삭제된 채 법안은 통과됐다.

이는 당초 김 대통령이 지시한 "민간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결국 박상천 장관은 김 대통령의 지시에 항명한 셈이 된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것은 박 장관의 항명에 대한 김 대통령의 입장이다. 박 장관의 항명을 대통령이 질책하지 못한 것이라면, 김 대통령이 부하 관료들에게 '영'을 세우지 못할 만큼 허약한 지도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만일 항명을 묵인한 것이라면 김 대통령에게는 당초부터 '인권위'를 전 사용 또는 이미지 제고용으로밖에 생

각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정부의 손을 떠난 인권법안은 국회에서 제논의 절차를 밟게 됐다. 그러나, 대부분 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포진한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안이 뒤바뀔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약체 인권위가 설립될 가능성이 점차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인권대통령'을 자칭해온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을 자신의 '이미지 관리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인권신장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판가름 해볼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최근 들어 미국자본의 통상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민중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한미투자협정 체결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30일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사회진보연대, 상임대표 김진균)와 서울여성노동조합, 민주노총은 울지로 롯데백화점 앞에서 한미투자협정과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례보고서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최근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99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정리해고의 강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노동자 휴가정책 재량권을 사용자에게 넘길 것 △법정퇴직금 제도의 폐지 등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25일 한국을 방문했던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도 △스크린쿼터 철폐 △한국산 철강담핑 수출금지 △한미투자협정 조속체결 △포항제철 민영화 및 공기업 민영화 과정의 미국기업 참여 등을 촉구하는 등 미국의 통상압력이 가속화된 데 따른 것이다.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의 연례보고서와 관련, 홍근수 목사(인권공대위 상임공동대표)는 "연례보고서의 주장은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미국 자본의 활동에 대한 모든 규제를 해제하라는 것으로서 결국 한국의 경제적 권한을 미국에서 독점하겠다는 제국주의적 야욕에 다른 아니다"고 규탄했다. 또 정성희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도 "한미투자협정은 투기자본의 활동조차 규제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새로운 외환위기를 상습적으로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집회 참가자들은 "민중생존권을 박탈하는 한미투자협정을 민중들에게 전혀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협상안의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한미투자협정은 지난해 6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서 외자유치를 늘려야 한다는 명분 아래 물밑에서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진보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자본의 자유이동에 따른 투기 만연과 외환위기 재발 가능성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에 따른 민중생존권 약화와 기업특권 강화 위험성 등을 경고하면서 협정체결에 반대해왔다.

긴급 기자회견!!!

인권법안 국무회의 의결 규탄 민주화운동원로 및 인권단체 대표자 공동기자회견

오늘 오전 11시 30분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인권하루소식> 99년 3월분 총목차(1318-1338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318	3/3	1	'승리한 양심' 기자회견 - 강용주 씨등 2·25 석방 양심수들/〈기자수첩〉 비전향장기수 석방 - 조선일보의 '빛나간 신념'
		2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3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②
1319	3/4	1	세계평화 여행하는 한국정부 -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회피/미복직 해직교사 194명 - 교육부, 이 핑계 저 핑계 복직 외면
		2	〈연재〉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① - 백석호(도원동 철거사태 피해자)/철거강패, 취재기자 폭행물의 - 서울 아연동 재개발지구
1320	3/5	1	관료지향으로 빈곤층 지원 '뒤틀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재아인사들, 수배해제 요청 - 법무부 "수배자 선별구속" 방침/〈만화사랑방〉 도대체 정부는 누구편인가?
		2	〈연재〉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② - '푸른학교'의 아이들/노동자 탄압 점차 노골화
1321	3/6	1	정부, 노동자 감정대응 드라이브 - 서울지하철 노조원 무더기 연행/전북경찰청,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 인권침해 방지 목적... 실효성 여부 관심
		2	〈연재〉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③ - 차지영(노점단속 피해자)/〈추적60분〉, 의문사 추적 - 인권협, 의문사 진상규명 촉구/재야단체, 부산경찰청장 고발 - 집회 난입 및 폭력 혐의
1322	3/9	1	'세계화' 허구 폭로 - 동남아 여성노동자 방한 기자회견
		2	여사사동 남자교도관이 점검 - 부산주례구치소 여성재소자 인권침해 시비/주간인권흐름(1일~7일)
		3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정연순(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323	3/10	1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강제철거, 임산부 등 부상 - 송현동 재개발지역/〈새로나온 책〉 「인권교육 길잡이」
		2	〈연재〉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④ - 의문사한 재소자들/군산 '노동사무소' 말썬 - 해고자 폭행·사측 편들기
1324	3/11	1	인터넷 활동 날날이 감시 가능 - 진보네트워크,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 반대운동/정형근 의원 심판모임 결성-서경원 전 의원 등 고문피해자 모여
		2	〈연재〉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⑤ - 김경택(전 동암재활원 원생)
1325	3/12	1	반민주적 기류 사회전반 확산 - 노동현장·학원, 탄압·수난 잇따라
		2	〈연재〉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⑥ - 강승희(전 조폐공사 노조위원장)/〈만화사랑방〉 '인권대통령'에 인권개선 필요국가로 지정
1326	3/13	1	노숙자들 다시 거리로 - 서울역 주변 2백여명 추산/보안관찰 계속 강화 - 출소 사상범 무더기 처분통고
		2	〈연재〉 김대중 1년, 그늘진 인권현장의 사람들 ⑦ - 배상훈(목포결핵병원 비상대책위 위원장)
1327	3/16	1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내용 물의/세콤, 질도회사 변신? - 해고자 집회방해 말썬/전북경찰 인권보장위, 시작부터 셋길
		2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 "한국사회 한심"하다는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주간인권흐름(8일~14일)
1328	3/17	1	대공기관, 선거관에 정치사찰 - 구로를 재선거 청년진보당 사찰행위 발각/〈새로나온 책〉 「국제인권법 2」
		2	산업연수생·화교 등 인종차별 지적 - 유엔인종차별철폐위, 한국보고서 심의/전북 인권실태 한 눈에 -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조약〉

<인권하루소식> 99년 3월분 총목차(1318-1338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329	3/18	1	가출청소년 소년원송치 논란 - 검찰 "보호 차원"... "격리 위주 발상" 비판/〈기자의 눈〉 정치사찰과 언론
		2	'효율' 앞세우다 '국민건강 후퇴' 우려 - 시민단체, 보건 의료 구조조정 반대투쟁 계획/부상·수배에 시달리는 만도기계 노동자들 - 98년 9월 경찰력 투입 사태 이후 7개월째
1330	3/19	1	사회운동단체 또 정치사찰 의혹 - "단체 회원에 프락치 활동 요구했다"/군의문사 유족, 빚속 집회 -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 촉구/〈만화사랑방〉 국립의료원 민영화
		2	〈제네바소식〉 ① 유엔인권위원회 - 개막 앞둔 제55차 유엔인권위/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의제
1331	3/20	1	햇볕정책, 등잔 밑 무관심 - 탈북여성 대부분 "남한 정착 어려워"/"보안수사대 해산하라" - 서울대 총학생회 성명
		2	〈기고〉 옥중 투병 이은미 씨 - 김완희(울산연합 선전국장)/군산노동사무소, 농성 노동자 구속... 농협 개혁 촉구시위 농민 구속/오부치 일본 총리 방한 반대 시위 - 어업협정 백지화·과거사 해결 등 촉구
1332	3/23	1	비열한 법무부 인권법 뒤늦게 - 반대세력 낙마 틈타 기습 확정/동아리가 이적단체 '둔갑' - 과거대생 국보법 혐의 구속/농민 집회 연일 계속 - 노동·사회단체들 연대
		2	"노점상 실체 외면하지 말라" - 노점상문제 공청회, 노점 합법화 등 주장/주간인권흐름(15일~21일)
		3	〈인권시평〉 인권운동가의 죽음 - 이성훈(딱소로마나 사무총장)
1333	3/24	1	선무당, '인권위' 잡았다 - 업무파악 못한 정책위의장이 인권법 밀실합의/이적단체 사건, 이번엔 동시대 - 졸업생 등 10명 긴급체포/〈한 권의 책〉 「당신을 땅에 묻고」 (김수룡)
		2	지뢰피해 민간인 생존자만 최소 30명 -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실태조사 결과 공개/영남위원회 사건 함소심 공판 개시 - 재판부, 검찰에 "피고인측 주장 입증" 요청
1334	3/25	1	한국은 난민금지구역? - 난민조약 가입 불구, 난민 인정 전무/〈국제조약에서 말하는 난민〉/북한지뢰에 다쳤으니 배상이 안된다? - 대인지뢰 피해자 기자회견
		2	〈제네바소식〉 ② 유엔인권위원회 첫 주 "발전·극단적 빈곤문제 논의"/"자유의 나라" 미국은 - 사형·경찰폭력 난무... 제네바서 망신
1335	3/26	1	법무부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 "비폭력적인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민주질서보호법(89년 12월 4일 평민당 제안)/북송문제 북한과 대화용의 - 홍순영 장관, 유엔인권위 연설
		2	다시 일어서는 분신노동자들 - '좌절·망각' 딛고 노동해방 투쟁 매진/집회방해 경찰 무더기 고발 - 민권공대위/〈만화사랑방〉 허약한 국가인권위
1336	3/27	1	인권·시민단체 분노 폭발 - 인권위 날치기합의 및 약체화 강력 규탄/민주노총 총력투쟁 선포 - 27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개최
		2	〈성명서〉 국민에게 올바른 인권기구를! - 날치기 당정협의를 규탄한다!(국가인권기구 공추위)
1337	3/30	1	의문사 유가족, 통한의 사발식 - "인권법안 강력반대, 특별법 제정하라"/"준법서약 폐지" 21일간 단식 -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2	〈성명서〉 정부, 사회단체, 한총련이 참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시급히 개최하라!(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주간인권흐름(22일~28일)
		3	〈특별기고〉 국보법의 완전철폐가 아니고는 만족할 수 없다 - 홍근수 목사(민권공대위 공동상임대표, 전국연합 공동의장)
1338	3/31	1	김대통령, 능력결핍? 의지결핍? - 인권법안 국무회의 통과/사회진보연대,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시위
		2·3	99년 3월분(1318-1338호) 총목차

인권하루소식

99년 4월

(제1339호 - 제1359호)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1일(목)

제 133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

민주화 원로들도 인권법 최종안에 반발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법안'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 원로들이 '인권법안 철회'를 주장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원로들은 31일 '인권법 최종안 국무회의 통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법무부 주도로 진행된 인권법 논의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려가 있었지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아껴왔었다"며 하지만 더이상 파행을 두고 볼 수 없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형규 목사는 "인권법 제정으로 과

거 인권피해가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는 향간의 기대는 헛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과거 인권탄압을 말끔히 청산할 장치를 가지고 있기는커녕 오히려 인권유린을 은폐할 가능성마저 농후해 '인권선진국'의 외양만 갖추게 될 뿐 실질적으로는 '인권후진국'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원로들은 △인권위 설립에 있어 국가기관이 아닌 '특수법인' 형태는 잘못된 전제이며 △소외계층의 관심과 기대를 전혀 반영시키지 않고, 폐쇄적으로 논

의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정권의 일방적 시혜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고 △애초 약체기구를 겨냥한 법무부안을 부분 수정한 것이어서 인권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국민의 냉소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또한 리영희 교수는 "인권법 제정의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므로 대통령에게 보다 깊이있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우리의 뜻을 전달하겠다"며 대통령과의 면담 추진을 밝혔다.

<성명 참가자>

고영구 권영길 강만길 김관석 김금수 김동완 김상근 김성수 김승훈 김중배 김진균 리영희 박순경 박용길 박정기 박형규 유형석 이돈명 이소선 이재정 이창복 이해동 이효재 조준희 최영도 한상범 한완상 함세웅 홍근수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인권위원회를 법무부의 보조기구화

인권위원회가 인권업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활동을 보완(제2조 제2항)하도록 하고,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법무부로 명시(제6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인권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조 기구로 한정되는 것이다.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제65조)하게 하고, 위원회와 별도로 법무부가 인권보고서를 작성(제6조 제2항)할 수 있게 해 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설립위원 위촉과 최초의 정관 인가, 대통령령에 의해 제·개정되는 주요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토록 해 법무부의 강한 영향 아래 놓이게 했다.

인권위원회의 조사범위와 조사거부

조사범위를 8가지로 한정시키고 환경권, 주거권, 교육권 등 사회적 기본권과 재소자의 인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 등은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 조사기관이 조사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위원회의 권한이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권고'로 축소되어 사실상 인권개선 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되었다.

경찰, 노조원에게 칼 들이대

성남 건설일용직노조사무실 난입

31일 성남건설일용직노조 사무실에서 경찰과 노조원들간의 격렬한 대치극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원들에 의하면 이날 오후 4시 노조사무실 근처에서 사진을 찍던 경기도경 정보과 소속 이승기 씨의 2명을 발견, 노조사무실에서 진술을 받는 도중 전투경찰과 사복경찰 3백 50여 명이 들이닥쳐 조합원과 격렬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고 한다. 소방차량과 절단기를 동원한 경찰은 조합 출입문을 부수고 사무실에 난입했으며 이를 막는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이다.

조합원 소원영 씨는 "경찰이 문을 부수면서 열지 않으면 총을 쏠겠다고 위협하는 한편 사무실 밖에서는 조합원에게 칼을 들이대고 문을 열라고 협박까지 했다"고 전했다.

양심수, 여전히 있다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민가협 총회에서 밝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1년(98.2.25~99.2.24) 동안 구속된 양심수는 총 75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 동안의 구속 양심수 1백 88명과 비교해 볼 때 무려 4배가 많은 수치다.

국보법	특·공	집시법	노동관계
413명	28명	213명	210명
54.9%	3.7%	28.3%	27.9%

- ▷ 한사람에게 2개 이상 적용된 범주는 모두 다 포함시켰다.
- ▷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특공: 특수공무집행방해 / 노동관계: 업무방해 등

이러한 대량구속 사태의 원인은 검찰, 경찰의 자의적 국가보안법 남용으로 인한 국제사회주의자 사건(5월7일 17명), 북부노동자회사건(5월13일 7명), 부산인제대자주대오(5월29일 11명), 안민청(6월2일 9명) 전국학생연대(6월9일 7명), 진보민청(6월24일 6명), 영남위원회(7월25일 15명) 등 조직사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민가협은 2월 25일 특별사면자와 만기출소자를 감안해도 3월 10일 현재 구속되어 있는 양심수는 총 2백 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분별로 보면 송은하(한총련 불탈퇴)씨 등 학생 146명, 단병호(총파업)씨 등 노동자 26명, 조덕원(민에전사건)씨 등 장기수 4명, 김창현(동구청장 영남위원회)씨 등 재야·기타 26명, 박병우(군내 학습조직)씨 등 군·경이 4명이다. 적용 법규별로는 국가보안법 153명(74.3%), 집시법 67명(32.5%),

업무방해 15명(7.3%), 폭력 17명(8.3%)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3월 31일 제14차 정기 총회를 가진 민가협은 임기란 씨를 신임 상임의장으로 선출했다.

민가협은 이날 총회결의문을 통해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보안법 수치스러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국보법 폐지 투쟁에 혼신의 힘으로 싸워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부산민가협 회장 이정미 씨는 부산, 울산지역에서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 소위 영남위사건 구속자들이 '북한 어린이돕기운동'을 통해 번 수익금 5억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음에도 이를 북측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원한 것처럼 몰아간 현정권을 규탄하기도 했다.

민가협은 총회 결의를 통해 △국가보안법 등 반민주악법 폐지 △준법서약서 철폐와 조건 없는 양심수 전원 석방 △조직사건 진상규명 피해배상 등 과거 청산 △양심수 사면복귀과 수배해제 △고문, 의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에 적극 참여할 것 등을 결의했다.

〈제네바 소식〉③ 나토 공격에 대한 유럽 각계 반응 공습은 해결책 될 수 없어

나토의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공격이 일주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제네바에서는 30일 오후 유엔 본부 앞에서 나토의 유고슬라비아 공격에 항의하는 시위가 한차례 전개됐을 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나토의 군사 행동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은 채 희생자와 난민의 수만 늘어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이른바 국제사회를 대변해야 할 유엔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카톨릭 평화 단체의 부대표는 '폭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논단을 통해,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들의 평화를 위한다는 명목 아래 현재 폭력을 퍼붓고 있는 나라들은 오랫

동안 코소보 주민들이 비폭력적인 수단으로 세르비아인들의 억압에 저항할 때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 세르비아인들의 애국심(patriotism)과 알바니아인들의 자치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연구하는데는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며 미국을 비롯해 나토 회원국들이 뒤늦게 군사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이밖에, 구 유고슬라비아에서의 오랜 분쟁이 지역간 부의 불평등에서 비롯된 만큼 선진국들의 경제원조가 근본적인 처방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25일 국제적인 여성평화운동체인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은 나토와 유엔 안보리의 회원국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나토의 군사행동은 갈등의 뿌리를 그대로 둔 채 주민들에게 상처만 안겨다 줄 뿐"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했다. 또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정부에게도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인종청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사다코 오가타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난민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을 수 있도록 인접 국가들에 국경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작 유엔 인권위 내에서는 나토의 군사행동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 26일 인민자결권에 관한 논의과정에서 두 민간단체가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다. 아메리카 법률가 연합(American Association of Jurists)은 "나토는 코소보 지역에 대한 무력 사용을 유엔 안보리로부터 승인받은 바 없다"며 "나토의 공격은 이 지역의 주민들을 오히려 더 큰 고통에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반면 국제 교육 발전(International Educational Development)은 "나토의 이번 공격은 코소보 주민들을 위해 너무나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네바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2일(금)

제 134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

집시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한 시민에 대해 10년 가까이 경찰의 사찰이 진행되어 왔으며, 그것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87년 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 체포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음영천 씨는 90년경부터 97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속적으로 경찰에 의해 동향을 조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음 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 직업과 직장명, 출퇴근시간, 자주 만나는 사람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음 씨가 집에 없을 경우엔 어머니나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속 동태를 파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97년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시점에는 집 근처 다방에서 음 씨에게 일정한 양식이 적힌 종이를 주면서 양식대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찰행위로 인해 음 씨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부담을 안고 살아왔으며, 특히 선거 시기의 동태파악은 선거권 행사에 부담을 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음 씨는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국가배상을 신청했으며, 소송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사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이 드러나게 됐다.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올 3월 음 씨에게 보내는 배상결정통지서에서 "서울 중앙경찰서 보안과 소속 임수광이 서울지검의 '공안사범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에 의거, 동향을 파악·보고하였다"고 밝힘으로써 이번 사찰이 검찰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경찰의 동향 파악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금전으로 배상받아야 할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배상지급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일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음 씨의 동태를 파악하고 감시한 경찰의 행위나 이를 지시한 검찰의 행위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지검의 지시내용과 성격으로 볼 때 민간인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이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지금도 어디서 누가 똑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지검의 출소자 동향파악 지시의 경위와 배경,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문책 및 징

계를 요청하며, 1일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성남일용노동조도 사찰 시비 조합원 촬영된 필름 입수

성남건설일용노동조는 지난 31일 벌어진 사태와 관련, "경찰의 불법사찰행위"라고 주장하며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관련기사 본지 4월 1일자>

성남건설일용노동조측이 당시 사무실 맞은 편에서 출입자들을 촬영하던 경찰(경기도경 보안관 소속)로부터 입수한 카메라에는 신상카드로 추정되는 서류를 촬영한 필름이 들어있으며, 이와 관련 성남건설일용노동조 측은 "입수한 두 개의 필름 가운데 사진권에 담긴 필름을 누군가 조합원이라고 속이며 훔쳐갔고, 경찰에서는 계속 필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등 대책위원회 구성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이달 중으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올해도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대한 당국의 원천봉쇄와 대학생들의 구속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들은 한총련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나섰다.

1일 서울 명동 한민교회에서 연석회의를 가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유가협 등은 한총련 대의원대회 관련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구성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학생들의 자치기구인 학생회 활동에 대해 이적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하는 것과 학생회 대표의 회의결정기구인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아래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 및 대의원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에 비유모죄 적용 철폐" 등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는 6일경 각 단체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으며, 10일경엔 '과연 한총련 이적단체인가?'(가제)라는 주제 아래 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정당,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국민대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더불어 종교계와 인권단체 등을 망라한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의 정부 및 여야총재단과의 면담을 통해 국민대토론회 참가와 한총련 대의원대회 허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각계 사회단체들에게도 범국민위원회에 광범위하게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해 정부는 한총련측의 거듭된 평화적 개최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제6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끝내 불허했으며, 대의원대회 강행시 경찰과의 충돌이 벌어질 것을 우려한 한총련은 결국 피시통신을 통해 대의원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

"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

최근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인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시안) 서울지역 공청회'를 개최한 교육부는 ▲세계적 수준의 소수의 연구중점 대학원중심대학 선정·육성 ▲특별회계제도 등 대학의 자율운영체제를 도입한 뒤 국립대학에 '대학이사회'(가칭) 설치 ▲권역별로 지역 우수대학 중점육성 등의 계획을 발표

표해, 사실상 경쟁에 의한 성과위주의 '차별화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공청회가 열리던 시각 광화문 사거리 앞에서는 이화여대, 서울대, 서강대, 성균관대, 숭실대, 성공회대, 중앙대, 한성대 등 8개 대학 총학생회가 집회를 갖고 "국립대 민영화 계획과 특별회계제도 도입은 교육의 공공성 약화를 초래하고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물론, 군소국립대의 연쇄 도산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순덕(성균관대) 씨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취지는 환영하지만, 교육부의 모습은 교육의 공공성을 배제하고 시장원리(수익자부담의 원리)로 학생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일정 상으로 불패도 그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네바소식> ④ 용병

살육의 배후, 민영안보기업

"용병은 생명 혹은 평화라는 이름 아래 일하지 않는다. 다만 돈을 벌기 위해 싸울 뿐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더욱 효율적이어야 한다. 용병에게 효율성이란 죽이고, 고문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25일 제네바, 유엔인권위 '용병에 관한 특별보고관' 앙리끄 베르나르 발레스페로스(Enrique Bernales Ballesteros) 씨는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7년 간 무력분쟁이 계속되는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반란군과 정부 양쪽 모두 용병을 전장에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시에라리온을 인간적 제약 지역으로 만들었다. 발레스페로스 씨는 시에라리온 뿐 아니라, 앙골라, 콩고민주공화국, 카슈미르, 유고슬라비아 등 다른 여러 무력분쟁 지역에도 용병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발레스페로스 씨는 이러한 현상이 "1988년 이후, 민영 안보기업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민영 안보기업은 군사 자문과 지원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고용된 용병들을 계약에 따라 무력분쟁 지역에 투입하곤 한다. 시에라리온만 하더라도 영국 런던에 사무실을 둔 샌드라인 인터내셔널이라는 용병회사가 개입돼 있다.

결국 이같은 용병회사의 존재는 무력분쟁을 장기화시켜 심각한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용병 활동을 방지하고 처벌할 법적 장치가 시급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 유엔에서는 지난 1989년 '용병 모집·사용·자금제공·훈련 등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을 채택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약에 비준한 국가 수가 22개국에 못 미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또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외국의 용병회사를 지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용병 문제는 더 이상 무시하고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3일(토)

제 134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11개 사회단체 법제화 저지운동 나서

최근 김일주(자민련), 박범진(국민회의), 채영석(국민회의), 조용규(한나라당) 의원등 국회의원 26명이 학교에서의 체벌하용을 명시적으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체벌의 명시적 법제화'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2일 '체벌하용 법제화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청소년폭력에반대등 11개 단체 참여, 이하 체벌저지공동대위)는 성명을 발표, "체벌 근절 방안을 모색해 교육민주화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오히려 반교육적·반인권적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와 국제인권기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체벌저지공동대위는 "체벌은 인권 및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없는 교사의 폭력행위로 인식되어야 마땅하다"며 "반인도적 도구나 언어폭력을 동원하면서 자행되는 체벌은 결코 학생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없으며, 체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법제화한다면 체벌의 남용을 부추기고 체벌을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체벌저지공동대위는 이어 "학교현장의 민주화와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는 체벌법제화 방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며, △교육환경 개선 △교사 확충 △교사와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 다양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체벌법제화 반대투쟁에 나선 체벌저지공동대위는 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우리에게도 인권

이 있어요!"라는 주제 아래 청소년인권신장과 올바른 학생지도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안에 서명한 의원들에게 항의입장을 전달하고 다음 주 중으로 국회 교육위원장 및 해당

11시 들과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96년 한국정부에게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백히 금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91년 정부가 가입한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각국 정부가 학생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학교규율과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들이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철도公安원이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경실련 등 검찰에 수사 촉구

철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역주변의 노숙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조사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북지시민연대(공동대표 박경조 등)와 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진춘 등)은 최근 수원역公安원에 의한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이 불거지자 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김진춘)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를 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보내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민호(수원경실련 사무국장) 씨는 "노숙자와公安원의 밀고 당기는 몸싸움은 다른 역에서도 비일비재한 일이었지만 수원역의 경우 노숙자들이公安실로 끌려 들어가면 초죽음이 되어나왔다"고 노숙자들이 주장하고 있어 그 진상과 책임소재를 밝히는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원회에 따르면, 노숙자 송의원아무개 씨는 지난 98년 여름, 밤

경公安원에게 구타를 당해 다리가 부러졌고 이로 인해 철실을 박고 목발을 짚어야하는 장애인이었다고 하며 또한 지난 3월 초순에도 오후 3시 경 수원역公安실로 끌려가 손을 밟혀 왼손가락 세 개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 아무개 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8시 경 수원역 대합실에서 구결도중公安실로 끌려가公安실 안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구두발로 밟히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북지시민연대와 수원 경실련은 "이번 사건이 노숙자들을 배타적이고 비인간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적 인식을 극명히 드러낸 것"이라며 "진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기초생활법과 노숙자지원법 등 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은 제주 4·3 항쟁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3 진상규명!! 명예회복!!

특별기고

제주 4·3과 미국

김종민(제민일보 기자)

1948년 4월 3일 제주도 무장대가 단선·단정 반대와 조국의 자주통일, 극우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미군정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을 향해 본격적인 공격을 가함으로써 '제주 4·3'이 발발했다.

그후 6년 6개월 동안의 전개과정에서 첫머리부터 60대 이상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려 3만명이 토벌대에게 잔혹하게 학살됐는데, 대부분의 희생은 1948년 11월 중순 경부터 약 4개월간 이른바 '초도화작전' 때 벌어졌다.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반인륜적 범죄이며 공소시효도 없는 전범(戰犯)으로 취급받는다. 도대체 누가 이런 초도화작전을 명령했는가. 이에 대한 책임은 우선 당시 군통수권자인 이승만에게 있다.

그런데 취재반은 10여년 동안 '제주 4·3'을 조사해 오면서 차츰 미국의 존재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고, 초도화작전 역시 미국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4·3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미 국무부 관리로 있는 존 매릴 박사는 취재반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책임을 부인했다. 존 매릴의 주장인 즉, "4·3이 미군정 시절에 발발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실책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량 인명희생을 몰고 온 초도화작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현재 4·3과 미군과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는 주한미군 정보참모부 보고서인 'G-2 보고서', 'CIC(방첩대) 보고서', 'PMAG(임시군사고문단) 문서' 등이 있다. 이들 문서는 제주 상황을 시시콜콜 다루고 있지만 초도화작전 시기에 이르면 그 내용이 누락되고 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초도화작전에 관한 미군의 역할이 드러난다. 지면 관계상 한가지만

예를 들어보자. "...모든 장비와 지원, 그리고 계획된 작전은 최소한의 미군 개입으로 적절한 지휘체통을 통해 한국인에 의해 조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9연대 작전에 대한 모든 전술·병참 지원 업무를 5여단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5여단은 적절한 지원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군 고문관들이 한국인 채널을 통해 즉각적인 수정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된다"('PMAG단장 로버츠 준장 공한철', 1948. 10. 9.)

초도화작전을 명령한 자는?

이 보고가 있었는지 이를 후, 경비대총사령부는 제주도경비사령부를 신설하고 그 사령관에 광주 주둔 제5여단장을 임명했다. 토벌 지휘자가 연대장급에서 여단장급으로 격상한 것이다. 다시 6월 후에는 "해안선에서 5km 이 외의 지점을 통행하는 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총살에 처할 것"이라는 송요찬 9연대장의 포고문이 발표됐다.

제주도의 지형상 '해안선으로부터 5km 지점'이란 특정한 산악지역이 아니라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른바 '중산간 마을'이 해당된다. 중산간 초도화작전이라는 가공할 작전이 수립된 것이다. 이같은 계획은 1948년 11월 17일 이승만에 의해 불법적으로 선포된 계엄령으로 본격화된다.

이처럼 ①미군 고문관, 제주작전에 즉각적 수정조치 요구(10월 9일)→②제주도경비사령부 설치(10월 11일)→③송요찬의 포고(10월 17일)→④이승만의 계엄령(11월 17일)이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인데 어떻게 미군이 한국군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을까. 이는 당시 주한미군이 차지하고 있던 지위를 따져볼 때 금방 드러난다. 1948년 8월 24일 이승만 대통령과 하지 장군 사이에 비밀리 체결된 '한미군사안전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사령관이 1949년 6월 말 미군이 완전 철수할 때까지 한국군에 대해 전면적인 작전통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행사의 동정

- 청소년 인권신장과 올바른 학생지도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 4월 3일 (토) 오후 3시-6시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연대 (02-790-3153)
- 제주 4·3 제 51주기 추모식 및 명예회복 촉구대회
 - 4월 3일 (토) 오후 3시 / 대하로 마로니에 공원
 - 주최: 제주 4·3 진상규명·명예회복 추진 범국민위원회 (02-757-4843)
- 인혁당사건 희생자 24주기 추도식
 - 4월 8일 (목) 오후 7시 / 명동성당 문화관
 - 주최: 인혁당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 (02-777-0643)
- 이수병 선생 24주기 추모제
 - 4월 8일 (목) 오후 2시 / 경기도 용인 경희대학교 이수병광장
 - 서울출발 (희기동 경희대 정문, 오전 11시 30분)
- 서울장애인연맹 창립총회 및 출범 한마당
 - 4월 9일 (금) 오후 1시 /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 강당
 - 문의: 02-447-0277

4월 6일자 하루소식은 쉽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7일(수)

제 134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만으로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한상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종철(27·98년 충남대 동아리연합회장) 씨 등 제6기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정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협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며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령이나 활동내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유엔인권이사회가 '박태훈, 김근태 씨 사건에서의 유죄 판결이 시민주권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조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견해를 채택한 사실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보법 사건, 하급심서 잇따라 '무죄'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99년 제7기 한총련까지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검찰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었다.

재판부는 "한총련은 그 의장 및 간부, 대의원들이 1년을 임기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전원 교체되고, 매기수마다 별도의 출범식을 행하고 있어 매년 한총련의 노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제5기 한총련(97년)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제6기 한총련(98년)이 당연히 이적단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감령의 내용이나 활동 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이적단체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며 "제6기 한총련은 그 감령에 있어 다소 북한의 주

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적단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은 최근 일고 있는 국가보안법 개정 움직임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등 국제사회의 권고 및 압력을 고려한 것으로 사법부 내에서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하려는 경향이 확산되는 조짐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월 17일 서울고법 형사5부는 천리마 노래단 사건에 대해 "조직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면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며 이적단체구성 혐의에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하급심의 잇따른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주목된다.

유가협, 국민회의 점거농성

"인권법 철회·의문사규명" 촉구

유가협 소속 회원들이 6일 '의문사 진상규명의 당론화'를 요구하며 국민회의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국민회의 당사 2층 민원인 대기실에서 농성에 들어간 허영춘 유가협 의문사지회장 등 유가족 6명은 △기만적 인권법의 무효화 및 인권법 제논의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명예회복과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다섯 달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중이며, 지난 3월 29일에는 유가족 7명이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회의측이 책임있는 답변을 회피해온 데다, 최근 당정 합의를 통해 확정된 인권법안마저 의문사 진상규명을 어렵게 만들어 버림에 따라 이날 전격적인 점거농성에 돌입하기에 이른 것이다.

"우리는 정부의 인권법안에 반대한다!!!"

- 인권법안 철회 및 재논의를 촉구하는 -
17개 단체 인권활동가 31명 연합단식농성 기자회견

- 때 : 오늘 오전 10시 30분
- 곳 : 명동성당 입구
- 차례 : 경과보고/ 단식결의문 발표/ 농성계획 발표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청소년인권신장 위한 토론회 열려

지난 3일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라는 주제로 청소년 인권신장과 올바른 학생지도 방안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마련돼, 학생과 교사들의 관심을 모았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생복지회, 전교조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체벌법제화저지공동대위’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초·중·고등학생과 교사 90여명이 함께 했다. 발제에 나선 한준상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현장에서 체벌이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학교가 체벌중독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학교는 학생관리에 손쉬운 수단으로 체벌을 활용하고 있고, 이는 입시형 인간·순종형 인간을 만들어 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교육학부모회와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조사한 체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체벌규정이란 마련되었는지 여부에 관해 교사 55.5%, 학부모 24.1%만이 알고 있었고, 학생은 49.1%가 모른다고 답해, 학생 2명중 1명이 체벌규정이란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체벌규정을 만든데 있어 일선 학교와 교육청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도록 지시한 것과 달리 ▲교사 35.9%, 학부모 19.4%, 학생 4.4%만이 의견이 수렴됐다고 응답해, 체벌의 당사자인 학생과의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이밖에 교사 체벌을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발의안>에 대해서는 교사 76.2%, 학부모 62.8%가 찬성한다 반해, 학생의 51.9%는 반대했다.

학생대표로 나온 나정훈(고등학생, PC통신 나무누리 학생복지회)군은 “체벌을 없애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입시위주 교육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112에 선생님을 신고했다고 언론에서는 학생을 나무라고 있지만 체벌을 당한 학생이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학교현실을 알릴 만한 데는 112 신고밖에 없다”고 말해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의견수렴 구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일주 의원 등 국회의원 27명의 발의로 불거진 ‘교사의 학생 체벌 허용 문제’를 다룬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학생인권 침해에 관해 앞으로 학부모, 교사, 학생의 관심이 폭넓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공파안내

▶ 4월 7일 (수)

·이경재(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합의2부, 신전

▶ 4월 9일 (금)

·홍교선(국보법 찬양·교무 등)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합의10부

▶ 4월 12일 (월)

·박경순 외5(국보법 반국가단체 구성 등, 영남위 사건)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10호, 합의 2부, 속행

주간인권호름

(99년 3월 29일-4월 4일)

1. 김 대통령 인권의지, '립서비스' 불과?
국무회의, 법무부가 제출한 인권법안 의결(3/30) / 이돈명 변호사등 민주화운동 원로 29명, "인권법 다시 만들라" 요청(3/31)
2. "북한찬양, 반국가 활동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한총련 6기(98년)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4/1)
3. 노동자 생명보다 소중한 장관 행차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 안 아무개 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헬기 후송을 요청했으나,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을 수송해야 한다는 이유로 환자 후송 미뤄져(3/29)
4. '의문사 진상규명' 최후통첩
의문사 유가족 7명,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상규명" 요청하며 삭발식 가쳐(3/29)
5. '인간을 위한 의료' 지침 만든다
대한의사협회, △인간복제 연구 금지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 공개 및 시술 금지 △비윤리적 태아 성감별 및 인공 임신중절 금지 △비자발적 장기이식 금지 등 추진키로
6. 불법사찰 배후는 검찰
검찰, 국보법·집시법·노동관련법 위반 등 시국사건 관련 출소자들을 4등급으로 분류한 뒤, 직장, 친분관계, 월급수준, 출퇴근 시간 등 사생활을 기밀한 카드 작성하며 동향파악해 온 사실 드러나(4/1)
7. 미결수, 드디어 사복쟁거
법무부, 전국 5개 교정시설의 미결수들에 대해 법정 출두시 사복착용 허용(4/1)
8. 역 공무원,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수원지역 시민단체들, 수원역 소속 철도 공안원들이 노숙자들 상습폭행했다는 의혹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 촉구(4/2)
9. 한미투자협정 반대 시위
사회진보연대 등, 한미투자협정이 민중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한다며 협정 체결 논의의 즉각 중단 촉구(3/30)

◆ 수지로 본 인권 ◆

지난해말 4500명 수준이던 노숙자가 3월 현재 37.7% 증가한 6200명으로 집계. 이들 중 5700명은 노숙자 쉼터 등에 수용되고, 나머지 500명은 부랑생활중인 것으로 파악돼 / 지역별로는 서울이 71%인 4400명, 직종별로는 건설일용직 출신이 38%, 기능직 21%, 사무직 15%, 자영업 8%, 요식업 7%, 농축수산업 2% (보건복지부 3/31 발표)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

이경주 교수(경북대 법학부)

인권시평

지난 2월, 수년간의 외국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친구에게 물었다. “뭘 달라진 것 별로 없지?” 그 친구 왈 “아니야 많이 달라졌는데. 주류가 변했어” 라는 것이다. 나는 놀라웠다. 그리고 공항 도착과 함께 우리 사회 그것도 주류의 변화를 실감할 정도로 눈썰미를 갈고 닦아 온 것이 놀랍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의 놀라움을 옆눈질 하며 그 친구는 또 덧붙였다. “OB가 HITE한데 밀린 것 아니야 이거!”

그렇다. 우리 사회는 최근 이른바 카피라이터라는 각광받는 업종을 만들게 하였다. 어떻게 새로운 브랜드와 이미지를 만드는가는 제품의 판촉과 밀접한 연관을 갖게 되며, 고착화되다시피 한 수십 년의 아성도 깨트리고 말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고문구의 현란함은 제품의 질과는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카피라이터 자신들이 인정하듯이 테크닉 그 자체이다. 어떻게 순간의 인식에 파고들어 승부를 낼 것인가, 어떻게 이미지를 조작할 것인가가 중요한 승부처인 세계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정치의 세계에서 도저히 통용될 수 없는 아니 통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 카피라이터적인 순발력과 세계관일지도 모른다.

김 대통령의 브랜드

그러나 우리 정치의 주류들 가운데는 카피라이터를 자임하는 이들도 많은 것 같다. 지난 3월 25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가 이렇게 밝혔다.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한국의 새로운 브랜드는 인권이다.” 또 홍순영 외교통상부 장관도 “국제적으로 인권국가 이미지의 홍보와 인권의교를 강화하기 위하여 출국”한다고 밝혔다.

물론 그 동안 김 대통령만의 정체성을 뚜렷이 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 1년은 전 정권이 물려준 경제적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었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정치의 세계에서 통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카피라이터적인 순발력과 세계관일지도 모른다.

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김 대통령 자신도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경제건설이나 남북문제 해결보다는 인권수호대통령으로 기록되는 게 소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브랜드는 민주적인 절차와 불가분한 관계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 수많은 인권문제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정치권력에 대한 항의와 이에 대한 탄압의 연속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국민에 의한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더 인권문제가 쌓이고 쌓였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민에 의한 정부라고 할 수 있으려면, 인권수호대통령으로 기록되려면 민주적인 절차를 생명처럼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지난 3월 22일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발을 뒤로한 채 김 대통령 인권브랜드의 요체라고도 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설치를 포함한 인권법안을 집권당과 합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와의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당정간에 ‘납치기’ 합의된 원안대로 25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에 상정시켰다.

그 내용인 즉 첫째, 법무부를 상위기관으로 둔 특수법인으로 인권위를 위상 지우고 있다. 둘째, 인권위의 구제대상을 교도소나 정신병원과 같은 다수인 보호시설의 고문 구타 불법구금 등 8가지 형사범죄와 차별행위(성, 종교, 지역, 국적 등)로 제한하고 있다. 셋째,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인권위는 권고만 하지 명령을 할 수 없게 하였

다. 이와 같은 당정 합의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은 이만저만 실망스러운 것이 아닌 것 같다. 특히 의문사를 당한 유가족들은 3월 31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을 하여 항의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에서도 법무부가 상위기관이고 인권위 구성에 법무부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마당에 어떻게 인권기구가 제구실을 할 수 있으며, 신속한 구제를 목표로 하는 인권위가 권고만을 하게 되어 있으니, 인권위가 유명무실화된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서 그 동안 국민회의 법안에 부족한 점이 있어도 이를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민간단체들도 이제는 모두 항의단체로 변할 것이 명백해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서, 인권을 위해 노력한 인권단체와 법조인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무부가 ‘혼자 치고 나갔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카피라이터와 정치의 혼동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 카피라이터와 정치를 혼동하는 법무부의 이기심과 경쟁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가 왜 산적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었다면 이처럼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법안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뿐이다.

이번 주말에는 친구에게 전화연락을 할 참이다. 그간 귀국 이삿짐 정리도 되었을 터이니 한숨 돌려 맥주나 한잔 하자고. 그리고 이야기 할 생각이 다. 공항도착과 함께 우리 사회 그것도 주류들의 사고방식을 간파하고 있었던 친구의 화두를 깊이 새기지 못하고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고’ 핀잔했던 내가 경술했다고 말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인권활동가 30여명 단식돌입

“인권법안 철회” 촉구...1주일간 명동성당

18개 단체 소속 30여 명의 인권활동가들이 7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번 단식농성은 정부와 여당 간의 밀실합의를 통해 확정된 인권법안에 대한 인권활동가들의 강력한 항의의 표현이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명동성당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인권활동가들은 “정치인들 사이의 밀실합정에 의해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인권법안을 거부한다”며 “정부의 인권법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인권법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성명서를 통해 “정부 법안에 모습을 드러낸 국가인권기구는 실제로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인권기구가 아닌 만신창이의 나약한 정권 홍보용 장식품으로 전락해 버렸다”며 “일반 국민의 참여없이 정부가 밀실에서 입안해 정치권의 담합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인권법’안을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식농성은 오는 13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단식농성자들은 매일 저녁 6시 30분 ‘국민들과 함께 하는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50여 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용실업대책과 재벌개혁 및 IMF대응 범국민운동본부’는 10일 오후 3시 명동성당에서 인권활동가들의 단식농성을 지지하는 연대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단식농성 참가자〉

남규선, 채은아, 송수연, 이상희, 김일숙(민가협) 오창익, 고상만, 맹주형, 권수진(천주교인권위원회) 서준식, 유해정, 최은아, 유점열(인권운동

사랑방) 차미경(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임태훈, 양지용, 정병선, 신길용(동성애자인권연대) 정종권(사회진보연대) 정유석(한국성폭력상담소) 이창수(청년진보당 인권위원장) 김영옥(전북 평화와 인권연대) 이윤주, 김미영(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김수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구선주(추모단체연대회의) 이진원(한국국제문제연구소) 도관스님(불교인권위원회) 노주희(한국여성단체연합) 윤정숙(여성민우회) 정주연(여성성전화연합) 이석민(서울대 총학생회 인권위원회)

유가협, 단식투쟁 돌입

배은심 회장 등 5명

6일 새정치국민회의 당사 점거농성에 들어갔던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회장 배은심) 소속 유가족들이 7일부터 국민회의 당사 내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본지 4월 7일자 참조).

국민회의 당사 점거 및 단식농성에 들어간 유가족은 배은심(이한열 씨 모친) 회장 등 모두 5명이며, 인권법안의 무효화와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요구사항에 대한 국민회의 측의 책임있는 답변과 계획이 확인된 후에야 농성을 풀 계획이다. 단식중인 유가족들은 현재 국민회의 인권위원회실에 머물고 있다.

한편, 유가협은 8일 낮 12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갖기로 했다.

1999년 4월 8일(목)

제 134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단식에 돌입한 유가족은 배은심 회장 외에 허영춘(허원근 씨 부친), 김종욱(김성수 씨 부친), 장남수(장현구 씨 부친), 김수연(한상근 씨 모친) 씨 등이다.

대전지법 판결 환영

인권공대위·청년진보당 성명

지난 1일 대전지방법원이 “제6기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니다”고 판결한 데 대해, ‘민중의 기본권 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공대위, 상임대표 홍근수 등)와 청년진보당(대표 최혁)은 성명을 발표, 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관련기사 본지 4월 7일자 참조).

민권공대위는 7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을 통해 공안당국의 한총련 탄압이 야만적 마녀사냥이었음이 명백해졌다”며 “당국은 한총련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한총련 대의원들에 대한 정치수배를 풀고 평화적인 제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 개최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진보당도 성명을 발표, “이번 판결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과 법준치 자체의 문제가 낱알이 드러나게 되었다”며 “대전지법의 선고가 검찰의 무분별하고 무리한 체포, 구속, 기소에 경종을 울리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혁당 희생자 24주기 추도식

- 오늘 오후 7시/ 명동성당 문화관
- 출연: 민요패 아라리오, 꽃다지 정태춘, 박은옥
- 문의: 천주교인권위(02-777-0643)

특별
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정유진(주한미군법적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아이와 노인들의 울부짖음, 불타는 삶의 터전들, 파괴되는 공동체, 살인적 구타, 폭격과 총살, 성폭행, 집단 학살... 공포...

51년 전 제주에서 벌어졌던 태워 죽이고, 굶겨 죽이고, 없애 죽이는 이른바 삼진(三盡)작전이 지금 유럽 한복판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작전의 조종자는 여전히 미국이며, 작전 목적 역시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국익에 있다.

나토의 유고 공습을 전후하여 미국은 전쟁의 목적이 도덕과 정의, 인도주의에 있다고 선전했다. 도덕과 정의를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전쟁을 한다? 전쟁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킨다?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말들이, 미국의 패권을 등에 업고 마치 나토 공습의 진실인 양 호도되고 있다.

클린턴은 유고 공습이 인종청소를 막아내기 위한 도덕적 명령이라고 말한다.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간 침묵으로 동조했던 수많은 내전과 국지전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진정 ‘인도적 개입’이라면 개입하는 쪽의 선의가 구체적 행동으로 충분히 전달되어야 한다. 국제법과 유엔 헌장까지 어겨가며 일으킨 군사행동이니 더욱 그러하다.

보스니아, 동티모르, 르완다, 터키 등에서 자행된 학살과 강간, 인종청소에 대해 나 몰라라 냉소주의로 일관했던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도덕과 정의 운운하는 것은 분명 모순이다. 미국은 본쟁지역마다 자국의 국익을 그 나라 사람들의 인권이 아닌 경제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선택적으로 개입했음을 먼저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것이 순서다.

코스보 분쟁을 놓고 나토가 주권국가의 내전에 개입할 수 있으나, 유엔 절차를 무시한 무력 사용은 국제법 위반

이라는 입장과 독재자 밀로세비치의 인종말살을 방관해서는 안되므로 공습은 정당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나는 두 가지 논쟁에 앞서 ‘밀로세비치가 내세우는 민족주의’와 ‘코스보의 자치 혹은 독립’이 평화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쟁 예방을 위해 어떤 외교와 협상을 벌였는지 먼저 자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1년 전 제주에서 벌어졌던 태워 죽이고, 굶겨 죽이고, 없애 죽이는 삼진(三盡)작전이 지금 유럽 한복판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작전의 조종자는 여전히 미국이며, 작전 목적 역시 예나 지금이나 미국의 국익에 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분쟁 지역마다 강대국의 이해를 앞세운 무력 개입은 허용될 수 밖에 없고 그에 따른 피해자는 속출하게 될 것이다. 인권의 수호는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적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토의 공습은 ‘달려의 공습’이라 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공습으로 인한 유고의 시설 파괴와 무기 손실등은 아예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난민들의 고통과 인명 피해는 무엇으로 환산할 수 있겠는가? 이 돈을 신유고연방의 평화기금으로 모아 공존을 위한 논의와 연구를 지속했다면 우리는 미래의 역사에서 조금은 담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토의 대장인 미국은 상식적인 방식을 철저히 무시해 왔고, 오히려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를 양산

하고 있다. 갈등의 뿌리는 그대로 둔 채 힘으로 결론지으려는 태도는 현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코스보 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다.

웨슬리 클라크 나토군 사령관은 공습과 더불어 세르비아계가 알바니아계에 대한 테러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완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즉 미국은 나토 공습이 세르비아계의 만행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그 길을 택한 것이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애초부터 인권의 관점에서 출발한 개입이 아니므로 수십만 난민들의 질규는 미국 패권주의를 정착시키는 과정에 따라붙는 부산물에 불과했던 것이다. 미국 방부 대변인은 “결정적 편치가 없었다”며 더 많은 인명 피해를 낳게 될 장기전을 예고하였고, 미 의회 역시 코스보 내전과 미국 국익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논쟁이 모아지고 있다. ‘결정적 편치’로 인해 사람이 상하는 문제에 대해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

1950년 대만에서 ‘붉은 분자 숙청’이라는 백색테러가 감행될 당시 ‘백명을 잘못 구속하는 일이 있더라도 잡아야 할 한 명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구호가 난무했다. 미국의 유럽 지배전략의 하나로 나토가 퍼붓는 미사일 공격은 바로 대만 테러분자의 모습이 아닐까? 인종청소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더욱 커다란 폭력을 부추기는 것은 그 어떤 수사로도 용서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밀로세비치의 만행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풀어야만 했다. 방법은 분명 있었다.

분단의 고통을 모두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 경도된 반쪽짜리 사고는 분단이 내린 최고의 형벌이라는 생각이 더욱 깊어지는 요즘이다. 유고 공습과 코스보 난민들의 희생에 아무런 대응도 취하지 못하는 부끄러움과 함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9일(금)

제 134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정부관료 '장애인 모독' 망언

“써먹지도 못하고 세금만 축낼 것”

장애인 고용과 인권보장에 앞장서야 할 정부 관료가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장애인을 모독하는 망언을 해 장애인들의 거센 분노를 사고 있다.

'장애인의 달'인 4월을 맞아 우리나라 장애인의 고용 상황을 취재한 한 방송사는 지난 1일 방영된 뉴스를 통해 "장애인 고용에 솔선수범해야 할 정부 기관들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뉴스는 장애인 의무 고용(2%)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11곳의 정부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했으며, 행정자치부 공보관실 김 아무개 서기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김 서기관은 인터뷰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실제 써먹지도 못하는 데 국민의 세금만을 축내는

것 아니냐"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부담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일 "방송에서 장애인을 모독한 행정자치부 김 서기관을 즉각 파면하라"며 잇따라 강도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살인적인 장애인 실업률(27.4%)을 보이는 시기에 따뜻한 아랫목 생활을 하는 일부 계층만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행정관료의 무지함을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으며 4급 상당의 고급관료가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 계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김 서기관의 즉각 파면 △행정자치부 장관의 공개적 사과 △장애인의

무고용 책임을 수행하지 못하는 노동부 장관의 문책 등을 촉구했다.

한총련 헌법소원 움직임

“탈퇴압력, 기본권 박탈 행위”

99년 한총련 7기 대의원들이 검찰의 한총련 탈퇴 압력에 대해 집단적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총학생회장 송영우)는 7일 "사상과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현재 검찰에 의해 진행되는 7기 한총련 대의원 탈퇴 압력은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7기 한총련 대의원들의 헌법소원 운동을 제안하고 나섰다.

경북대 총학생회 관계자는 "헌법소원 운동은 약 3백명의 대의원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 농성중단

7일 국민회의 당사 내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던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들이 8일 농성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는 7일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국민회의 지도부가 사퇴하고 당수가 마비됨에 따라 국민회의 당사에서 농성을 지속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만신창이 인권법안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 3일째 (곳: 명동성당)
-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시오 -

만화사랑방



이동수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인종주의 반대' 공감... '발전권' 시각차

○...아파트트레이트가 정식 의제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인종차별 문제는 계속해서 뜨거운 논쟁 거리로 남아 있다. 오히려 최근의 지구화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혐오증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 왔다. 이런 점에서 2001년에 열릴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혐오증 및 불관용에 반대하는 세계대회'(세계대회)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지난 3월 24일부터 3일에 걸쳐 열린 '공개적인 실무분과 회의'에서 각국 정부대표들과 민간단체들은 세계대회 개최를 지지하며 세계대회로 가는 길목에서 인종차별을 퇴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엔 세계대회 개최를 기꺼워하지 않던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마저도 전과 달리 적극적인 태도를 비춰 눈길을 끌었다.

앞서 민간단체들은 세계대회 준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원칙들을 공동으로 마련해 실무분과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민간단체들은 "준비과정에서부터 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특히 직접적인 희생자들인 원주민 단체들, 소수자 모임들 그리고

이주노동자 조직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3월 30일 진행된 '인종주의·인종차별·외국인 혐오증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차별'(의제6)에 대한 회의에서는 △지구화가 미치는 영향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는 인종주의의 문제 △인종주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등 다양한 내용이 논의됐으며, 특히 미국은 인종차별이 심한 나라로 강한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발전이란 발전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에 적격적이고 자유롭고 의미있게 참여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전 인류와 모든 개인의 지속적인 안녕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경제·사회·문화적 진보...' 이러한 내용의 발전권 선언이 1986년 탄생한 이후,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발전권은 보편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로 재확인됐다.

하지만 이 권리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가나인 여정은 큰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다. 특히 1세계와 3세계 간의 시각 차이는 발전권을 현실화

시키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해 왔다. 이번 제55차 인권위원회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다. 게다가 발전권에 대한 논의 일정이 밤 시간(30일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에 잡힌 탓에 더욱 활기찬 논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30일 밤과 31일 오전에 걸쳐 이뤄진 논의과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은 나라 간의 엄청난 빈부 격차를 강조하며, 지구화된 경제의 부정부성이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선진국들의 경우, 시장주의를 옹호하면서 빈부격차의 원인을 국가 정책의 실패로 치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특히 미국 정부 대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시장이야말로 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독일 정부 대표는 "출판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하는 나라치고 기아로 고통받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노벨상 수상자의 말을 인용하며 은근히 서구의 우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인도네시아 정부 대표는 지구화가 가져다 준 악영향을 언급하면서 국제적 차원의 상호협력과 적절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또 "전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제금융기구들이 민주적 절차를 결여하고 있어 발전권의 실현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간단체들은 구조조정의 부정적 영향, 국제금융기구들의 문제점, 외채 탕감 등의 주제에 대한 발언에 나섰다. 파스 로마나는 "지난천 외채 부담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 극한적인 가난을 부추기는 등 발전권의 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전세계 차원에서 외채탕감 움직임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제3세계-유럽센터(Centre Europe-Tiers Monde)는 "유엔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지구화와 자유주의화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경제강대국들과 다국적 기업의 편에서는 모습이 두드러진다"며 "과연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의미의 발전권 실현이 가능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덧붙여 "유엔은 경제 지구화의 악영향부터 살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네바:이주영)

국보법·노동권, 여전히 국제적 비난대상

국제 민간단체들, 한국 인권상황 거론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노동권 보장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의 관심사이자 비판의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

지난 6, 7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기본적 자유와 인권 침해 문제'(의제 9)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 민간단체의 지적이 잇따랐다.

7일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은 "한국에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노동자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노동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결정을 소개하며 이는 "경제 위기 이후 대량 해고 가 단행되는 등 노동자들이 희생을 전담하고 있음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6일에는 '고문 반대 국제연합'과 '12월 12일 운동 국제 사무국' 등 두 단체가 공동 발언을 통해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말 한국 정부가 많은 장기수를 석방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심수들이 감옥에 남아있고, 국가보안법은 계속해서 양심수를 양산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

- 사건: 98고합532
- 피고인: 김종철
- 검사: 남명현
- 변호인: 변호사 정덕현
-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 위반의 점은 무죄.

(중략)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3항, 제5항의 해석기준

나. (중략) 제3항, 제5항도 제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소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중략)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란 이적단체의 감령 및 활동상황이나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라고 볼 것이어서, 단지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언동을 하고 북한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활동을 모두 금지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 가운데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관계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배제하고, 이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려면 찬양·고무의 점 및 이적표현물에 있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이적단체 가입의 점에 있어서는 그 감령이나 활동내용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비판하거나 북한의 사회를 찬양하고, 북한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중략) 단체에 있어서 이적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단체의 구성경위, 감령 활동상황 및 사회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하고, 찬양·고무행

위나 표현물의 내용에 있어서 이적성의 여부는 그 발표의 동기와 아울러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중략) 유엔인권이사회가 위 사건(김근태, 박태훈 국가보안법 위반사건-편집자)을 접수하여 심리한 결과, 1998. 10. 20 및 1998. 11. 3 위 유죄 판결들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소정의 표현의 자유 및 그 제한에 관한 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채택하여 (중략) 사법부에 직접 위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통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중략) 대한민국은 구체적인 위 사건들에 대하여 위 인권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사법부를 포함한 국가기관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위 인권이사회의 견해를 가능한 한 최대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3. 판단

나. (1) (중략) 한총련은 그 의장 김근태, 대의원들이 1년을 임기로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전원 교체되고, 매기수마다 별도의 출범식을 행하고 있어 그 간부진의 구성과 성향에 따라 매년 한총련의 노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비록 제5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로서 규정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제6기 한총련이 당연히 이적단체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감령의 내용이나 활동의 태양 등을 검토하여 보아야 이적단체인지 여부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6기 한총련은 그 감령에 있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듯한 주장이 있어 다소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적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적단체임을 인정할 증거

가 없다.

(2) (중략) 피고인의 언동에는 다소 지나친 표현도 없지 않으나, 대체로 피고인이 언급한 주제가 학교내의 문제나 국내의 정치실정에 국한되는 것이고 또는 한총련에 대한 당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의 표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지며, 그러한 피고인의 언행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3) (중략) '민족중대 3. 4월 사업계획서' 1부를 교부받아 이를 소지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문건에는 한국이 정치,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미국에 예속된 것으로 규정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부르짖고, 자주통일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의 철폐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적 합의나 정서에 반하는 과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위 내용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소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고 이에 동조하는 한편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단체인 제6기 한총련에 가입하였고,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999. 4. 1

재판장 판사 한상권
판사 이정호 판사 고종영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10일(토)

제 134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대법원도 "보안관찰 부당" 판결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

출소한 국가보안법 전력자들을 마구 잡이로 감시·통제하며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관찰처분에 대해 법원이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9일 대법원 제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했던 고원(35·대학원 박사과정) 씨의 보안관찰 처분취소소송에서 법무부장관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서울고법 특별11부 판결)대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관련기사 본지 1998년 12월 18일자). 앞서 지난 2월 12일 대법원 제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도 장민성(사노맹 사건) 씨의 보안관찰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처분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한 8일 서울고등법원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 역시 이은경, 정명섭 씨 부부가 제기한 보안관찰 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씨 부부는 92년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뒤 98년 4월 27일 법무부로부터 보안관찰처분을 통보받자 이에 불응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보안관찰처분 취소판결이 잇따르는 것은 보안관찰 처분이 오로지 검찰과 법무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뿐, 전혀 합리적·상식적 근거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은경 씨 부부의 경우, △현재까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출소 후 기간이 일천한 점 △높고 활동능력

이 왕성하며 △같은 사노맹 조직원이자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들이 동거중인 점 △북역중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며 수차례 단식한 사실이 있고 △함께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나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장기간에 걸쳐 사회주의 혁명사상에 몰두했던 자들로서 여건이 조성될 경우 재범의 우려 있다는 것 등이 보안관찰 처분의 사유였다.

"국제사회 지지 얻기 힘들 듯"

AI, 한국 인권법 우려·비판

국제엠네스티(AI)는 9일 성명을 발표,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엠네스티는 인권위원회의 설립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했으며, 현재의 인권법안으로는 나약하고 실효성을 갖기 힘든 인권위원회가 설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엠네스티는 인권법안의 확정과정에서 인권단체나 인권전문가들과의 적절한 협의과정 없이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시민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인권위원회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엠네스티는 "논란을 빚고 있는 인권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시민사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 학원사찰 도중 대학생 치고 뺑소니

대학 내에서 사찰활동 중이던 경찰이 대학생들에게 발각되자 차량으로 학생을 치고 달아나다 불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오후 3시 서강대학교에서 이창용 씨 등 경찰 2명은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구받자 학생 3명을 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나다 불잡혔다. 서강대학교 총학생회측에 따르면, 경찰은 신분확인용을 요구하는 학생 가운데 두 명을 차로 밀어 부친 뒤, 또 다른 학생 한 명을 차량에 매단 채 20여 미터를 끌고 갔다. 이어 차량을 가로막고 나선 조 아무개(정치외교) 씨를 차량으로 덮쳐 조 씨는 인대가 끊어지는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창용 씨 등 달아나던 경찰은 신촌 일대의 교통체증에 막혀 학생들에게 불잡혔으며, 곧바로 마포경찰서로 인계됐다.

청년진보당은 이에 대한 긴급 성명을 발표, "뺑소니까지 치면서 경찰이 숨기고 싶어 한 것은 학생들에 대한 '불법사찰'이었다"며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불법사찰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7시 서강대생들이 경찰의 사찰 및 뺑소니 사건에 항의하며 마포경찰서를 방문하려하자 전경들은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이를 제지해 부상을 입는 학생이 속출했다. 경찰이 폭력적 진압에 나서자 학생들은 돌을 던지며 맞서기도 했다.

만신창이 인권법안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
4일째 (곳: 명동성당)

-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시시오 -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개정론자와 존치론자 간의 한판 격돌이 벌어졌다. 그 결과는 개정론자의 '한판승'. 8일 밤 10시 방영된 KBS '갈등점의 쟁점토론'은 공중과 방송으로는 이례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놓고 찬반토론을 벌였다. 국가보안법 개정(또는 폐지)에 찬성하는 토론자로는 백승현 변호사와 조국 교수(울산대 법학과)가 참석했고, 국가보안법 존치론자(개정 자체에 반대)로는 이승환 변호사와 도준호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참가했다.

먼저 백승현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이 △국가안보에 대한 기여보다 민주발전을 저해하거나 비판세력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 △공격적·적대적 대북관을 형성함으로써 평화통일 노력이 장애가 되어왔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했다.

반면, 도준호 논설위원은 "개정론자들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데 있지 않냐"며 △북한의

도발과 체제전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의 바탕이 필요하며 △북한과의 상호성 차원에서 우리부터 '무장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승환 변호사도 "좌경이념세력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법적 제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찬성론자와 반대론자 간의 격론이 한 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지만, 양측의 평행선은 이어졌다. 그러나 토론이 계속될수록 국가보안법 존치론자들이 수세로 물리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승환 변호사는 "국민들이 충분히 법을 숙지하지 못해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으며, 도준호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엄연한 데 이를 용납해야 되겠느냐"고 독청만 높였다.

국보법 존치론자들의 한결같은 논거는 '국가안보'였는데,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인권침해는 오히려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고 이는 국민들이 국가안보라는 용어에 회의를 갖게 함으로 국가안보를 더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백승현 변호사는 "미래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힘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며 "사상검열이 가능한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과 함께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 1천26명의 응답자 가운데 66%가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찬성했고, 33%가 반대의 뜻을 밝혔다. 연령별로는 30대의 75%가 국가보안법의 개정에 찬성했으며,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도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하는 사람(54%)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서"(46%)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반대 이유로는 "국민 안보의식의 약화를 초래한다"(55%)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인권활동가 단식, '지지 발길'

9일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와 재논의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들의 명동성당 단식농성이 사흘째 진행됐다.

이날 농성에는 최근 출소한 강용주 씨가 참여, "사상전환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강연을 했으며,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 청년진보당 최혁 대표, 홍근수 목사, 최종수 신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동완 목사 등이 지지 방문을 했다. 또 전교조 사립학교 교사와 서울대, 성신여대, 한성대 대학생 등의 지지 발길이 이어졌다.

정치사찰 중단 촉구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산하 공안탄압 대책위원회 등은 9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공안탄압 대책위 등은 지난 3월 31일 성남지역 민간실업대책기구에 대한 경기도경의 불법 사찰과 구로지역 재선거에서 청년진보당에 대한 사찰 사실을 지적하며, "최근 사태의 진상을 낱알이 공개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행사와 동정

- 인권법의 올바른 제정과 공안탄압 규탄 결의대회
 - 4월 10일(토) 오후 3시 / 명동성당 입구
 - 주최: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653-1133)
- 〈공청회〉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
 - 4월 12일(월) 오후 2시 / 프레스센터 19층(기자회견장)
 - 주제발표: 조용환 변호사
 - 지정토론자: 법무부 1인(미정), 이기문(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자민련 1인(미정) 이신범 의원(한나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양건(한양대 법과대학장), 곽노현(방송대 교수), 허영춘(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이석연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 주최: 대한변호사협회(3476-4003)
- 〈학술심포지엄〉 의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한 법적 모색
 - 4월 12일(월) 오후 2시 /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최: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3672-025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13일(화)

제 134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인권위, 국가기구로"

변협 주최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인권활동가들 단식농성'이 6일째로 접어든 12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인권법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발제자 조용환 변호사를 비롯해, 곽노현(방송대 교수), 이기문(국민회의 인권위원장), 이석연(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이신범(한나라당 의원), 양건(한양대 법대 교수), 허영춘(유가협 의문사지회장) 씨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지만 법무부는 끝내 참석을 거절했다. 변협은 "법무부가 인권법안의 견해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지정토론자 중 응원군을 많이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다 참석자들의 명단을 확인한 뒤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일치된 목소리를 냈다.

조용환 변호사는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고 조사권마저 축소되어 있는 인권위원회는 정권에 예측되기 십상"이라며 "정부가 실효성도 없는 약체기구를 만들려는 것이 '국제사회 홍보'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인권위가 국가기구가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법무부가 국가의 인권업무들 '관리'하려 하는 것은 위험적 위협도 불사한 오만"이라고 꼬집었다.

곽노현 교수도 "법무부가 여성특위 등과의 권한 중첩을 문제삼아 인권위의 위상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든다"고 주장하며 "국가기관의 권한 중첩이

문제라면 며칠전 발표한 '국가권리구제위원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법무부의 무원칙을 따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나라당이 민간단체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 이신범 의원은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중앙선관위처럼 인권위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원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변호사단체가 각각 3인씩 추천하고 이에 대한 공정성, 청렴성 등은 국회청문절차를 거치도록 제안했다.

☞ 2면으로 이어짐

기자의 눈

넘기 힘든 검찰의 벽

최근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해 7월 김석진 씨가 고소한 교도관들을 무혐의로 처리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김 씨는 96년 마산교도소 북역 도중 여공석 소장 등 교도관 7명에게 고문과 협박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본지 98년 7월 10일자 참조). 교도관들에 의해 "정말 죽을 뻔했다"고 주장하는 김 씨는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법에 의지해 봤지만 결과는 오히려 김 씨의 울화를 더 부채질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처음부터 불법행위를 밝혀 엄벌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증언이나 정황으로 보아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보이지만 교도관 7명을 모두 기소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김 씨를 달랬다. 가혹행위 경위를 캐다보면 범죄 행위는 교도소장에까지 이른다고 김 씨는 주장한다. 검찰이 뚜껑도 열지 않고 사건을 덮어버린 배경에 의혹이 생기는 것도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검찰이 김 씨에게 "한 사람만 잡아넣자"고 사건 축소를 종용했다는 것도 이러한 의혹을 부채질했다. 조사를 받던 교도관들이 가혹행위 사실을 발백하다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면 "미안하다. 우리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해괴한 사과를 할 때 검사는 오히려 "밥 먹고 하자"며 떠났다고 한다.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중요한 순간을 탄압으로 얼버무리는 검찰의 순발력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사건을 맡은 검사가 계속 바뀔 것도 눈에 익은 검찰의 수순. 이런 경우 전임자가 밝혀낸 범죄 사실과 증언은 후임자가 사건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 김 씨의 경우도 전임이었던 임택택 검사가 "최소한 불구속 처리해 주겠다"고 장담까지 했다지만 후임에겐 금시초문. 임 검사는 "내가 끝까지 맡고 싶었는데,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깝다"는 연속극 대사같은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은 무혐의 처리로 종결되었다.

검찰에 '배신'당한 김 씨는 "다 잊어버리고 배나 타야겠다"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아직 남아있는 절차(항고 및 재정신청)에 다시 희망을 걸고 있다.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 및 재논의를 촉구하는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 7일째 (곳: 명동성당)
 <단식농성 해단식>
 오후 6시 / 명동성당

대학생 "3자 개입" 선언

공공연맹 파업투쟁 연대키로

서울 지하철 노조의 파업이 4월 19일로 예정되는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총학생회 등 30여개 대학 학생회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청년실업문제를 포함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며 "노동 시간 단축을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공공연맹의 파업을 지지하는 의미로 3자 개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당국이 4월 8일 현재 145명의 민주노총 노조 간부를 구속, 수배하고 최근 공안대책회의를 가동하는 등 노동자·민중의 요구와 불만을 '신공안'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사회 전반을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당국은 고용·실업이라는 대학을 포함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는 학생들에게마저도 '불온한 노학연대 엄단'이라는 시대착오적 잣대를 들이밀며 반민중적, 반인권적 작태를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각 대학 학생회는 4, 5월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결합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3자개입 실천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력한 노학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정리해고 중단과 35시간 법정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과 공공연맹의 파업투쟁 및 노학연대 투쟁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인권법 공청회> 1면에서 이어짐

여당측 참석자인 이기문 국민의회의 인권위원장은 "국민의 힘으로 정권을 바꿨지만 관료조직의 의식까지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인권법안은 법무부 장관의 독선뿐 아니라 검찰의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개혁의 한계를 토로했다.

주요공파아내

- ▶ 4월 13일 (화)
 - 단병호(업무방해) 오전 10시, 서울지방법원 320호, 합의 2부, 선고
 - 신대영/도영경(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합의10부, 신건
- ▶ 4월 15일 (수)
 - 김창현 외8(국보법 반국가단체 구성 등, 영남위원회 사건) 오후 2시, 부산고등법원 103호, 속행
- ▶ 4월 16일 (금)
 - 백성기 외3(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합의4부, 속행
 - 유성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합의2부, 신건

주간인권호름

(99년 4월 5일-4월 11일)

1.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 돌입
18개 인권단체 활동가 30여명,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 및 재논의"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일주일 간 항의단식 투쟁 돌입 (4/7) / 국제엠네스티 등 12개 국제인권단체,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이 독립성 결여되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며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 촉구 (4/11)

2.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최근 백전백승!
대법원 특별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 사노맹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고원 씨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 (4/9) /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 이은경·정명섭 씨 부부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 (4/8)

3. 검찰 "그래도 한총련은 이적단체"
검찰, 6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대전지법 판결과 관계없이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하고 대의원들을 구속키로 / 한총련 대의원대회 원천봉쇄시 불심검문 불복중운동으로 맞서겠다"고 밝혀 (4/11)

4.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촉구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대책위원회', 사형집행 24주기를 맞아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대규모 추모식 개최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조치를 촉구하는 각계 인사 1천인 선언 발표 (4/8) / 대구지역 진상규명 대책위원회, 대구 경상감영공원에서 인혁당 추모행사 개최 (4/9)

5. 사찰중이던 경찰, 대학생 치고 뺑소니
경찰청 보안국 소속 경찰관이 서강대 구내에서 승용차에 탄 채 노동운동 조직 회원을 미행감시하다 대학생들에게 들켜자, 학생들을 차로 친 뒤 뺑소니를 치다 붙잡혀 (4/10)

6. 장애인 모독 발언 파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 단체들, 행정자치부 공보관실의 김 아무개 서기관이 지난 1일 방송시와의 인터뷰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실제 써먹지도 못하는 데 국민의 세금만 축내는 것 아니냐"고 발언한데 대해 김 서기관의 파면과 행정자치부 장관 등의 사과 촉구 (4/8)

◆ 수지로 본 인권 ◆

<IMF형 가출 급증>
가출인 신고가 97년 2만2927명에서 98년 2만7856명으로 21.5% 증가했으며, 미야 발생 신고도 97년 3266명에서 98년 3556명으로 8.9% 증가(서울경찰청 182센터, "가정불화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한 부모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 4/11)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대학교지 기획사 국보법 연행

<흥기획> 사장 등 직원 7명 장안동 구금

대학신문과 교지 제작업무를 해오던 기획사 직원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체포됐다.

13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형사들은 성동구 성수2가에 위치한 <흥기획>과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신문제작용 필름 및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기획사 사장 홍윤주(34) 씨를 집 앞에서 연행하는 등 사장 및 직원 9명 전원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해 이 가운데 홍윤주 사장과 주재권(30) 영업부장 등 7명을 계속 구금하고 있다.

연행됐다 풀려난 오종근(34) 경리부장은 "경찰이 임의동행하지 않을 경우

긴급체포하겠다'고 협박해 장안동까지 끌려갔는데 도착하자마자 '긴급체포된 것'이라고 말해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연행된 직원들에 대해 아무런 영장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조사받은 내용을 바깥에 나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쓰도록 요구받았으며, "직장에 계속 다니지 말라. 계속 직장에 다니면 구속될 것이다"는 협박도 받았다고 말했다. 장안동 대공분실측은 "홍 사장과 영업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나머지 4명은 긴급체포상태"라고 밝혔다.

이날 체포된 <흥기획> 직원들에 대해 경찰은 △전국대학신문사기자연합 출

1999년 4월 14일(수)

제 134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균

범식 자료집 △경희대 총학생회 계간지 <세상열기> △춘천교육대학 교지 △한총련 관련 문건인 <구세군> 등을 이적표현물 제작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은 영장을 자세히 확인하려는 직원에게 "공무집행방해"라며 수갑을 채우기도 했으며, 기획사 직원이 아닌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직원 2명을 장안동 대공분실로 연행했다가 풀려났다.

<흥기획>은 서강대, 외국어대, 한신대, 서울시립대, 연세대 원주교정, 서울교대 등의 대학신문과 교지 제작 등의 업무를 해왔다.

서진청 회원 4명 연행

이적단체 구성 혐의

옛 서울진보청년회(서진청) 소속 회원 4명이 13일 경찰에 연행됐다.

연행자는 김용신(32·학원강사) 김수자(29·구로신문 발행인) 고경섭(31·노무사) 박성아(29·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원) 씨 등이며, 이들은 현재 홍제동 대공분실에 구금되어 있다.

진보민중청년연합(진보민청) 산하 단체였던 서진청은 이미 해산돼 활동을 중단했으나, 경찰은 94년부터 계속되어온 진보민청과 그 산하 단체에 대한 탄압의 연장선상에서 이날 서진청 회원들을 연행한 것으로 보인다.

진보민청 산하 단체들은 94년 우리청년회 사건으로부터 94년 사회민주주의청년연합, 97년 사회민주주의청년연합 2차, 97년 부천민주노동청년회, 98년 관악노동청년회, 98년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잇따라 이적단체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98년 6월엔 진보민청 중앙간부들이 모두 구속체포되기도 했다.

진보민청은 지난해 12월 해산됐다.

“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표명

유엔인권고등판무관 국가인권기구 자문위원인 브라이언 버드킨은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설치과정은 아시아 지역에서 아주 중요한 선례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인권활동가의 단식농성,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단체의 반대성명 등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을 둘러싼 최근의 반대 움직임을 지켜볼 때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버드킨 씨는 12일 제네바 유엔 27회의장에서 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민간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밝혔으며, "정부는 인권위 설치과정에서부터 민간단체들을 참여시켜 협의해야 하며 민간단체들은 설치 이후에도 꾸준히 협력과 감시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드킨 씨는 또 "한국 정부의 인권법안 내용을 정확히 검토해 보고 싶지만 한국의 법무부가 법안을 제공해주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실망의 뜻을 표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권단체들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위원회 설치 과정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뤘으며, 버드킨 씨는 "아시아 지역 대부분의 국가인권회가 모두 독립성과 실효성이라는 측면에서 약해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며 "이는 민간단체들의 신뢰와 협력을 받지 못하는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희망의 빛' 발견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7일간의 명동성당농성 마치고 해단식 가져

"사실 처음엔 희망을 품지 않았습니
다. 하지만 농성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리고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서
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동지들에게
애정을 보냅니다."(전북 평화와 인권
연대 김영옥 교육위원장)

지난 7일부터 정부의 인권법안 철회
및 재논의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
입했던 인권활동가들이 13일 저녁 6시
명동성당에서 농성 해단식을 가졌다.
꺼칠해진 피부, 땀수룩한 수염, 농성
에 들어가기 전보다 확연히 아픈 얼굴
속에서도 농동자는 빛을 발했고, 7일
간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농성자들은
오히려 더 힘찬 모습을 보여주었다.

농성단의 가장 막내였던 서울대 이석
민 인권위원장(법학과 4년)은 "이곳에
서 역동적인 인권운동의 가능성을 배
웠다. 우리는 혼자자 아니었고, 여성
이든 동성애자든 모두가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였다. 그리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백50여
명이 함께 한 이날 해단식은 투쟁의
정리가 아닌 투쟁의 시작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최영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모임 회장)는 "인권법안 확정과정을
돌이켜볼 때, 결국 김대중 대통령이
해은 말들은 '포인트 모션'에 불과했고
우리는 거기에 속았던 것"이라며 "이
번 단식농성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었
고 이제 위상과 권한에 있어 명실상부
한 국가인권기구를 만들기 위해 투쟁
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박석운 노동
정책연구소장(IMF법국민운동본부 집
행위원장은) "법무부가 본래의 목적
대로 인권보장에 힘썼다면 왜 지금까
지도 인권침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
나"며 "법무부가 있기 때문에 국가인
권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주장은 고양
이가 생선가게를 지키므로 따로 지키
는 사람이 필요 없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지"라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인권활동가 단식농성단은 이어 김 대
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했으
며, "인권법안의 철회를 위해 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것"이라고 결의
를 밝혔다(공개서한 3면 게재).

공추위, 인권법투쟁 확산키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설치' 투쟁을
이끌어왔던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
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
공추위)도 이번 '인권활동가들의 단식
투쟁을 계기로 다시 투쟁의 기지개를
켜기로 했다. 당면 과제는 △정부 인
권법안의 국회 상정 저지와 △전직 공
안검사로서의 본색을 거리낌없이 드러
낸 박상천 법무부 장관의 퇴진이다. 이
를 위해 공추위는 조만간 공동대책
위 형태로 조직을 확대개편하고 인권
법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발시키

기 위한 대중집회와 토론회를 잇따라
개최할 방침이다. 그 출발로 오는 19
일 공대위 결성식에 이은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한편, 조준희 변호사등 변호사 130명
은 13일 한 일간지에 게재한 공동선언
문을 통해 "정부는 반인권적 인권법안
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형근 의원 검찰에 고소

서경원 씨 명예훼손 혐의

서경원 전 국회의원은 13일 정형근
현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명예훼손 등
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0일 '고문·국회의원을 심
판하는 시민모임(준)'을 구성한 서 전
의원은 고소장에서 "정형근 씨가 고소
인 등이 현정부 특히 안기부와 제휴하
여 있지도 않았던 고문을 주장하며 자
신을 매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며, 고소인을
'교정간첩'으로 표현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새로 나온 책

'인신구속과 인권'

황정근/법영사/402쪽/2만원

▲ 97년 1월 1일, 모든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실시.
▲ 97년 11월, 구속영장실질심사 축소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한때 법원과 검찰의 세력싸움으로 왜곡되었던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의
짧은 이력이다. 하지만 그 이면엔 인신구속의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관행
에 제동을 걸고자 했던 세력과 현실론을 앞세워 이를 막고자 했던 수사기
관의 밀고담기는 한판 격돌이 있었다.
실제 법원통계에 따르면 구속영장실질심사율은 97년 81.8%에서 71.8%
로 줄어들어 구속영장실질심사제 축소이후 불구속제판원칙이 크게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격들의 처음과 끝을 목격했던 현 고등법원 판사가
'인신구속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했다.
책은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도입의 의미·시
행의 경과·평가·굴절' 등을 기본 축으로 서술되어 있다. 더불어 인신구
속제도의 헌법정신과 인권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신구속제도 역시 인권의
시각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임의적 영장실질심사제
의 국제법적 조망, 미국·일본의 인신구속제도와 형사사법 등의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저자는 "인신구속제도의 이론과 실제, 그 이상과 현실, 그
리고 빛과 그림자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임으로써 형사사법의 발전에 이바
지했으면 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형사소송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 형사
소송을 국제규범에 합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김대중 대통령님.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개나리꽃 활짝 피고 거리를
오가는 젊은이들의 옷차림도 경쾌한 명동성당 들머리에
서 우리는 무거운 겨울옷을 걸치며 7일 동안의 단식투
쟁을 감행했습니다. 정치인들의 밀실홍정 끝에 만신창
이가 되어버린 '인권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던 바로
그 날 이후 우리는 분노와 실망을 되짚으며 단식투쟁을
결심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여 쓸모 있는 국가인권
기구의 실현을 바라던 우리의 노력이 정치인들의 책략
에 허망하게도 유린당한 그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
는 일이란 분명 자신을 희생하는 투쟁뿐이었습니다.

실망감에 휩싸이면서, 가슴 밑바닥에서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는 대통령께서 그 어려운 선거에
승리하셨던 감동적인 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던 그 약속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군사정권에 의하여 처참한 고난을 받은 분의
입에서 울려 나왔기에 그저 '말'이 아닌 '약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는 인권 부재의 어
두운 시대를 오랫동안 견뎌야 했던 우리 국민에게 바로
희망 그 자체였으며, 인권 피해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 인권활동가들에게 새 시
대의 예감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의 감동은 환상이었
다고, 그 날의 약속은 거짓이었다고, 그날의 희망은 부
질없는 꿈이었다고, 그 날의 예감은 착각이었다고...

국가인권기구 설립논의가 희망의 색깔에서 실망의
색깔로, 실망의 색깔에서 다시 분노의 색깔로 변해온
지난 1년간은 바로 당신에 대한 우리의 희망이 실망으
로 변하고 그리고 다시 분노로 변하는 과정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공안검사 출신인 법무부 장관의 은갖 모
락과 억지와 고집 속에서 빛어진 이른바 '인권법'안이
바로 당신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순간 우리
는 능름했던 대통령께서 실은 무기력하고도 무능한 분
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에 대하여
처음으로 치미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진
정 믿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신 국무회의
에서 통과된 그 허약하고 비뚤어진 이른바 '국민인권위
원회'가 실제로 수많은 억울한 이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소외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진정 믿고 계십
니까? 우리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 사회를 인권대통령
답게 '개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 버린 것 같

아 안타깝습니다.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젊은 인권활동
가들이 이제 당신을 '인권대통령'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대통령님.

언젠가 당신이 다른 아무 것도 아닌 "인권대통령으
로 남고 싶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감히 말씀 드립니다. 지금 당신은 분명히 '인권
대통령'으로 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인권개혁의 완강한
결집을 박상천 법무장관을 두둔하는 당신은 '인권대통령'
으로 남을 자격이 없으며, 독립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할 강한 의지가 없는 당신은
'인권대통령'으로 남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통령님!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해임하십시오. 그
약속했던 군사정권 시절의 법무부 장관들과 별반 차별
성도 없는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지금이라도 해임하십
시오. 그리고 지난 3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인권
법'안을 누구보다도 먼저 당신 스스로의 손으로 철회하
십시오. 그리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인권활동
가들로 하여금 당신을 '인권대통령'이라고 부르게 해주
십시오.

김대중 대통령님.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은 인권을 사랑합니다. 우리
의 인권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들은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인권 피해자들과 함께 숨을 쉽니다. 그 수많은 피해자
들은 우리와 함께 숨을 쉽니다. 우리 젊은 인권활동가
들은 이 땅의 인권운동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그
전통에서 힘과 용기를 길어 올립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힘과 용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만들
기 위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땅
에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세우고야 말 것입니다.

1999년 4월 13일

명동성당에서 단식투쟁을 마치며

18개 단체 인권활동가
연합단식농성단 일동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a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15일(목)

제 134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국 정부 대표는 12일 각국 대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정부 대표는 "한국정부가 국가보안법 문제와 관련, 법 폐지를 요청하는 사람에서부터 존치를 요구하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협의중에 있다"며 "국제조약과 유엔인권 이사회의 견해는 물론, 국내의 다양한 여론에 기초해 법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한국 민간단체 대표로 발언에 나선 조시현 교수(성신여대 법학과)는 국가보안법의 인권침해 문제를 발표해 각국 대표들의 깊은 관심을 끌었다. 조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각국 민간단체들은 앞다투어 발표문을 요청했으며, 중국, 말레이시아 민간단체 대표들도 잇따라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현지의 민간대표단은 전했다.

조시현 교수는 "식민시대와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특히 군사독재의 정권안보용으로 기능했기 때문에 고문, 실종, 자의적 구금을 일삼아왔고 이는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용인되어 왔다"며 "김대중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413명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았는데 그중 381명이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또 "경제 위기 아래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은 경제·사회·문화

적 권리까지도 위협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어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과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해 줄 것 △ 유엔인권위원회 내에 국가보안법에 대

한 특별보고관과 인권활동가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줄 것 △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 유엔기구 내에서 국가보안법 문제를 심도 깊게 다루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한편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은 12일 아시아태평양 민간단체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보안법을 계속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유엔의 지속적인 관심을 약속했다.

대학가 불심검문 인권피해 재연

한총련 대의원대회 빌미 흥익대 출입통제

오는 17일로 예정된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앞두고 대학가 불심검문이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대학생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가 재연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기동대는 14일 오전 흥익대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실시하던 중 이에 항의하며 '불심검문 불복종 활동'을 전개하던 이 학교 학생 이윤진 씨(동양학과 4학년) 등 6명을 마포경찰서로 연행한 뒤 6시간만에 풀어줬다. 이날 불심검문은 흥익대학교가 한총련 대의원대회 장소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된 것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날 불심검문 상황에 대해 학생들은 "전경이 소속·검문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신분증 제시와 소지품 검사를 요구했고 이에 불응하면 길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또 연행 당한 학생들은 "경찰차로 끌려가는 도중 심한 몸싸움으로 인해 옷이 찢어지고 안경이 부러졌으며 심한 타박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심지어 학교출입 통제에 항의하는 외부인들에게 "학교측이 시설보호요청을 했기 때문에 외부인은 출입할 수 없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흥익대학교 측은 시설보호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총장님은 대의원대회 개최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으며, 시설보호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흥익대 뿐 아니라 한양대, 수원여대, 서울 시내 버스터미널 등에서도 경찰의 불심검문이 강화되고 있어 이에 따른 대학생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토론회> 누구를 위한 한미/한일투자협정인가?

오늘(목) 오후 6시 /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관: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02-778-4001)

한총련 7기, 정말 이적단체인가?

"강령·규약 동일한 1-4기엔 이적규정 안했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한 일인가?

공안당국이 계속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할 방침인 가운데, 14일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들로 구성된 '한총련 대의원대회 평화적 개최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토론회를 개최,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이 자리에서 최상천(연세대 문과대학 부학생회장) 씨는 "한총련의 강령을 요약하면 조국의 자주화, 사회의 민주화, 통일, 학생운동의 국제적 연대, 건강한 민족문화 구현, 학원의 공동체 회복, 학우들간의 부분별, 계열별 활동을 지원, 건강한 사회인을 양성한다는 내용"이라며 "한총련의 결성 목적이 북한을 이롭게 할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은 물론, 그 활동 자체도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동일한 강령·규약을 가지고 있던 1-4기 한총련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가지고 5기 한총련에 와서야 갑자기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씨는 또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외쳤던 1-4기 한총련은 96년까지 당국의 허가 혹은 묵인 아래 평화적으로 출범식을 치렀으며, 심지어 96년 전북대에서 열린 4기 한총련 출범식에서는 유종근 전북도지사가 '한총련은 민족의 미래'라는 축사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할 이덕우 변호사는 "한총련 이적규정이 철회된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폐지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이는 임시적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한총련에 대한 이적단체 굴레가 법률적으로 부담할 뿐 아니라, 미탈퇴 대의원에 대한 탈퇴공작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탈퇴공작에는 각종 협박과 허위 사실 유포행위 등이 동반되고 있다"며

"불법 탈퇴공작 행위에 대해 민형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명동성당 입구에서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위한 각계 인사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다.

"현장사진 고의누락!"

김중위 사건, 국방부 은폐 의혹

국방부가 김중위 사망사건을 은폐·조작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중대한 증거가 제시됐다.

14일 국회 국방위 하경근 위원장은 김중위 사망 직후 미군 포터 하사가 찍은 1백90여 장의 사진 중, 특조단의 수사발표 내용과는 다른 사진 몇 장을 공개하면서 "타살을 입증하는 이들 몇 장의 사진을 특조단에서 공개·조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을 고의로 축

소·은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또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포터 하사가 채증한 사진에서 철모와 크레모어 스위치 박스 파손 사실이 발견됐는데도 특조단은 이를 한번도 공개하지 않았다"며 "특조단의 수사발표는 은폐와 조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천주교인권위는 "1차 사진 채증 이후 총이 놓인 위치가 바뀌고 함께 있던 전투모도 최소한 3번에 걸쳐 위치가 변동된 것은 현상이 수차에 걸쳐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방부 특조단이 이 사실을 끝까지 숨겨왔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는 그밖에 △김중위와 떨어진 권총간의 거리 조작 △최초 발견자인 박 일병 진술의 허구성 등을 의혹으로 제기하면서, "수사발표시 중요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특조단장의 처벌 및 문제의 사진을 은폐하는데 관여한 모든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착수"를 요구했다.

한편, 특조단은 14일 '김중위 사망한 초소는 외부인의 접근 가능성이 전혀 없고, 당시 소대원 45명을 모두 조사했지만 알리바이가 완벽하다'며 이번 사건을 자살로 결론지었다.

<자료> 한총련 강령

- 전문

한총련은 민중중심, 학우중심, 단결의 사상을 무기로 애국의 길을 가는 백만 청년학생들의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한총련은 일제식민지 치하의 식민지 민족해방투쟁을 계승하여 미국을 반대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화를 이룩하며 민중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 강령

1. 미국을 반대하고 모든 외세의 부당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간섭과 침략을 막아내고 목숨보다 소중한 민족자주권을 회복하여 조국의 자주화를 이룩한다.

1. 사회전반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비민주적 요소를 척결하고 국민들의 자주적, 창조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한 사회민주화를 실현한다.

1. 조국의 영구분단을 막아내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한다.

1. 학원을 지배 장악하려는 제도와 음모를 타파하고, 교수-학생-교직원이 학원의 주인주체로 서는 학원의 민주화, 자주화를 실현한다.

1.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층 민중들뿐만 아니라, 모든 애국적 의식을 가진 각계 각층과 굳게 연대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청년학생들과 공동으로 싸워나간다. (후략)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 rights(천,하) · E-mail: rights@cha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16일(금)

제 134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정형근! 감히 인권을 팔아?"

유엔인권위 참석결정...인권단체, 분노·경악

과거 안기부 고문수사의 지휘 책임자로 지목받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민간단체(NGO) 대표 자격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4월 17일-23일),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기조연설을 한다는 소식에 국내 인권단체들이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15일 한국인권단체협의회(상임대표 임기란, 인권협)는 성명을 발표, "정형근 의원의 유엔 인권위원회 참석은 인권과 인권운동에 대한 모독이기에 절대 반대한다"며, "정 의원이 과거 잘못에 대한 정중한 사죄와 용서를 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슨 인권옹호자나 피해자인 양 국제사회에 나가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을 목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형근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5, 6공 시절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제1국장, 제1차장 등을 지내면서 서경원 의원 사건,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사노맹 사건, 남매간첩단 사건 등을 수사했으며, 당시 피의자들에 대한 고문수사를 지휘한 책임자로 지탄받아 왔다. 또한 정 씨는 87년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일에도 앞장섰던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인권협은 "그는 결코 인권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인물로 이미 법정에서 정의의 심판을 받았어야 했다"며 "정의원이 일정대로 유엔 인권위원회에 참

석한다면 제네바 현지에서 세계 인권단체들과 함께 정 의원의 기조연설을 행동으로 막고 그가 인권가해자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간단체 대표자격도 급조

정형근 씨는 또 자격도 없는 민간단체 대표를 사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또 한번 비웃음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15일 새정치국민회의는 정동영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정형근 의원이 대표한다는 NGO는 한국의 NGO가 아닌 미국의 민간단체인 국제교육발전위원회로 밝혀졌다"며 "정형근 의원은 한

국의 NGO를 대표해서 유엔에 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NGO 회원자격으로 유엔에 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회의는 또 "정형근 의원은 지금까지 국제교육발전위원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적도, 활동한 경력도 없다"며 "교육과 무관하고 관심조차 없던 사람들이 유엔에 가기 위한 편법으로 회원 자격을 급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결국 정형근 의원의 유엔인권위 참석 계획은 '잡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인권협은 "앞으로 모든 민주세력과 함께 정형근 의원을 심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그에게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를 수집하고 법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개혁국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도 16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정형근 의원이 인권탄압 사실을 고백·사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그를 추방시키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권법안 철회 촉구 집회

때: 오늘(16일) 낮 12시
곳: 종로 탑골공원

노·농·빈 연대투쟁 결의 재벌체제 및 정치권 개혁 촉구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엉거주춤 후퇴하는 속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노동자·농민·도시빈민이 재벌체제와 정치권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갑용,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 전농) 전국빈민연합(의장 양연수, 전빈연)은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노·농·빈의 강력한 연대투쟁을 다짐했다. 노·농·빈 3자는 "방만한 재벌과 부패한 정치권이 불러온 IMF 위기로 노동자에게는 대량 정리해고와 임금삭감, 빈민에게는 대책 없는 노점상 단속과 강제 철거, 농민에게는 살인적 연체금리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농가부채가 감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민중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4~5월 총력투쟁' ▲전빈연은 4월 22일 서울역에서의 대규모 '99 빈민대회' 개최 ▲전농은 4월 24일 '창립 9주년 기념대회 및 노동자·농민 연대집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5월 중으로 대규모 민중대회를 개최하는 등 강도높은 민중연대투쟁을 전개할 방침이다.

◆ 양연수(전국민민연합 의장)

순환식개발을 통해 철거민들의 기본적 주거와 생존권 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의부 빈익빈이 더욱 고착되는 상황에서도 고공의 책임은 빈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노점상 단속을 멈추고 장기적 대책을 세워 점진적으로 노점상 문제를 풀어야 한다.

◆ 소희주(전국농민회총연맹 총무부장)

농민들은 그 동안 농기계 등을 팔아서 농가부채를 일부 갚거나 이자를 물어왔지만 올해 들어 이자조차 매꾸기 힘든 상황이고 농협은 부실기업 대출로 인해 농민에게 부담만 가중시켰다. 이는 정부가 정책자금을 미끼로 농협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의 금융사업과 농민경제사업을 분리시켜 농민을 위한 농산물 가격보장 기능과 협동조합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 정성희(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정리해고 중단, 노동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구축, 임금·단체협약 안정과 산업별교섭체제 보장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층민중이 연대해 한 목소리로 정부와 재벌을 비판하고 투쟁의 결의를 모았다는 점에서 이번 노동자·농민·빈민 대표자 공동 투쟁결의는 향후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는 것이다.

불심검문 취재기자 강제연행

한총련 대대 전날, 경찰 불법행위 기승

불법 불심검문 현장을 취재중이던 <본지> 기자가 경찰에 불법 연행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5일 오후 5시 30분, 홍익대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심검문 현장을 취재하던 고근에 기자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김정희 씨, 동성애자인권연대 공동대표 임태훈 씨 등이 경찰에 강제연행됐다. 또 양현주(건축 94) 씨 등 홍익대생 3명도 경찰의 불법 행위에 항의하다 마포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연행 당시 그 사유나 장소 등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신병을 인계받은 마포경찰서 측도 "외부에서 벌어진 사실이라 우리도 왜 데리고 왔는지 모른다"고 일버무렸다. 마포경찰서측은 목비권을 행사하던 연행자들을 1시간 여만에 전원 풀어줬다.

또 이날 밤 9시 30분 경에도 불심검문에 항의하던 강성민(경영 92) 씨 등 홍익대생 4명이 마포경찰서로 강제연행됐다가 30분만에 풀려나는 사건이 되풀이됐다.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하루 앞둔 이날, 경찰은 홍익대 외에도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등 서울시내 주요대학과 서울역, 수원역, 터미널 등지에서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대, 홍익대 등에서는 소속 대학생들이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학생감시단을 구성, 불법 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거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적표현물 기준이 뭐니까?"

기획사 직원들, 체포 이틀만에 석방

지난 13일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로 체포됐던 <흥기획>의 사장과 직원들이 15일 오전 모두 석방됐다(본지 4월 14일자 참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할 만큼, 영터리 혐의 적용으로 이틀간 구금을 당했던 흥윤주 사장을 15일 낮 만났다.

- 무슨 혐의로 조사를 받았나?
- 한총련 관련 문건을 제작·배포했다는 혐의다.
- 증거로 제시된 것이 있었나?
- 경찰이 건물 밖 쓰레기통에서 수거했다는 문건을 들이댔으나, 결국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흥 사장은 "도대체 이적표현물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며 이번 사건 역시 예매모호한 국가보안법을 마구 적용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조지폐 제작과 같이 범죄임이 명백한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객관적 기준도 없는 데 우리더러 알아서 이적표현물을 판단하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결국 학생 관련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냐"고 분개했다.

14일자 <흥기획> 기사 가운데 경희대 총학생회 기관지를 <주주경희>로 바로잡습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인권정부'? 실은 '폭력정부'

불심검문 항의 대학생 무조건 연행

한총련 대의원대회 장소로 정해진 홍익대 주변에서는 16일에도 어김없이 경찰의 탈법·폭력행위가 계속됐다. 홍익대 정문을 전면봉쇄한 경찰은 소지품과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는 학생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불법 불심검문을 벌였으며, 이에 항의하며 맞서는

대학생들이 잇따라 경찰서로 강제연행되었다. 이날 오후 4시경 홍익대 정문 앞에서 '불법 불심검문 반대 캠페인'을 진행중인 홍익대생 9명은 마포경찰서로 강제연행됐다. "강제연행이므로 임의적 거하겠다"고 주장하며 경찰서를 빠져

정형근 유엔참가 저지 행동 잇따라

고문피해자 방양군 씨 제네바행 결정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의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계획과 관련, 정형근 의원이 안기부에 제지할 당시 그에게 고문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해온 방양군(전 서경원 의원 보좌관) 씨가 정 의원의 유엔인권위 발언을 저지하기 위해 제네바로 출국한다. 방 씨는 89년 서경원 의원 방북사건으로 구속돼 정 의원에게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 주말 중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또한 민가협, 유가협 소속 회원 30여명은 16일 오후 한나라당사를 방문, 로비를 점거한 채 정 의원의 유엔인권위원회 참가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16일 오전 11시엔 민주개혁국민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민가협 등 16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공동으로 '반인권 의원 정형근의 유엔인권위원회 참석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정씨의 이번 계획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김승훈 신부는 "지난날 온갖 고문을 일삼던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해서 어떠한 반성도 없이 인권을 입에 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정 의원이 유엔인권위원회에 가서 발언한다면 이는 국제적인 나라 망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개혁국민연합 양종익 연대사업국장도 "인권침해에 앞장섰던 사람이 국제회의에서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어린이도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앞으로 이들 16개 단체는 현재 제네바 현지에서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인권활동가와 아태지역 NGO 대표, 국제 인권단체들과 연대해서 정 씨의 기조연설을 행동으로 저지하기로 하고 더불어 정 씨를 국제사회에 고문 범죄자로 알리는 데 이번 기회를 활용기로 했다.

한편 정 의원은 17일 오후 1시 비행기편으로 출국할 예정인 가운데, 민가협 등 각 사회단체 회원들은 오전 10시 30분부터 김포공항 국제 2층사 출국게이트 앞에서 정 의원 출국에 항의하는 피켓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1999년 4월 17일(토)

제 135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나왔다. 그 과정에서 경찰이 학생들을 제지하기도 했지만, 학생들은 이를 물리친 채 학교로 되돌아갔다. 이어 밤 9시경 홍익대생 4명이 다시 마포경찰서로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마포경찰서측은 강제연행 사유에 대해 한구한 채 이들을 16일 밤 자정 현재 계속 불법구금하고 있다.

한편, 홍근수 목사 등 재야인사 30여명은 16일 오전 명동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총련 대의원대회의 평화적 개최 보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이라고 해서 그들의 민주적 권리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무조건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진보정당추진위원회(준)도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현 정권과 공안당국은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회의 민주적 대의제도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지하철 사태, 정부가 초래"

민변, '노동자와 교섭' 촉구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과 이에 대한 공안당국의 강력한 진압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정부·서울시·서울지하철공사가 먼저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태가 여기까지 온 데는 지하철공사가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어기며 노동자의 반발을 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가 서울시가 직접 협상에 나서든지 아니면 협상의 전권을 지하철공사에 부여하든지 결단을 내리고 성실한 교섭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제네바소식> ⑥ 코소보 사태 결의안 통과 '국익'에 밀린 '인권'

제55차 유엔 인권위는 13일 '코소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종청소를 강하게 비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명 투표방식(임의의 알파벳이 선택되면 그 알파벳 순서대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투표의 결과는 찬성 44, 반대 1, 기권 6이었다.

압도적인 찬성 속에 통과되긴 했지만 나토의 공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등 한편으로 치우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결의안을 기초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한편, 결의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4일 밤 나토가 난민 수용시설을 폭격해 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유엔 인권위의 결의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는 13일 투표에 들어가기 앞서 "누구에 의한 것이든 지금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 유린을 규탄한다. 하지만 제출된 결의문 초안은 주권국가에 대한 나토의 공격과 그로 인한 인명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결의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결의안의 발의국 대부분이 나토 회원국들인 것은 유언이 아니"라며 "이 결의안은 앞으로의 폭격을 정당화하기 위한 언론용으로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반대·남아공 등 기권

또 인도는 "이번 결의안이 전혀 공개적인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를 통해 다시한번 대화와 투명성의 결여를 목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멕시코·우루과이·아르헨티나·페루·베네수엘라·에콰도르 등 10여 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우, 결의안

에 대한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도 결의문이 △유고슬라비아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상황 △국가의 영토적 통합성에 대한 존중 △평화 유지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기권표를 행사한 쿠바는 "이번 결의안은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 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종합적 이면서 균형잡힌 접근을 결여하고 있

다"고 기권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군사행동이 과연 평화를 되찾기 위한 수단일 수 있는나고. 절대 그렇지 않다. 인권의 보호는 결코 폭력, 전쟁을 통해 이뤄지지 않는다"며 나토의 계속되는 군사행동을 강력히 비난했다. 이밖에 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기권표를 던진 국가들은 통과된 결의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번 결의안의 발의국은 파키스탄을 비롯한 이슬람 국가들과 케냐·독일·영국·미국·일본 등이며, 이에 반대한 국가는 러시아, 기권한 국가는 중국·콩고·쿠바·인도·네팔·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제네바: 이주영)

<인터뷰>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유고와 나토는 무력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코소보의 인권침해에 대한 결의안' 통과는 국가별 정치적 지향도에 따라 이미 예상된 결과였다. '인권'을 논의하는 위원회라 할지라도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듯 하다. 한편 국제정치에서도 더욱 권위를 행사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기권 의사 표명은 신선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14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표부의 로라 조이스 씨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한다(제네바: 이주영).

이번 결의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우리는 당연히 알바니아계 코소보 주민들에 대한 인종청소를 비난한다. 남아공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 비참함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토의 군사행동이 전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난민을 대량 양산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나토의 군사행동이 계속될 경우, 난민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란 더욱 어려워진다. 더구나 초대받지 않은 타국의 영토에 무력으로 침입했다는 것은 국제법상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 우선 밀로소비치 정부와 나토 모두 즉각 무력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평화유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안타깝다.

실은 밀로소비치 유고 대통령이 최근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 개입을 요청했다. 이에 만델라는 대통령 선거(6월 초)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을 위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할 시기가 감히 국제 문제에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개입 요청을 거절했다. 하지만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과거에 만델라 대통령이 미국·카타피 문제, 인도네시아·동티모르 문제 등 뿌리깊은 갈등을 중간에서 조정했던 경험이 기대를 갖게 한다는 점도 알고 있다. 따라서 다음 주 경에 예정돼 있는 만델라 대통령의 러시아·중국 방문때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정당 창당추진위
결성대회
때: 4월 18일(일) 오전 10시
곳: 웅산구민회관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20일(화)

제 135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지하철 선봉, 공공연맹 총파업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통신도 참여 예정

지하철 노조가 선봉에 선 가운데 공공연맹 소속 17개 사업장 2만3천여 명의 노동자가 총파업에 나섰다.

19일 새벽 4시 지하철노조를 선두로 시작된 공공연맹의 파업은 한국통신노조 등 7개 사업장이 오는 26일 동참하기로 하는 등, 모두 32개 노조로 확산될 예정이다.

총파업 돌입에 이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약칭 공공연맹)은 이날 낮 서울역 광장에서 '공권력 철폐 갑대중 정권 규탄 및 총파업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는 파업중인 노동자와 대학생 등이 뜨거운 열기와 함성 속에 발디딜 틈없이 모여들었다.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회에 참석치 못한 석치순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을 대신해 차림지부 노동자 조병욱 씨는 "우리는 하나다. 세상을 바꾸자" "내 시체를 밟기 전에는 절대 복귀란 없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공공연맹의 양경규 위원장도 "이젠 말이 필요없으며, 승리할 때까지 투쟁의 깃발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집회 후 지하철노조를 선두로 한 노동자의 행렬은 편도 1차선을 완전히 점거한 채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명동성당 길목에 이르자, 한총련 7기 대의원대회 사수를 위해 모여들었던 대학생 5백여 명이 노동자들을 맞이하며 뜨거운 지지의 함성을 보냈다.

이후 지하철노조 승무지부와 중앙위원 등 1천4백여 명은 명동성당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으며, 기술지부, 역무지부, 차림지부 노동자 6천여 명과 대학생들은 서울대로 이동했다.

공공연맹은 이번 파업을 결행한 이유

를 "마침내 인내의 한계를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사간에 맺었던 단체협약이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고 기획예산위원회의 각종 불법 부당한 지침이 쏟아져 나온 지난 몇 달을 보내며 결국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공연맹은 또 정부가 구조조정을 이유로 1백50만여 명을 정리해고하고, 98년 평균 12%의 임금을 삭감하면서 도 이를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이 마지막까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놓고 교섭을 촉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노조간부를 구속하는 등 탄압정책으로 일관해 왔다고 비판했다.

공공연맹은 이번 파업의 목표가 "갑대중 정부의 재벌 살리기 및 노조 죽이기 정책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라고 밝히며, △노동시간 단축 △공기업의 공익성 유지 및 공기업 매각 중단 △연봉제 철폐 △퇴직금제도 개악 및 복리후생축소 방침 철폐 △공공부문 임금문제에 있어 대정부 직접교섭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등 6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전 단위노조와 지역본부는 19일을 기점으로 비상철야농성체제에 돌입했으며, 이후 대규모 집회와 가두행진을 전개하는 등 대정부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 명동성당 가득 메운 천막농성장 "어떤 마음가짐이냐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죠"

수십 개의 농성천막들이 명동성당 안을 빙 둘러 가득 메운 속에서 수천의 눈들이 빛나고 있다.

19일 낮 서울지하철노조 승무지부, 역무지부, 차림지부 소속 노동자 등 6천2백여 명의 노동자들의 명동성당으로 집결했다. 이 가운데 천 여명은 전 날부터 대화와 차림지부로 쫓아다니던 경찰을 따돌리고 18일 저녁 늦게 명동성당에 모여 농성을 준비했다.

밤새 천막을 치고,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 노동자들이 지난밤 잠 못 이룬 탓인지 깜박 새우잠으로 동료들과 엉켜 눈을 붙인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망치를 들고, 합판을 나르며, 못다 완성한 농성천막을 짓기에 바쁘다.

오후가 되면서 서울역 앞 집회를 마친 5천여 명의 노조원들이 깃발을 앞세우며 명동성당으로 들어왔다. 훌쩍 머리 위로 올라선 커다란 배낭이 어깨를 짓누르지만 이들을 반기는 동료들의 함성과 박수에 주먹을 들어 화답한다.

"어떤 마음가짐이냐고요? 우리는요 전에는 잠자게 해 달라, 먹게 해 달라...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젠 완전히 짜르다니... 이렇게 죽어나 저렇게 죽어나 하는 심정으로 하는거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말이죠"라고 말을 맺는 노동자들.

천막 앞에 걸려있는 생활수칙 하나, '물을 아껴 사용합시다. 물이 떨어지면 안돼니까요'라는 문구에서 오랜 싸움을 준비하는 이들의 풀러질 수 없는 굳은 다짐이 엿보인다.

경찰, '영남위 디스켓' 손댔다

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심

지난해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15년의 중형이 선고됐던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에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

영남위 사건에 있어 경찰과 검찰이 제시하는 가장 큰 증거는 '컴퓨터 디스켓'. 그런데 지난 16일 오전 10시 2심 재판부에 의해 진행된 디스켓 감정 결과, 증거로 제시된 디스켓에 경찰이 손을 댔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피고인들은 1심 재판에서 "디스켓은 조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디스켓 감정요청을 묵살한 채 이를 증거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구속 후 자동저장된 파일 발견

16일 진행된 디스켓 감정 결과, 박경순 씨(1심 징역 15년 선고)의 디스켓 가운데 △작성일자 80년 8월 14일로 기록된 디스켓 △구속 이후의 날짜로 자동저장(ASV)된 파일 등이 발견되었다. 이 가운데 피고인들이 구속된(98. 7. 23) 이후의 날짜(98. 8. 11 등)로 입력된 파일은 경찰이 일본을 가지고 무언가 작업을 했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다. 사건 변론을 맡고 있는 정재성 변호사는 "경찰이 원본 디스켓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증거조작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재판부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위 사건 울산시민대책위원회'도 "판사가 '왜 증거를 마음대로 편집했느냐'고 화를 내기도 했다"며 "디스켓 원본에 경찰이 손을 댔 사실이 명백한 이상, 조작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디스켓의 증거능력을 재판부가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오는 21일 구속자 가운데 박경순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이날 안으로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공판안내

- ▶ 4월 21일 (수)
 - 박경순 외5(국보법 반국가단체 구성 등, 영남위원회 사건)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103호, 고등형사2부, 결심
- ▶ 4월 22일 (목)
 - 임규협, 황성순(국보법, 울산대 혁신위 사건), 오전 10시, 부산지방법원 103호, 선고
 - 홍교선(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03호, 합의 10부, 선고
- ▶ 4월 23일 (금)
 - 강재우 외3(국보법)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319호, 합의 30부, 속행
 - 오봉석/김희정(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03호, 합의 1부, 신건

주간인권호름

(99년 4월 12일-4월 18일)

1. 국정원, 비밀한 보복행위
시시주간지 <한겨레21>, 지난 1월 탈북자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 자유북한인협회 소속 간부들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보복행위 해온 사실 폭로(4/13)
2. 대통령의 힘...유신 때 이랬던가?
검찰, 대통령 가상 담화문 형식으로 대자보를 부착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원들을 처벌키로(4/13)
3. 제철 만만 폭력경찰
경찰,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원천봉쇄한다는 이유로 홍익대 주변에서 김문을 실시하면서, 불법 불심검문에 항의하는 대학생들 무조건 강제연행(4/14-16)
4. 네 주제를 아느냐?
정형근 의원, 국내 인권상황을 알린다는 목적으로 유엔인권위원회에 참가하기 위해 제네바로 출국(4/17) / 국내 인권단체, "고문 일삼던 사람이 감히 인권을 입에 담다니..." 분노·경악
5. 말로 해서 안 통하니...
장애인 의무고용을 여기면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진남 기획예산위원장 등 정부 6개 기관장들,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돼(4/16)
6. 노·농·빈 "우리는 하나"
민주노총·전농·전빈연, 공동기자회견 통해 "민중생존권 보장을 위한 연대투쟁" 선언하며,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대정부투쟁 벌이겠다"고 밝혀(4/15)
7. 김중위 결국 "자살"...그런데 사진은 왜 감춰?
국방부 특별조사단, "김중위 자살" 결론(4/14) / 국회 국방위 하경근 위원장, "타살을 입증하는 몇 장의 사진을 특조단이 공개하지 않았다"며 "국방부가 사실을 고의로 축소·은폐한 것"이라고 주장
8. 시농만 하면 안되는데...
국회, 여야 3당 합의로 '제주 4·3사태 진상조사특위' 구성(4/13)
9. 이번엔 양치기 소년이 아니길...
정부 대표, 유엔인권위에 참석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으로 대체하는 문제 고려중"이라고 공식 발언(4/12)

◆ 수치로 본 인권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경찰 특진자 204명 가운데 31.3%인 64명이 한총련 수배자를 포함해 각종 시국사범을 불법은 공로로 특진/ 97년 이후 1년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83명 가운데 실행 선고자는 3명뿐이며, 재판 계류중인 7명을 빼면 실행선고율은 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21일(수)

제 135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대우캐리어, 노동시간 단축

99년 임단협서 주 40시간 타결

실업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안으로서 노동자들의 최대 요구 사항 가운데 하나인 '노동시간 단축' 요구가 광주의 한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수용돼 향후 노동계의 투쟁에 활력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에어콘 제작업체인 대우캐리어는 지난 주 노사합의를 통해 △주 40시간(기존 42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임금 2% 인상 △근속수당 일률적으로 1만원 인상 △조합원 교육시간 연 16시간 보장 △조합원 회의시간 월 2시간(상집회의, 대의원의회의) 보장 △남녀단일호봉제 도입 △해고자 2명 복직 등을 결정하고 99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

대우캐리어 노조는 지난 3월말부터 전면파업 또는 순환파업을 하며 투쟁해왔고, 지난 12일 회사측과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8백여명)의 52%가 합의안에 찬성했다.

이번 대우캐리어의 노동시간 단축수

용은 임금동결 또는 삭감없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대우캐리어가 외자기업이라는 점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장으로까지 그 파장이 확산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우캐리어 노조의 곡원식 위원장은 "고용을 늘릴 수 있는 길은 노동시간 단축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조합원들의 참여와 단결, 투쟁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우캐리어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노동단체 기관지 등을 제외하고 어떤 중앙일간지도 보도하지 않아 석연치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지하철 및 공공연맹의 총파업의 최대 쟁점이기도 하다.

레드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강릉법원, 대학생에 무죄선고

제주 4·3 다큐멘터리인 <레드헌트>(제작 허너영상)가 이적표현물이 아니라는 판결이 또 한차례 나왔다.

지난 1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1단독(판사 서경환)은 지난해 4월 학교 동아리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척대생 김태훈 씨에 대해 <레드헌트> 상영 부분에 무죄선고를 내렸다(판결, 99고단220호).

서경환 판사는 "레드헌트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평가를 내린 영화일 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표현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적표현물로 판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안당국은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상영작인 <레드헌트>를 이적표현물로 지목한 뒤,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 씨(인권운동사랑방 대표)를 구속 기소했으며(현재 재판계류중), 이후 대학교 내에서 <레드헌트>를 상영한 대학생들을 이적표현물 상영 혐의로 잇따라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8일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이강남)가 "레드헌트는 이적표현물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 강릉지원에서도 똑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영남위원회 사건 울산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오전 울산연합 공동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인 디스켓의 조작가능성이 사실로 드러난 이상,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4월 20일자 참조)

울산시민대책위는 디스켓 조작의 의혹을 갖는 근거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피고 또는 변호인의 입회나 확인 없이 진행된 점 △암호처리된 디스켓 내용 출력시 타기관에 의뢰한 점(재판 과정에서 타기관 언급 회피) △존재가 불분명한 임의의 협조자로부터 사전 입수한 내용물과 디스켓 출력물이 상당수 동일한 점 △피고인들이 본 적도 없는 내용이 많으며 디스켓 내용들에 대해 부인하는 점 등을 들며, "재판부가 훼손된 것이 명백한 디스켓을 증거로 채택하거나 진실여부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고 선고를 한다면 재판부는 우리나라 사법부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
시평

떼도둑 이야기, 그리고 그 위상

채만수(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부소장)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과 공공연맹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정치적·사회적 긴장이 고조되는 다른 한편에서 '대도'(大盜) 파문으로 또한 호떡집에 불이 났다.

새삼 느끼는 거지만, 정말 재미있는 난장판 세상이다.

'대도'가 주장하는 대로 유종근 전북도지사 '서울관사'에 12만 달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 장관 집에서 수억 짜리 동양화를 훔쳤는지 어쨌는지, 또 모 장관 집의 번기는 뒷구멍에서 나오는 빛과 색깔 맞춰 황금으로 만든 거였는지 어쨌는지, 우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리고 또 확인해 본들 무얼 어찌 해보랴?)

하지만 최소한 다음과 같은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그게 구체적으로 누구의 집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대도는 이 시대에 잘 나가는 높은 사람들의 집을 털어서 달러가 연화고 원화고 간에 "원없이 흥청망청" 썼다고 하는 사실.

경찰서장이 됐건, 도지사가 됐건, 장관이 됐건, 아무튼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주체 못하게 돈이 따라붙어서, 은행이 아니라 냉장고며, 김치독이며, 텅 빈 '관사'며, ... 우리가 돈을 집어넣는 데라고는 상상도 못하는 곳에 동령이 돈을 보관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렇게 돈을 키우다가 대도한테 당한 사람 가운데는 현 권력의 핵심인사들도 있다는 사실.

그러하여 경찰과 검찰은 감히 면허도 없이 남의 영역을 침해한 무면허 도둑을 응징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고 줄이고 엄폐하고 감추고 숨기고 했다는 사실 등등.

또 그리하여 문제는 결국 특허받은 큰 도둑들의 얘기로 된다는 것 등등.

물론, 크고 작은 그런 도둑질은 전혀 새삼스럽지도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다. 새삼스러운 건 단지 어찌어찌 하다 보니 그것이 재수없게 불거졌다는 것 뿐이다.

특히 특허 받은 큰 도둑들의 일을 내

가 얼마나 '담연한' 것으로 간주하는가는, 아니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담연하게' 여겨야 하는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벌어지는 '개혁'이니, '사정'이니, '개각'이니 오르가즘이니 하는 것에 대한 나의 판단을 수년 전에 '김영삼 정권의 개혁의 성격' 운운하는 잡문으로 밝힌 바 있다. (김영삼으로부터 김대중으로만이 아니라 예컨대,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혹은 노태우에서 김영삼으로의 교체도, 각 정권 주체의 사적이익이 '서로 다른 만큼' 그 만큼 정권교체이고, '개혁'이니 '사정'이니 하는 것도 대개는 그 만큼 감도와 폭을 갖는다.)

여기서 그것을 새삼 되풀이할 필요는 없고, 수주일 전 한 정치학 강의실에서 있었던 어떤 실없는 문답을 소개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그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 무척 진보적인 인사인데도 전제해서는 안되는 것을 전제하면서 강의를 진행시켰다. ... "김영삼 정권의 '개혁'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하고 말이다.

이는 당연히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크게 보아 그들과 한패인 신문·방송계들이 온갖 훌륭하고 근사한 말로 포장한 '개혁'을 '개혁'이라고 전제하고, 그것이 '왜 실패했는가?'를 묻는 부당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사람이 있었다. ... "교수님은 김영삼 정권의 '개혁'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훌륭히 성공했지요."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지더니 조그만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런, 어이없다는 듯한 질문도 나왔다. ... "정말 김영삼 정권의 '개혁'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나요?"

사람 왈. ... "성공하고 말고요. 아주 훌륭히 성공했지요.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예를 들어, 김현철 등이 수십억, 수백억 (아니, 사람이 간이 작았나? 큰돈은 상상도 못하냐? 적어도 수천억일 텐데!) 이권에 관계됐겠습니까? '개혁'이니 뭐니 하는 것은 이전 권력으

로 향하던 이권의 파이프를 새 권력으로 돌리는 그런 작업, 말하자면 '나와 바리 싸움' 아닌가요?"

너무 냉소적이라고요? ... 그러니까 당신들은 맨날 현실은 못 보고 '개혁하라! 개혁하라!' 자기 발등을 찍지요.

아니, 큰 도둑님들도 사람을 향해 '냉소적'이라고 나무란다지요? ... 당연하지요. 자기들 이해가 걸린 문제니까 말입니다.

운동경도 많은 이가 목이 터져라 '개혁하라!'고 외친다고요? ... 거기에는 두 부류가 있지요. 뭐가 뭘지 모르고 자기 발등을 열심히 찍는 그런 부류와, 언젠가 '수혈'되어 '개혁'에 참가할 그럽고 그런 부류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열 받는 얘기겠지만, 이 큰 도둑님들이 도적질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예요. "무노동, 무임금!", 그러니까 "노동하면 노동한 만큼 준다"고 경제학 박사, 경제학 교수 등 온갖 나팔수 앞세워 조직적으로 사기치면서 수백조·수천조 등쳐먹는 거에 비하면 그거 조족지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은 그거 조족지혈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예요. 금액의 크기로 봐서 그렇다는 거뿐이에요. 사실은 그거, 그 조족지혈의 돈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핵심적으로 중요해요.

왜냐구요? ... 그들이야말로 그 수백조·수천조 등쳐먹는 거 유지하는 침범·전위거든요. 독점자본의 정치적 전위부대라던가 뭐래던가? 아무튼 뭐,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아참, '인권 칼럼' 씨 달라고 했나? ... 내가 미쳤지. 사실은 거의 이를 밥이나 못 잤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인권' 문제가 그냥 생겼나? 크게, 조직적으로, '평화롭고, 질서있게,' 그리고 가능하면 영속적으로 등쳐먹으려는데, 쪼그림게 시비거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그거 짓몽게 버리고, 그러니까 인권 문제 생기는 거지. ... 이제 '인권 칼럼' 됐나?

인권교육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인권교육 길잡이」 판매

흥미로운 프로그램!
 참여식 교육방법!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와의 만남!
 「인권교육 길잡이」와 함께
 재미있는 인권교육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십시오.

◆도서출판 사람생각, 값 9000원
 ◆구입문의 : 배경내(02-741-5363)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세상을 바꾸자" 투쟁 고조

과기노조, '과학의 날'에 총파업 합류

노동자들의 총파업 투쟁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9일 서울지하철 노조의 파업과 함께 시작된 공공연맹의 총파업에는 21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등 3개 노조가 합류했으며, 부산지하철노조 등 2개 노조도 22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특히 조합원반반 투표 결과 75.6%의 지지로 파업을 결정한 한국통신 노조가 합류하는 26일엔 총파업 투쟁이 절정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 사흘째인 21일, 금속산업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다른 연맹 소

속 노동자들도 가두시위에 합류했다. "총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는 슬로건을 앞세운 이날 시위는 투쟁이 계속되면서 노동자들의 구호와 요구의 수위가 차츰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공공연맹은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기획예산위원회의 해체와 진념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로 집회에 참석한 의보노조 조합원 박민순(38) 씨는 "지난 1년간 참아온 노동자들의 인내가 이미 한계까지 왔다"며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대다수 민중들이 우리의 투쟁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하철 파업에 대한 시민여론이 좋지 않다는 말에 "언론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표

현은 안 하지만 지하철의 파업을 감수·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공연맹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경험없는 대체인력을 투입, 무리하게 지하철을 운행해 발생한 사고를 마치 노동자들이 고의로 조장한 것처럼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존재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가 불법부당한 탄압에도 무조건 인내하면서 평화기조를 지켜나갈 것으로 본다"며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불상사의 책임은 원인제공자인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의 날'인 21일, 김대중 대통령이 대덕연구단지를 찾았다. 그러나 정작 생일을 축하해야 할 대덕연구단지의 연구원과 노동자들은 총파업출정식으로 대통령의 방문을 맞이했다.

조합원 71%의 찬성으로 파업에 돌입한 과기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은 안정적 연구환경과 신분보장은커녕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극도로 시기가 저하되고 연구활력이 위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졸속적 구조조정이 출연기관의 연구생산성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경쟁력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만신창이로 만들었다"며 "과학기술정책의 혁신을 위한 실질적 개혁방안을 수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지하철 노조 중앙위원 등 1천여 명이 철야농성중인 명동성당이 21일 밤부터 무장한 전투경찰에 의해 완전히 에워쌌다. 경찰은 명동성당으로 통하는 모든 길목에 40-50명씩의 전투경찰을 배치, 불심검문을 통해 성당출입을 봉쇄하고 있다. 한편, 지하철 노동자 6천여 명이 농성중인 서울대에는 경찰병력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라중공업 하청노동자 노숙농성

"1천3백여 노동자 생존권 위협"

구조조정 바람이 대기업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한라중공업 하청노동조합 간부 5명은 회사의 구조조정에 맞서 지난 14일부터 8일째 철야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 하청기업 노동자들은 △체불임금문제 완전 해결 △고용안정 보장 △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라중공업 정문 앞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한라중공업은 97년 부도 이후, 채권관리단과 경영자 대표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60여 개 협력업체 5천여 명의 노동자 가운데 24개 사업체 1천3백여 명의 노동자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또한 올해 들어 임금체불과 하청업체 정리 바람이 불면서 노동자들은 생활고와 고용불안에 떨고 있다. 농성중인 김호근 노조위원장은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청업체를 정리하라는 구조조정안을 한라중공업측이 받아들인다면 이는 회사만 살고 1천3백여 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1천3백명의 권익을 위해 노숙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파업노동자가 말한다 >

"우리 함께 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21일 서울대 노천극장 잔디밭. 다다다다 불은 수많은 천막과 잔디 위에 삼삼오오 모여있는 수천여 명의 모습은 마치 어린이대공원에 모인 놀이 인파 같은 평온한 분위기다. 하지만 이들은 구조조정이라는 '해고괴물'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는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다. 짝지 않아 덩수룩한 수염과 수건을 목에 두른 차림으로 노숙자를 연상케 하는 최성민(29, 지축 차량정비소속)씨, 얼굴을 붉히며 손을 짓던 그에게서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봤다.

"파업에 참여한 이유는 사측이 경영의 어려움을 인원감축이라는 형태로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파업은 지하철 노조만의 단순한 싸움이 아닙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무조건 노동자를 해고하는 지금의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바꾸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시민들이 충분히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하철 차량 정비부서는 인원이 보충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사측은 해고하려 야단입니다 그리고 부실 제벌의 빔을 감아주면서 지하철 같은 공공부문을 정부가 부담하지 않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누군가 고의로 지하철을 고장냈다는 사측의 주장이 있는데 지하철 기지는 경찰에 의해 포위되어 있고 차량을 잘 아는 승무지부(차량 운전직) 조합원 전원도 명동성당에서 한 발짝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2천3백여명의 차량지부 조합원도 이곳 서울대에 있는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달리는 차량의 바퀴에 매달려 고장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 고의로 고장을 냈다고 운운하며 수사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파업을 철화하고 속속 업무에 복귀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료가 파업을 하면 말던 회사로 복귀하면 해고 명단에서 제외되죠. 하지만 가장 많이 복귀한 차량지부의 경우 전부 160명인데 그 중 각 지부별로 지원되는 차량의 운전사 행정직 등을 제외하면 20여명 정도 복귀했을 뿐입니다. 명동성당에 중앙위원과 승무조합원 1천4백여명 전원이 사생결단의 각오로 대오를 유지하고 있고 이곳 서울대에는 기술지부 역무지부 차량지부 등 서울지하철노조원 6천여명이 천막을 치고 생활하고 있는데 속속 복귀한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것은 언론이 노동자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고 왜곡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집을 나누고 이렇게 싸우고 싶어서 싸우겠습니까? 우리 함께 살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해고 분위기를 바꾸는 선봉에 자신이 속한 지하철 노조가 앞장서고 있어 기분이 좋으며 활짝 웃는 그의 모습에서 이번 파업을 쉽게 끝내지 않을 것이라는 결의가 배어 나왔다.

목이 묶인다는데 발이야

잠시 묶여도...

저는 인천에서 지하철을 타며 출퇴근을 하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인천이나 부천지역에 사시며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출근길 지하철 타는 5분, 10분이 하루 직장생활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지하철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듣고 서둘러 출근길을 앞당겼습니다. 날씨가 차가워지는 요즘에 역시 만원인 지하철 출근길에서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울컥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직장에 도착한 후 역시 화제는 지하철 파업이었습니다. 다들 지하철로 출퇴근을 하는 동료들이라 대부분 파업에 따른 파행운영에 공감하는 시각을 가지고 지하철 노조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여성 동료가 "지하철 파업 당연한 것 같은데요"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엔 사회문제나 정치문제는 전혀 관심도 없어 보였던 동료라서 모두들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 입에서는 지하철 3천명의 노동자의 정리해고,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노동시간 단축, 지하철 개혁에 대한 설명이 청산유수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다른 한 직원이 농담 삼아 "혹시 가족 중에 지하철 노조원이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맞아요, 우리 외삼촌이 지하철 노조원이예요"라고 말하면서 지난 가족모임 때 외삼촌과의 대화를 우리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성실한 태도로 살아가는 외삼촌을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있었다면서 그날 외삼촌이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아까 그녀의 이야기가 생각나 평소엔 무심코 흘려보았던 지하철 역사와 열차에 붙어 있는 지하철노조의 유인물을 꼼꼼히 읽어 보았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더군요. IMF 이후 실업자가 400만이라는 현실에서 아무리 보아도 노동시간 단축만이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국민의 75%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에 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해 우리 회사도 구조조정이다 뭐다 하면서 30% 가까운 직장동료들을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그 때의 살벌한 풍경은 지금 생각해도 오싹할 정도로 정말 이곳이 직장인지 지옥인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지하철노조의 파업에 심정적으로나마 지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당장 내 몸이 불편하다 보니 지하철노조의 파업을 100% 지지하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지하철노조의 파업에 적어도 일방적인 비난을 퍼붓지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며칠 발이 묶여도 목이 묶이지 않으려면...

인천 주안동에서

이글은 파업중인 공공연맹이 통신에 올린 글입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23일(금)

제 135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검찰의 헛바닥, 조선일보

'지하철 파업' 왜곡편파 보도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연맹 소속 노동자의 총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조선일보의 왜곡편파보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2일자 사회면에서 "규찰대가 기관사 복귀 막는 듯"이라는 제목 아래 "지하철 정상화에 꼭 필요한 기관사 3백여 명의 업무 복귀를 규찰대가 막고 있어 사실상 감금 상태"라는 검찰 관계자의 언급을 그대로 기사화했다.

그러나,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지하철 노조원들은 최소한의 통보절차만 거칠 뿐 자유롭게 명동성당 외부로 출입하고 있는 상태다. 지하철 2호선 기관사인 한 노조원은 "직접 와서 봐라. 누가 누구를 통제하는가.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는 곳이 이곳 농성장"이라고 말했다. 또 명동성당 입구의 규찰대는 출입자의 신상을 파악하고 있을 뿐, 사유에 관계없이 출입을 전혀 통제하지 않고 있다. 규찰대가 농성자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고 있는 출입일지에는 목욕 또는 외박 등의 사유를 기재하고 출입한 지하철 노동자들의 명단이 그대로 적혀 있다. 한 규찰대원은 "농성 첫날보다 오히려 농성자가 더 늘어난 상황"이라며 "규찰대가 농성자를 감금하고 있다는 주장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기자도 지하철 노조원들에 대한 취재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선일보 김홍진 기사는 이에 대해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쓴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악의적으로 기사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사실과 전혀 다른 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조선일보의 기사는 결국 대다수 시민들로 하여금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고,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는 소기의 '성과'는 거둔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 총파업 지지"

전국 교수 83명 성명발표

전국 36개 대학 교수 83명은 22일 성명을 발표, "지하철을 비롯한 공공연맹의 총파업과 민주노총의 투쟁은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발한 노동

자들이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개하는 정당한 투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언론과 관련 시민단체를 동원해 노동자들의 투쟁을 시민의 불편을 불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매도하고 있다"며 "총파업은 우리나라의 현실모순이 노동자들로 하여금 투쟁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도록 강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금의 위기는 국민의 정부 등장 이래 민영화,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기조로 한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의 결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는 구조조정 이름 아래 위기의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무차별적인 정리해고가 진행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구태의연한 공권력 동원이나 관련 단체 동원을 통한 언론 조작을 자제하고 노동자들의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다.

국내 지식인 사회에서 노동자 총파업에 대한 지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화사랑방

이동수



'빈민 생존권 스스로 지킨다'

전국빈민연합 출범

생존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도시빈민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뭉쳤다.

22일 오후 1시 서울역광장에서는 일용노동자와 철거민, 노점상 등 2천여 명의 군중이 운집해 외면당했던 빈민의 생존권을 선언하며 '전국빈민연합'(전빈련) 출범식을 가졌다.

"허울좋은 국민정부를 심판하고 자본과 보수정권에 대적해 빈민들의 생존권을 쟁취한다"는 창립취지를 밝힌 전빈련은 서울역에서 풍물놀이 등 문화행사와 결성선언문 낭독 등 출범식 행사를 가진 뒤 명동성당으로 행진해 마우리 집회를 가진 뒤 해산했다.

전빈련의 결성은 87년부터 계속된 빈민연대 흐름의 결과다. 그간 빈민연대 운동은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지원해야 한다"는 정서적 연대감 수준을 뛰어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빈민진영 단체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와 목적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에 서로간의 연대는 그다지 긴밀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랜 투쟁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빈민진영은 전체운동진영에서도 제대로 위상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IMF구제금융으로 인해 빈민의 층이 넓어지고 자본과 권력, 정치 경제체제에 대한한다는 공동의 이해가 수립되면서 빈민연대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노점상과 철거민 문제 등을 내걸고 공동투쟁을 전개해온 전국노점상연합과 전국철거민연합, 민중생존권쟁취를 위한 철거민연합 등 빈민단체가 모여 결성된 전빈련은 앞으로 빈민의 발생원인 노동자의 불안정 고용상태 극복과 정리해고 중단을 위해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나아가 구체적인 현안으로 노점단속 저지 및 노점 절대금지 구역 철폐와 노점상 합법화 투쟁,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토지공개념을 토대로 한 공공영구임대주택 쟁취 등 현재 전빈련에 결합하고 있는 노점상 철거민의 당면요구 사업

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생 3백명 단식농성

명동성당에서 노숙

대학생 3백여 명이 23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한총련 대의원대회 참가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였던 이들은 지난 19일부터 명동성당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해왔으며, 22일 대의원들이 단식에 들어간 데 이어 23일부터 전체 대학생들이 단식에 돌입했다.

농성단장인 이성희(서총련 의장) 씨는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이 한창인 지

금, 한가하게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투쟁에 대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연대투쟁을 벌여나가는 의미에서 이곳에서 농성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대의원대회를 잠정유보하고 노동자들의 파업에 연대투쟁하기로 했으며, 오는 5월 15일 즈음 한총련 대의원대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한총련, 복지령 받는 조직 아니다"

황선씨, 특수집입탈출협의 무죄

98년 한총련 대표로 북한을 방문했던 황선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한총련이 북한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대표를 방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씨에게 적용된 특수 집입탈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뷰> 노인규(조선 이공대 98학번)

"힘들지만 희망을 가져요"

뜨거운 햇살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명동성당 단식농성장.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 철폐 등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중인 3백여 대학생 가운데 한 학생을 만났다. 옛새제 명동성당에서 노숙을 해왔다는 노인규 씨. 한총련 간부들에 비해 까마득한 후배이면서도 노 씨는 자기보다 후배인 새내기들을 사투 걱정하고 있었다.

"대의원들이 단식에 들어갔는데, 혼자 밥을 먹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토요일(24일)까지 시한부 단식을 하기로 모두가 결의를 모았어요."

"처음에 대의원대회 참석 차 올라왔던 새내기들 가운데 대부분은 내려갔어요.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것마저 빠져가며 단식농성에 참여하겠다고 결의한 새내기들만 남아 있어요."

노 씨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상경했다고 말했다. "부모님들도 한총련의 주장을 이해하세요. 다만, '왜 하필 너냐'며 걱정을 하시는 거죠. 오늘 아버지 생신이라 전화를 드리고 일요일엔 내려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일주일 가까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노숙생활을 하다보니 지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투쟁한다고 먹혀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힘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파업중인 노동자 아저씨들과 함께 하면서 배우는 것도 많고 힘도 나요. 명동 거리에서 선전활동을 할 때, 처음엔 외면하던 시민들도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노 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1년만 참자고 했을 때 우리도 믿었지만, 이제 와서 다시 또 참으라고 하니까 우물탕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새내기들이 다칠까봐 걱정"이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은 의외로 밝았다. 큰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해야할 일을 하고 있다는 그의 신념이 힘든 농성투쟁을 버티주는 힘이 되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24일(토)

제 135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

서울지하철 노조의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언론의 여론몰이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논리는 "이번 파업이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노동법의 인권침해요소를 도의시킨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선수 변호사는 "구조조정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고용안정 등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안"이라며 "노사협의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지하철노조의 파업은 적법한 목적을 가지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지하철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체의 쟁의행위가 노동위원회의 강제 중재를 받도록 하는 현행 노동법(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62조, 71조)을 지지하며, "노동위원회의 강제 직권중재는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근본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공연맹의 유병홍 정책팀장도 "철도, 병원, 통신 등 공공부문의 노동쟁의에 있어, 노조는 노동위원회의 결정

반론보도

23일자 1면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 조선일보 김홍진 기자는 "당초 말한 취지의 맥락과는 다른 내용"이 보도됐으며 정정을 요구했다. 또 본지는 실명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어기고 김 기자의 실명을 보도한 데 대해 본인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사항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직권중재는 곧 파업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현행 노동법에 따르면,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은 처음부터 불법으로 규정되는 셈이며, 그 속에서 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집단행동권(파업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직자 62명 "파업 지지" 엠네스티 "파업권 보장" 촉구

고정배 신부, 도관 스님, 이명남 목사 등 가톨릭, 불교, 개신교계 성직자 62명은 23일 성명을 발표, 지하철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을 지지했다.

성명을 발표한 성직자들은 "정리하고 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이 아닌 제벌과 정치권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파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국은 공권력 투입으로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구태의연한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자인 노동자들을 편들기는커녕 매번 권력자와 사용자 편에서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해 온 제도 언론들의 뼈를 깎는 자성"을 촉구했다.

한편 국제엠네스티도 22일 성명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파업의 권리와 그들의 경제·사회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에 항의할 권리가 있다"며 "노동자들이 그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폭력 파업행위를

차별하는 것은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시민단체 활동가 폭행 군산미공기지 항의집회 도중

군산 미공기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낮 군산 미공기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인 '군산미공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집행위원장 최중수 신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오두희 집행위원장은 사북군무중인 경찰에 의해 논두렁으로 내던져져 부상을 당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해 9월 미군의 유탄이 인근 옥서면 하재마을 주택가에서 폭발해 임산부가 조산한 사건에 대해, 최근 국가배상청구가 기각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집회에 참석한 20여명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유탄사고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으며,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했다는 이유를 대며 이를 가로막고 폭력을 행사했다.

민청노회, 징역 2-4년 구형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

지난해 12월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검찰은 △함선규, 김관태 씨에게 징역 4년 △박종익, 이광복, 남경숙 씨에게 징역 3년 △김윤광, 유한경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5월 14일 오전 9시 30분 인천지방법원 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는 4월 21일과 22일, 의제18 '인권기구의 효과적 운영에 관한 주제'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의 인권기구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했다.

이날 10여 개 정부 대표들은 주로 자국의 업적을 홍보하기에 급급한 반면, 현재 운영되는 23개 국가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들은 그 동안 운영과정의 어려움과 장애물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 특히 가장 모범적인 국가인권위원회로 평가되는 호주의 국가인권위원회 대표는 호주 정부의 간섭과 통제를 비판해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민간단체의 경우 18개 단체가 발언에 나섰으며, 그 가운데 홍콩의 아시아법률자문센터, 파스 로마나, 그리고 국제교육개발재단 등 세 단체가 현재 설립논의 중인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파스 로마나는 "말레이시아, 몽골리아, 한국, 태국 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이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면서도 "국가인권기구 설립과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기구 설립에 있어 사회적 합의과정과 투명성이 중요하며, 인권기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없으면 그 역할을 다해낼 수 없다는 메리 로빈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파스 로마나는 한국의 인권법안과 관련,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한국의 인권법이 민간단체와의 적절한 합의없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독립성과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정부가 인권법안을 철저히 인권단체들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은 '국제교육개발기금'이라는 민간단체 명의로 발표에 나서 정부의 인권법안을 강력히 비판

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의 산하기관화 우려 △관할범위의 협소함 △민간단체와의 협의 부족 등을 지적하며 "정부가 법안을 철저히 충실한 국민적 토론을 거쳐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네바:이주영)

여야 의원, 인권법안 비판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권법안이 22일 법사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질의응답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최연희 의원은 "실효성 측면에서 인권위를 국가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초 정관

행사와 동정

- 총력투쟁승리 결의대회
 - 4월 24일(토) 오후 3시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주최: 민주노총
- 농민대회
 - 4월 24일(토) 오후 2시 /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 주최: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실업자대회'(노동시간 단축·일자리 확보·생존권 시수)
 - 4월 24일(토) 오후 2시 / 서울역 광장
 - 주최: 민주노총 / 국민승리 21
-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연대집회
 - 4월 24일(토) 오후 6시 / 명동성당
 - 주최: 민주노총 / 전농
- 제 11차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정기총회
 - 4월 24일(토) 오후 3시 30분 / 홍사단 3층 대강당
- '문화계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간담회'
 - 4월 25일(일) 오후 5-7시 / 한양대 사화대 강의실
 - 주최: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 국가보안법 철폐와 서울진보청년회 탄압 규탄집회
 - 4월 26일(월) 낮 12시~4시 / 장소: 서초동 검찰청과 법원 사이
 - 주최: 서진청 대책위
- 심포지엄 '평화교육의 전망과 과제'
 - 4월 28일(수) 오후 3시 / 세종문화회관 4층 소회의실
 - 주최: (사)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문의: (02)2264-8649)

을 법무부장관이 인가하도록 하는 것은 법무부가 인권위에 간여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사거부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조사거부를 각하할 수 있어야 하고, 시정권고나 의견표명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안의 긴급성과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회의의 조순형 의원은 "민간단체, 제야원로, 국제인권단체들이 정부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만큼 이런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며, 틈새기구로 인권위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할범위의 협소함 △조사거부사유 광범위함 △대통령령 제·개정시의 법무부 간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무부가 인권의 주무부처로 모든 인권문제를 총괄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법사위는 법안을 소위 심사에 회부하기로 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전화) 02-741-5363 · 팩스) 02-741-5364 · 통신 ID:rights(천.하) · E-mail:rights@chollian.net · http://www.iworld.net/~rights

노동자들, 울분을 뒤로한 채...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중단 선언

"투쟁! 투쟁!" 우렁찬 함성과 불끈 쥔 주먹들이 명동성당의 밤하늘을 제압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울분이었다.

이대로 파업투쟁을 접을 수밖에 없는 스스로에 대한 울분이자, 끝까지 투쟁을 이끌어가지 못한 지도부에 대한 울분이었다. 뒤를 받쳐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끝내 기대를 저버렸던 한국통신 노동조합에 대한 울분이었고, 지난 8일간 지하철 노동자들을 폭도나 테러리스트인 양 매도하며 못매를 때렸던 언론에 대한 울분, 그리고 끝까지 지하철 노동자들의 뜻을 이해해주지 못한 국민들에 대한 울분이었다.

26일 밤 명동성당에 집결한 서울지하철 노동자 2-3천명은 8일간의 파업투쟁에 마침표를 찍으며 이같은 울분과 아쉬움,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는 조합원들, 기자들을 향해 돌멩이를 집어드는 조합원, 그리고 8일간 고락을 같이한 동지의 어깨를 감싸안고 떨어질 줄 모르는 조합원들.

이날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이 파업중단을 선언한 것은 안팎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었다. 24, 25일 이틀간 헬기와 패퍼포그를 앞세우며 서울대에 투입된 경찰력 때문에 조합원 가운데 3천여 명이 대오를 떠났고, 당초 서울지하철 노조에 이어 공공연맹 총파업 투쟁에 동참할 것으로 예정됐던 한국통신 노동조합마저 26일 오전 파업유보를 선언하면서 파업노동자들의 사기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날 파업중단의 배경에 대해 석치순 서울지하철 노조위원장은 "투쟁의 동

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판단됐고, 그래서 투쟁을 재정비하기 위해 전격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공공연맹 유병홍 정책팀장은 "파업지도부가 더 이상의 파업은 노동조합의 존폐마저 위협하는 악조건이라고 판단해 26일 오후 3시 백보 양보한 안을 가지고 정부와 교섭을 벌이려 했지만 정부의 변함없는 강경한 자세로 교섭 자체가 결렬되었다"고 전했다.

지도부의 파업중단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26일 낮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한 조합원은 "헬기가 뜨고 온갖 선무방송과 삐라가 살포되는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폭도 취급을 받고 있었고 그때 마치 80년 광주에 와 있는 것 같았다"면서 "김대중 정권의 본 모습이 뭘지 절실히 느낀 만큼 투쟁을 결코 멈출 수 없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다. 이 조합원은 한국통신의 파업철회 소식에 대해서도 "복권을 사는 심정으로 한국통신의 파업동참을 기다렸고, 지금은 복권이 '팡'난 것 같은 기분"이라고 설명했다.

망감을 감췄지만, 그도 결국 기대와 결의 모두를 가슴속에 묻어둔 채 능성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민주노총, "총파업 계속된다"

이처럼 착잡함과 울분을 감추지 못하는 속에서도 26일 밤 명동성당의 정리 집회에서는 자못 비장한 결의가 이어졌다. "단결투쟁!" "지하철 제파업으로 세상을 바꾸자!" "현장으로 돌아가 새롭게 파업을 조직합니다. 우리는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복귀를 선언하면서도 지하철 노동자들은 그것이 결코 '투쟁의 끝'이나 '패배'가 아님을 강조하고자 했다.

민주노총은 "서울지하철 조합원들이 현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파업 조합원의 내부조건과 국민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이며 새롭게 조직을 정비해 더 큰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27일 대구그룹 계열사의 총파업과 대하노조 총파업 등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하철의 상처를 딛고 노동자들의 행군이 계속될 지 아직은 선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주요공판안내

- ▶ 4월 27일 (화)
 - 서준식(국보법 등) 오후 4시, 서울지법 서부지원 407호, 속행
- ▶ 4월 28일 (수)
 - 이경재(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합의2부, 속행
 - 김문수(국보법 찬양·고무 등)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302호, 합의2부, 신건
- ▶ 4월 29일 (목)
 - 유덕상 외5(임무방해 등) 오전 11시, 서울지방법원 317호, 3단독, 속행
 - 권영길(일반교통방해 등) 오후 4시, 서울지방법원 317호, 3단독, 속행
- ▶ 4월 30일 (금)
 - 이장희 외1(국보법) 오후 5시, 서울지방법원 524호, 4단독, 속행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 부담

대한변협(대한변협)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돈이 없어 소송조차 하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법률구조사업의 문을 활짝 열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외국인노동자 피해 소송 ▲국제법상의 난민을 위한 보호 소송 ▲연변 조선족 피해 소송 등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영역으로까지 법률구조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소송 ▲언론피해배상소송 등 공익 부분까지 포괄해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시민단체의 법률관계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구조절차는 먼저 피해자가 법률구조 신청서를 제출하면 대한변협이 자체 심사를 거친 뒤 직접 소송비를 부담하며 소송을 진행시키는 방식이다.

대한변협은 특별기금 6억8천만원을 확보해 법률구조사업을 진행시키기로 했으며 소송에 승소하면 소송비를 다시 환급받아 특별기금으로 예치하는 방식으로 특별기금을 유지 관리할 계획이다.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엔 경우에 따라 대한변협이 소송비를 부담한다. 또한 지방의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에 설치된 법률구조사업회 지부가 법률구조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협은 5월 초 팜플렛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공서 등에 비치하고 법률구조활동의 내용과 방법을 일반시민에게 홍보할 예정이다. (문의 : 02-3476-4000)

명예회복·진상규명 외침 꼬박 1년

정치권, '특별법 제정' 아직도 외면

민족민주열사 및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의문의 죽음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이 지난 24일로 꼭 1년이 지났다.

지난해 4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의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운동은 마침내 국회에 특별법을 상정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정치권의 외면 속에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이에 따라, 유가족들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가까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는 24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를 걸고, 내리치는 햇볕과 쏟아지는 장대비, 새한 눈보라에 온몸을 맡겨가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며 "이제 우리가 확인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과거의 대통령들과 다름없는 시기꾼이고, 국민의 정부는 무기력하고 보신주의에 찌들어 국민들의 혈세만 썩먹는 집단이라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주간인권호름

(99년 4월 19일-4월 25일)

1. 서울지하철 등 공공연맹 총파업
서울지하철 노조 등 공공연맹 소속 사업장, 노동시간 단축 및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요구하며 총파업 투쟁 전개(4/19-25) / 종교계, 학계, 보건의료계 인사들, "파업지지" 성명 잇따라 발표 / 국제엠네스티, "파업권 보장" 요구하며 "노동자에 대한 체포 자제" 촉구(4/24)

2. 안에서 세는 바가지, 밖에 나가도...
현대반도체의 미국 현지법인인 '현대 세미컨덕터 아메리카', 인력 채용에서 여성과 흑인을 차별한 혐의로 미국 법원에 의해 950만달러의 배상금 지급하라는 판결 받아(4/24)

3. 영월댐 반대, 국제 환경단체 가세
그린피스, 지구의 벗 등 7개 국제환경단체가 영월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환경운동연합 밝혀(4/20)

4. "빈민 생존권 스스로 지킨다"
철거민, 일용노동자, 노점상 등 도시빈민들의 연대조직인 전국빈민연합 출범(4/23)

5. "한총련, 북과 대등한 관계"
서울지방법원, 방북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선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한총련이 북한의 지시나 명령에 따라 대표를 방북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보안법상 특수 잠입탈출죄에 대해 무죄 선고(4/23)

6. 경찰, 또 깡패 짓
군산 미공군기지 앞에서 집회를 가진 전북지역 시민단체 활동가 및 신부가 경찰에게 폭행 당해(4/24)

◆ 국제 인권소식 ◆

<중남미도 '파업'>
중남미 지역 여러 나라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자메이카에서는 경찰의 사격으로 사망자 발생(4/21)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통제>
미국과 유럽, 인터넷에서 기업과 단체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사용하거나 악용하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취급 보호기준 정하기로 합의

◆ 수지로 본 인권 ◆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 0.46%에 그쳐, 의무고용률 2%의 1/4에 머무는 정도. 정부및 관계 기관의 경우, 전체 12%만이 2%로 정해진 의무고용률을 지킬뿐 53%는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인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28일(수)

제 135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분신노동자에 방화협박의 씩씩

조폐공사 강승희 노조위원장 구속

지난 1월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에 항의하며 분신을 시도했던 강승희 조폐공사 노조위원장이 지난 15일 업무 방해 및 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돼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승희 위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져 검찰이 노조의 활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의도적인 억지수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오고 있다.

강승희 위원장은 1월 7일 오전 8시경 충북 옥천장을 폐쇄하고 기계를 반출하려는 경찰력에 맞서던 중, 차량 안에서 분신을 시도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은 하반신에 화상을 입고 차량은 전소됐다. 당시 강 씨와 동승했던 조합원 박갑준 씨는 "경찰병력 1천여 명이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오자 조합원 3백여 명은 바리케이드 역할을 하던 차량안으로 모두 들어갔으며, 강 위원장은 내가 경찰에 의해 끌려나간 뒤 곧바로 몸에 신나를 뿌렸다"고 말했다.

이후 병원치료를 마친 강 위원장은 지난 4월 2일 신임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으며, 지난해 구조조정 반대투쟁 과정에서 약화된 노동조합의 조직력 복원작업에 힘써 오던 중이었다. 노조측은 "조폐공사가 공공연맹 소속 사업장이다 보니 사전에 총파업 합류를 막기 위해 억지로 혐의를 씌운 것 같고, 또 지난 한해 강력하게 구조조정에 반대했던 노동자들에 대해 현장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강승희 위원장은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은 계속 강 위원장에게 방화 혐의를 적용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승희 씨는

변호인을 통해 28일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멈추지 않는 투쟁 예고

파업중단 노동자, 경찰에 연행

27일 민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철회를 통한 서울 지하철 노동조합원들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대화·교섭 거부, 구속·수배, 직권면직 등 강경 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정부가 반노동자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민주노총은 "총파업투쟁과 가두 집회, 시위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의 눈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지하철 노조가 파업중단을 선언한 이튿날, 주요 일간지에는 일제히 고건 서울시장의 인터뷰가 실렸다. 인터뷰 가운데 눈길 가는 곳은 "다시는 지하철 파업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대목. 그런데 시장의 말은 앞으로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하거나, 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파업의 원인을 제거하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징계와 고소고발 등 '보복'을 강화함으로써 집단행동(파업)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협박이었던 것이다. 여기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파업철회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표했다는 소식도 눈에 띄었다.

시장과 시민단체들의 언급을 곱씹다보면 우리사회에서 '파업권'은 아직 요원한 '인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들의 의식 속에서 지하철 노동자들은 파업의 권리조차 행사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들도 할말은 있을 것이다. 이번 파업은 '불편'이었다고 했다. 엄청난 불편이었다. 하지만 생존의 위협 아래 놓인 지하철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법 아래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는 길은 법을 어기는 길뿐이라는 점을 그들은 끝내 감했다.

한편으로, '불편'을 내세워 '생존권'을 '왕따'시킬 수 있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무서움을 감출 수가 없다.

또 공공연맹측은 "지하철 복귀 후인 27일에도 금속연맹 5개 사업장 1만3천여 명이 파업에 참가했으며, 28일에는 금속연맹 9개 사업장 3만여 명, 공공연맹 91개 사업장 1만5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가는 등 노동자들은 투쟁을 재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지하철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명동성당에는 수배중인 61명의 지하철 노동조합원들과 공공연맹위원장 등 2명이 계속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다른 한편에선, 고소·고발된 2백62명의 지하철 노동조합원 중 일부가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되고 있다고 공공연맹은 밝혔다.

이처럼 노동계와 정부가 평행선을 달리는 갈등구조가 계속됨에 따라 언제라도 파업의 불씨가 확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그 속에서 지하철노동조합은 정부를 압박하는 화약고로 여전히 존재할 전망이다.

'이적규정', 속내는 '학생운동 말살'

각 대학 학생회 간부 줄줄이 구속

공안당국의 학생운동 고사작전이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대 동아리연합회장 김경아(식품영양 96) 씨가 보안수사대로 연행, 구속된 데 이어 각 대학 학생회 간부들이 경찰에 연행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서울대 김경아 씨는 한총련 주류계열이 아닌 21세기진보학생운동연합 계열로 알려져 있지만, 7기 한총련 대의원 불탈퇴와 이적표현물(전체동아리 대표자회의 자료집) 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며, 부산대 이희종(도목공4) 동아리연합회 회장도 7기 한총련 대의원

불탈퇴 혐의로 24일 보안수사대에 연행됐다. 또 26, 27일에는 국민대 공대 학생회장인 권영욱(기계 93) 씨와 법대 학생회장 박수형(법학 97) 씨가 같은 혐의로 성북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권영욱 씨는 4월 초 교내에 붙인 성명서를 통해 "한총련 노선에는 반대하지만, 한총련 대의원 탈퇴서를 검찰에 제출할 이유는 없다. 검찰에 의한 한총련 탈퇴 강요는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한총련 노선에 대한 지지 여부나 활동 내용에 관계없이 공안당국의

마구잡이 구속집행이 계속돼 올 한해도 학생운동 활동가들의 구속사태가 끝없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3일 구로 보안수사대로 연행됐다던 25일 풀려난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안규진(심리 96) 씨는 "한총련 탈퇴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에 연행됐다"며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생회 간부 연행사건들은 한총련 이적규정을 빌미로 한 학생운동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충북여성노조, 경찰폭력 고소

"파출소장이 폭력행사" 주장

충북지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윤태영)은 27일 "충북 지역 경찰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언어폭력과 성추행을 했다"며 해당 파출소장의 직위해제와 공개사과를 요청했다. 또 경찰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염은경(충북지역여성노조 간사) 씨는 27일 해당 파출소장을 고소했다.

충북지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25일(주)오리온프리트로이 앞에서 '노동자 탄압규탄 집회'를 가진 뒤, 거리행진을 마치고 해산하려던 중 송정파출소소장이 노조 간부에게 시종 반말을 했고, 이에 항의하자 오히려 욕설에 이어 노조간부의 목덜미를 붙잡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 서부경찰서측은 "다소 신중치 못한 행위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고의로 반말을 했던 것은 아닌 결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경연합 집행위원장 체포

보안관찰 신고 불이행 이유

민주주의민족통일대국경복연합 집행위원장인 이영기 씨가 27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영기 씨는 구국전위 사건으로 4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6월 출소했으며, 당국에 의해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이 씨는 "당국의 부당한 처분에 응할 수 없다"며 보안관찰처분대상자로서의 신고를 거부해오다 이날 전격적으로 체포당했다.

새로나온 책

「학원이 학생을 망친다」

이정미 지음/도서출판 은금나라/267쪽/7천원

교육을 흔히 '百年之大計(백년지대계)'라며 그 중요성을 역설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교육 현실은 그 중요성에 비춰볼 때 암담함 그 자체다. 특히 사교육비가 연간 20조원에 육박하고 있고, 정규 학교 수보다 많은 사립학원이 난립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점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깊은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족집게 과외 학원'문제가 터졌을 때도는 기업화된 일부 대형학원의 이야기였을 뿐, 소수의 감사들로 유지되는 대부분의 학원문제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년간 학원 감사로 활동했던 저자가 척박한 학원교육의 실태와 그 폐단을 진솔하게 밝히는 책을 펴내 관심을 끌고 있다.

저자는 "학원교육이 생겨난 이래 교육 주체들이 주권 없이 학원을 강요하거나 방임해왔다"며 "이 책은 학원의 실상과 모순을 드러내 학원교육의 가치를 논하는 양심선언"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저자는 학원의 교질적인 성격상 비정규직 위치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학원강사들의 부당징계 문제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으며, 부당징계의 여파로 인해 학원 수강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교육적 폐단도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저자는 "학원교육이 학업의 노예가 된 청소년들의 솔직한 반응이 음성적으로 잘 드러난 곳"이라며 올바른 학원교육을 위해 공교육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와 같은 학원강사노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공교육과의 명확한 역할 분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 동안 교육문제에 대해 특히 사립학원에 대해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방관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진지한 고민을 던져주는, 무겁지만 넘어야 할 소중한 책이 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o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1999년 4월 29일(목)

제 135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 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의 집시법 개악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7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법사위로 넘어간 개정안은 오는 5월 3일 본회의에서의 통과를 겨냥하고 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은 우선 집회의 금지·제한 사유를 종전보다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 제8조는 "타인의 주거지역" 등에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서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피해'와 같은 애매모호한 규정은 경찰 등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항의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사장의 집 앞에서 집회를 가지려 할 경우 "사생활 피해"라는 이유만 제시하면 집회 자체가 불가능

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도형 변호사는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등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한 표현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설보호요청 조항(8조 3항)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대학에서 시설보호요청을 남용, 학생들의 집회를 봉쇄하고 있는데 집시법 개정안은 이런 현상을 부채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 동안 집회주최측과 경찰 간의 협의사항이었던 질서유지선이 관

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따른 통보사항으로 바뀌었고(제12조), 집회참가자들이 질서유지선을 넘어설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조항이 신설됐다(21조).

일본 인권운동가들

한국 양심수 후원회 결성

일본의 인권운동가들이 27일 동경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 양심수 지원회'를 결성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요시마쓰 시게르 목사가 고문으로, 와타나베 가즈오 씨가 대표로 선출됐다. ☎ 03-5684-0194

전국회의는 앞으로 한국의 인권단체들과 연대하며 양심수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제8조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③ 제6조 제1항의 신고서에 기재된 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 제12조의 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제15조 (질서유지인의 준수사항 등)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유지인의 수를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하여 적정수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할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 주최자는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집회 또는 시위의 개최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 (벌칙)

④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상당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에 처한다)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추위' 확대개편대의

오늘(목) 오전 10시~11시 30분
종로성당 3층강당

공추위 확대개편 기자회견

오전 11시 30분~12시
종로성당 3층강당

공추위 거리행진

낮 12시~1시
경로: 종로성당-명동성당

<요약>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지난 26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주요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여성차별의 상징, 호주제 ◆

박소현(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남녀 양성평등의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상징적인 제도가 바로 호주제이다. 아들선호는 우리 나라 역사상 관습적으로 뿌리내려 온 것이지만 호주제가 토착되면서 법적 정당성까지 획득하였다. 현행 민법은 호주의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폐지하였고 따라서 명분만 있는 상징적인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민법은 호주승계의 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규정하고 있어서(민법 제984조) 양성평등에 위배되며,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잘못된 의식을 심기에 충분하다. 호주승계를 남자를 우선으로 하고 어린 아들이 어머니, 누나, 할머니 등과 같은 여성들을 제치고 호주에 오르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이러한 법규정이 결국 뿌리깊은 남아선호현실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질서와 맞지 않는 호주승계를 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인구의 절반씩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과 여성이 법 앞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은 자칫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의 법과 현실은 아직 양성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

◆ 심각하게 파괴된 출생성비 ◆

고은광순(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모임 운영위원)

한국의 출생성비는 심각하게 파괴되었다(법이 결혼한 딸은 가족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법이 부계혈통만 인정하여 딸만 낳으면 대가 끊어진다는 생각을 부추기니 열 명의 딸을 낳을 수는 없고 그냥 죽이는 것이다. 대구의 초등학교 3학년-백발미의 구성은 여자 54명, 남자 111명이다.). 출생성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다. 여성을 '남성 혹은 남성 가문에 종속된 존재', '이차적 존재'로 정하는 모든 제도와 관습을 개혁해야 한다.

가부장제를 가능케 하는 법적 뒷받침은 바로 호주제와 부계성씨의 대물림이라고 보여진다. 유엔의 여성지위위원회에서 마련한 여성차별철폐조약 조항 중 한국이 유일하게 유보하고 있는 조항은 16조 사항 '여성의 성(姓)도 평등하게 가족의 성으로 선택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한국 정부는 유보를 풀지 않는 한 이 문제에 대하여 유엔으로부터 항상 추구를 당하는 궁색한 처지에 있다. 따라서 여성계는 부계성(父系姓)에 대한 '도전'에도 역시 더욱 단단하고 씩씩한 입장을 가지고 대중을 설득해야 할 것이며, 명절, 관혼상제의 남성중심문화가 양성평등문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생활문화화의 개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기고> 피의자에게 밥도 맘대로 못사줘

민주노총 서울본부 총무부장 정경화

4월 21일 저는 지하철노조 간부들을 면회하기 위해 중랑경찰서를 찾아왔습니다. 유치되어있는 간부들에게 사식을 넣어주기 위해 구내매점으로 갔는데 사식을 넣는 방법이나 가격등 기본적인 안내판 하나 없었습니다. 매점 아저씨에게 물어보니 유치되어 있는 사람이름만 얘기하고 돈만 주면 알아서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간식도 5천원, 만원 단위로 돈만 주면 알아서 이것저것 써서 넣어준다고 합니다. 영수증을 요구하니 그런 걸 왜 달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화를 버럭 냈습니다. 유치장은 조사과정을 위해 거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치소로 넘어가거나 풀려나는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대기하는 곳이지요. 사식을 넣거나 간식을 넣는 것에 대해 그것이 끝까지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사식이나 간식을 받는 당사자들에게 확인하려면 또다시 면회를 신청해야 하거나 시일이 지나 구치소로 찾아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확인을 하기가 어렵지요. 그런 점을 고려해 볼 때 비리가 생길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격·상품 선택권이 매점주인에게...

경찰의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벌이고 사람을 구금했다면 밥은 제공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경찰서에서 몇 번 밥을 먹어봤지만 보리밥에 단무지만 몇 쪽 나오는 관식이라는 게 전혀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군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식을 사서 넣어주고 있는 거지요. 저는 우선 관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치못해 사식을 사서 넣어주고 있는데 중랑경찰서에서와 같이 영수증 한 장 준비되어있지 않을 만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에 많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위 국가기관이라는 경찰서의 구내매점이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된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간식도 가격이나 상품의 선택권이 매점주인에게 있다는 것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사 주고 싶은 간식을, 내가 원하는 가격만큼 살 수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5천원, 만원 정해진 액수에 물건도 알아서 넣어줄 테니 돈만 내고 가라니요? 그리고는 그냥 믿어달라고 화만 내는 매점주인 아저씨를 보면서 더 믿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비리는 잘못된 구조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 나아가 정부를 믿으라고 하고 싶으면 믿을 수 있도록 일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요구합니다. 경찰서의 관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경찰서 내 사식을 공급하는 유통구조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간식의 선택권도 민원인에게 보장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중랑경찰서는 민원인을 위한 기본적인 안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통신 ID:rights(천,하) ·E-mail:rights@challian.net ·http://www.iworld.net/~rights

인권기구 문제, 범사회적 대응

70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로 결집

법무부 주도 아래 만들어진 '인권법안'을 철회시키고 올바른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민간단체들의 대응이 범사회적으로 전개된다.

2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민교협, 한국기자협회 등 70개 사회단체들은 종로성당에 모여, 지난 8개월 동안 30여개 단체가 활동을 전개해왔던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공추위)를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로 확대개편했다. 이날 확대개편된 공대위는 노동·여성·장애인·인권 등 기존의 공추위에 참여했던 사회운동 분야를 포함, 종교·언론·교육·환경·빈민·청년 등 각계를 망라함으로써 범사회적 기구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날 확대개편대회에서는 이돈명 변호사 등 민주화운동 원로 20명이 고문으로 추대됐고 6명의 상임공동대표, 8

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이 선출됐다. 한편, 공대위 확대개편대회에 이어 참석자 가운데 40여 명은 종로성당에서 명동성당까지 가두행진을 벌이고 시민들을 상대로 올바른 인권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선전했다.

정부가 마련한 인권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 계류중이다.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대화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불심검문에서 '전투경찰대설치법'(이하 전경설치법)이 근거법률로 제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근거로 불심검문을 벌여왔으나, 불법시비가 잇따르자 새로운 방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1999년 4월 30일(금)

제 135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 서준식

편집인 : 박래군

이에 따라 30일부터 이틀간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열리기로 예정된 홍익대학교 정문 앞에서는 29일 전투경찰들이 전경설치법에 근거한 검문조항을 들이대며 출입자들의 신원확인을 강요했다. 전경설치법 제2조는 "전투경찰순경은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설치법에 근거한 검문이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차병지 변호사는 "검문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등 많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일반국민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전투경찰설치법까지 들먹이는 경찰의 자세가 한심하다"고 말했다.

대간첩직전 수행과 치안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설치(전경설치법 제1조)되는 전투경찰대는 △대간첩직전 △경비임무수행을 위하여 검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의 검문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해야 하며, 검문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시행령 27조 2항) 한다.

'재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법원, 국가배상 판결

재소자가 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교도관이 이를 묵살하는 것은 재소자에 대한 부당한 권리침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지법 민사9단독(윤준 판사)은 장윤영(영등포교도소)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교도소측이 장 씨의 면담요구권을 묵살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는 장 씨에게 위자료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본지 98년 9월 8, 9일자 참조>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조직인선

1. 고문(20명)

강만길, 김관석, 김금수, 김동완, 김상근, 김승훈, 리영희, 박순경, 박용길, 박정기, 박형규, 서영훈, 유현석, 이돈명, 이소선, 이해동, 이효재, 조준희, 한상범, 한완상

2. 상임공동대표(6-8명)

최영도(민변) 신혜수(여성단체연합) 임기란(민가협) 배은심(유가협) 이재정(KNCC 인권위) 성유보(민연련) 미정

3. 공동집행위원장(8명)

곽노현(민교협) 박원순(참여연대) 최영애(성폭력상담소) 윤종현(민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정진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 박석운(노동인권회관) 최민(한국장애인연맹)

<인권하루소식> 99년 4월분 총목차(1339-1359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339	4/1	1	민주화운동 원로들 기자회견, "인권법안 다시 만들라"/<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경찰, 성남 일용노동자 사무실 난입 후 노조원에 칼 들이대
		2	민가협 총회보고, 3월 현재 양심수 206명/ <제네바소식> ③ 나토 공격에 대한 유럽 각계반응, "공습은 해결책 될 수 없어"
1340	4/2	1	불법사찰, 알고보니 검찰이 배후 - 87년 항쟁 구속전력 10년간 사찰 악몽/성남일용노동자도 사찰 시비, 조합원 촬영된 필름 입수/〈만화사랑방〉 의문사 유기족 혐의 사발식
		2	한총련 '결사의 자유' 보장 촉구, 전국연합 등 대책위원회 구성/교육개혁안, 공공성 훼손 우려 -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 논란/〈제네바소식> ④ 용병 - 살육의 배후, 민영안보기업
1341	4/3	1	체벌 법제화? 인권 후퇴! - 11개 사회단체, '법제화 저지운동' 나서/철도공안원, 노숙자 상습폭행 의혹 - 수원경찰서 등 검찰에 수사촉구
		2	<특별기고> 제주 4·3과 미국(김종민 제민일보 기자)
1342	4/7	1	북한찬양, 반국가활동 아니다 - 대전지법 "한총련 이적단체 혐의 무죄"/유가협, 국민회의 점거농성 - "인권법 철회·의문사 규명" 촉구
		2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 청소년인권실장 위헌 토론회 열려/주간인권호름(3월 29일-4월 4일)
		3	<인권시평> 인권상업주의와 당정의 인권법안(이경주 경북대 법대 교수)
1343	4/8	1	인권활동가 30여명 단식돌입, "인권법안 철회" 촉구...1주일간 명동성당에서/유가협 배은심 회장 등 5명 단식투쟁 돌입/민공경대위·청년진보당, "한총련 무죄 판결 환영"
		2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정유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1344	4/9	1	정부관료 '장애인 모독' 망언 - "세명기도 못하고 세금만 축낼 것"/한총련 헌법소원 움직임 - "탈퇴입력, 기본권 박탈 행위"/유가협 단식농성 중단/〈만화사랑방〉 만신창이 인권법안
		2	<제네바소식> ⑤ 달아오르는 인권 논의 - '인종주의 반대' 공감...발전권 시가차/국보법·노동권, 여전히 국제적 비난대상 - 국제민간단체들, 한국인권상황 거론
		3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1345	4/10	1	대법원도 '보안관찰 무당' 판결 - 최근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모두 승소/국제연세스티, 한국 인권법 우려·비판, "국제사회 지지 얻기 힘들듯"/경찰, 학원사찰 도중 대학생 치고 뺄소니
		2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인권활동가 단식농성중, 지지 발길 이어져/공안탄압 대책위, 정치사찰 중단 촉구
1346	4/13	1	"인권위, 국가기구로" - 변형 공청회, 각계인사 한 목소리/〈기자의 눈〉 넓기 힘든 검찰의 벽
		2	대학생 "3차 개입" 선언, 공공연맹 파업투쟁 연대키로/주간인권호름(4월 5일-4월 11일)
1347	4/14	1	대학교지 기획사 국보법 연행, 〈홍기회〉 사장 등 직원 7명 장안동 구금/"한국 인권법안, 나쁜 선례될 수도" - 유엔 전문가, 한국 상황에 우려 표명/서진청 회원 4명, 이적단체 구성 혐의 연행
		2	'희망의 빛' 발견한 인권활동가 단식농성 - 7일간 명동성당 농성 마치고 해단식 가져/서경원 씨,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형 의원 고소/〈새로나온 책〉 「인신구속과 인권」(황정근)
		3	18개 인권단체 활동가 34인이 7일간의 단식투쟁을 마치며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1348	4/15	1	"국보법 폐지론자라도 혐의중" -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대학가 불심검문 인권피해 제언, 한총련 대의원대회 발미로 홍익대 출입통제
		2	한총련 7기 정팔 이적단체인가? - "강령·규약 동일한 1-4기엔 이적규정 안했다"/현장사진 고의누락 - 김 중위 사건, 국방부 은폐의혹/〈자료〉 한총련 강령

〈인권하루소식〉 99년 4월분 총목차(1339-1359호)

호	월/일	면	기 사 제 목
1349	4/16	1	"정형근, 감히 인권을 팔아?" - 유엔인권위 참석 결정...인권단체, 분노·경악/〈만화사랑방〉 정형근
		2	노·농·빈 연대투쟁 결의, 재벌체제 및 정치권 개혁 촉구/〈인터뷰〉 양연수(전빈연 의장), 소희주(전농 총무부장), 정성희(민주노총 대의협력실장)/불심검문 취재기자 강제연행, 한총련 대의원대회 전날 경찰 불법행위 기승/"이적표현물 기준이 뭐니까?" 기획사 직원들 체포 이틀만에 석방
1350	4/17	1	'인권정부'? 실은 '폭력정부' - 불심검문 항의 대학생 무조건 연행/정형근 유엔참가 지지 행동 있따라, 고문피해자 방양균 씨 제네바행/지하철 사태, 정부가 초래 - 민변, '노동자와 교섭' 촉구
		2	〈제네바소식〉 ⑥ 코소보사태 결의안 통과 - '국익'에 밀린 '인권'/〈인터뷰〉 로라 조이스(남아공 대표) - "유고와 나토는 무력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1351	4/20	1	지하철 선봉, 공공연맹 총파업 - 노동시간 단축 등 요구...한국통신도 참여 예정/〈현장〉 명동성당 천막농성장 - "어떤 마음가짐이냐고요? 죽기 아니면 살기죠"
		2	경찰, '영남위 디스켓' 손댔다 - 재판부 증거능력 인정 여부 관심/주간인권호름(4월 12일-4월 18일)
1352	4/21	1	대우캐리어, 노동시간 단축 - 99년 입단협서 주 40시간 타결/레드 헌트 이적표현물 아니다 - 강릉법원, 대학생에 무죄선고/울산시민대책위 기자회견, "디스켓 증거채택 불가"
		2	〈인권시평〉 때도둑 이야기, 그리고 그 위상(채만수 한국노동정책이론연구소 부소장)
1353	4/22	1	"세상을 바꾸자" 투쟁 고조 - 과기노조, '과학의 날'에 총파업 합류/한라중공업 하청노동자 노숙농성, "1천3백여 노동자 생존권 위협" 주장
		2	〈파업노동자가 말한다〉 "우리 함께 살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목이 묶인다는데 발이야 잠시 묶어도..."(어느 시민의 글)
1354	4/23	1	검찰의 햇바다, 조선일보 - '지하철 파업' 왜곡편과 보도/전국 교수 83명 성명발표, "노동자총파업 지지"/〈만화사랑방〉 지하철 파업
		2	"빈민생존권 스스로 지킨다", 전국민연합 출범/대학생 3백명 단식농성, 명동성당에서 노숙/한총련, 복지권 받는 조지 아니다 - 황선 씨, 특수집입탈출협의 무죄/〈인터뷰〉 명동성당 농성 대학생
1355	4/24	1	현행 노동법, 파업권 원천봉쇄 -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 단체행동권 박탈/성직자 62명 "파업지지" - 국제연네스티 "파업권 보장" 촉구/경찰, 시민단체 활동가 폭행 - 군산미군기지 항의집회 도중/민청노회 징역 2-4년 구형,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혐의
		2	〈제네바소식〉 ⑦ 국가인권기구 논의 - 호주 인권위 대표 "정부 간섭" 비판/여야 의원, 인권법안 비판 - 인권법안 국회법사위 상정
1356	4/27	1	노동자들, 울분을 뒤로 한 채...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중단 선언
		2	대한변협, 법률구조사업 확대 - 소송비, 경우에 따라 변협이 부담/명예회복·진상규명 의견 표박 1년 - 정치권, '특별법 제정' 아직도 외면/주간인권호름(4월 19일-4월 25일)
1357	4/28	1	분신노동자에 방화현의 씨워, 조폐공사 감승희 노조위원장 구속/멈추지 않는 투쟁 예고 - 파업중단 노동자, 연행/〈기자의 눈〉 파업권을 '왕따'시키는 사회
		2	'이적규정', 속내는 '학생운동 말살' - 각 대학 학생회 간부 줄줄이 구속/충북여성노조, 경찰폭력 고소 - "파출소장이 폭력행사" 주장/대경연합 집행위원장 체포, 보안관찰 신고 불이행 이유/〈새로나온 책〉 『하원이 학생을 망친다』
1358	4/29	1	집시법 개악 초읽기, 집회금지 사유강화...5월 3일 본회의 상정/〈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조항/일본 인권운동가들, 한국 양심수 후원회 결성
		2	〈요약〉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기고〉 피의자에게 밥도 맘대로 못사줘(민주노총 서울본부 총무부장 정경화)
1359	4/30	1	인권기구 문제, 범사회적 대응 - 70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결집/안되니까 '전투경찰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재소자 면담요구권 인정 - 법원, 국가배상 판결
		2-3	99년 4월분(1339-1359호) 총목차

인권하루소식

99년 5월

(제1360호 - 제1379호)